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촌, 해양수산, 교육, 지역R&D를 중심으로-

2017. 10. 11

주관 : 충남연구원

주최 : 지역발전위원회

주요 아젠다별 지역균형발전정책 5차 워크숍

□ 개요

- 주 제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 농촌, 해양수산, 교육, 지역R&D를 중심으로
- 일 시 : '17. 10월 11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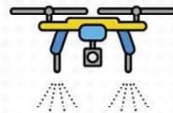
□ 프로그램

시간	내 용	구 분
15:00~15:10	인사말	충남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
15:10~15:30 (20 ')	주제 1.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농촌정책 위상과 방향	송미령 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30~15:50 (20 ')	주제 2.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협동 생활경제	박영범 이사장 (지역농업네트워크)
15:50~16:10 (20 ')	주제 3.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전략	최지연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6:10~16:30 (20 ')	주제 4.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발전전략	이희수 교수 (중앙대학교)
16:30~16:50 (20 ')	주제 5. 지역 R&D혁신체계 개선방안	김성진 교수 (호남대학교)
16:50~17:00	휴식	
17:00~17:50	좌장 :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지정토론 : 김정연 겸임교수(충남대) 이승우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진덕 선임연구위원(충북연구원) 정성훈 교수(강원대)	-
17:50~18:00	종합정리	강현수 원장 (충남연구원)

발제 1.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농촌정책 위상과 방향

송미령 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농촌정책 위상과 방향



송미령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례

1

지역 불균형 실태

2

변화 가능성과 도전

3

새정부 정책 아젠다와 농촌의 위상

4

농촌정책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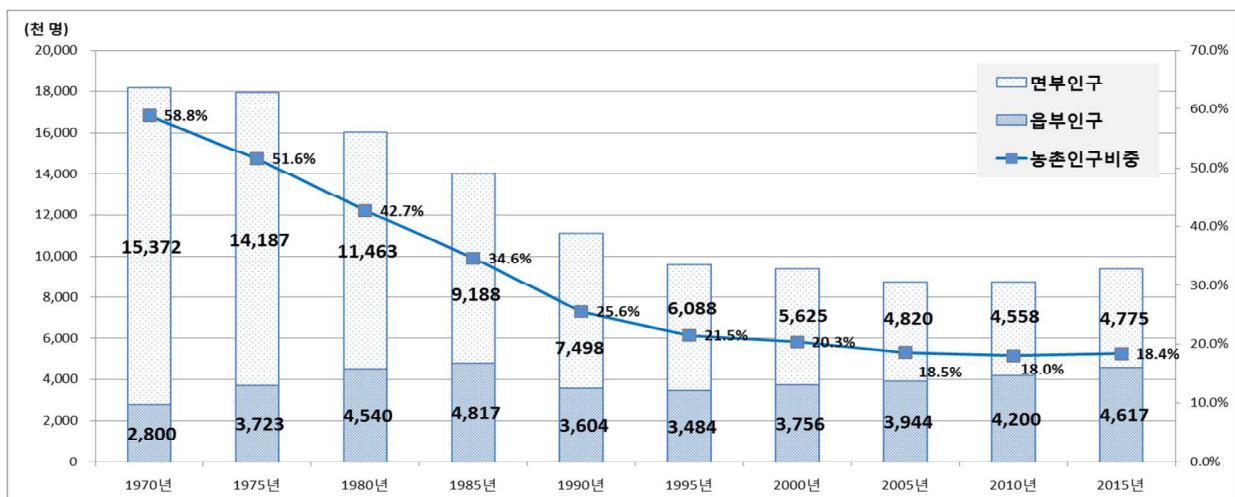
1. 지역 불균형 실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인구 변화 추이

- 농촌 인구 **증가세**로 반전(2015년 인구총조사)
 - 농촌인구 - 875만 8천명('10) → 939만 2천명('15), 63만 5천명 증가
 - 농촌인구 비중 - 18.0%('10) → 18.4%('15)

<농촌인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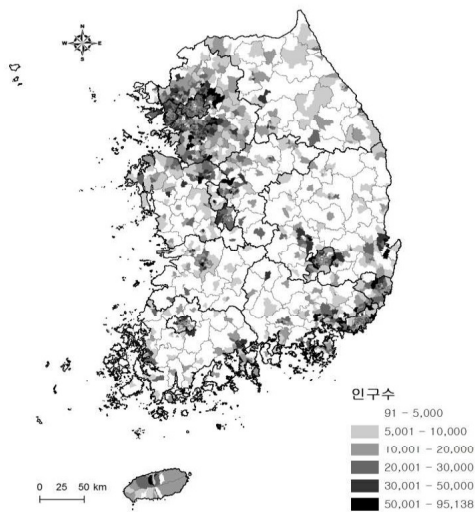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내국인, 외국인 포함)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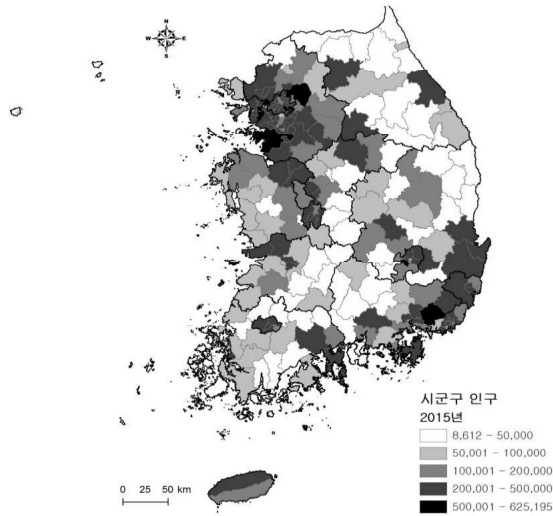
인구 불균형 심화 - 수도권, 도시 집중

15년 기준 총인구: 5,107만 명

비수도권 인구 비중: 50.51%



<2015년 읍면동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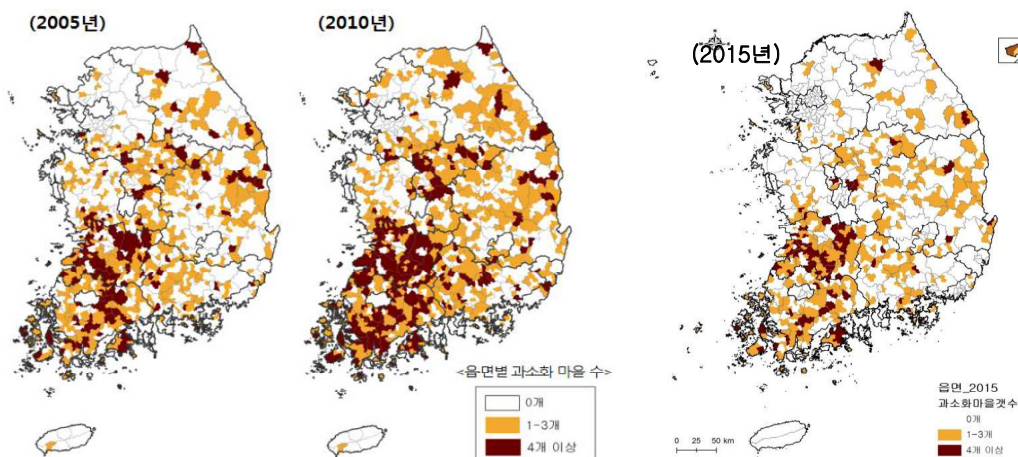
<2015년 시군구 인구분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과소화마을 변화 추이

과소화마을 감소 추세이나, 일부 지역의 고착화 문제

- ▶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은 '05년 2,048개(전체 마을 중 5.7%), '10년 3,091개(8.5%)
- ▶ 2015년 조사에서는 1,270개(전체 마을 중 3.5%)로 감소
- ▶ 전남북 지역 중심으로 과소화 마을은 고착화 경향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인구 희박지역 증가 전망

인구 희박지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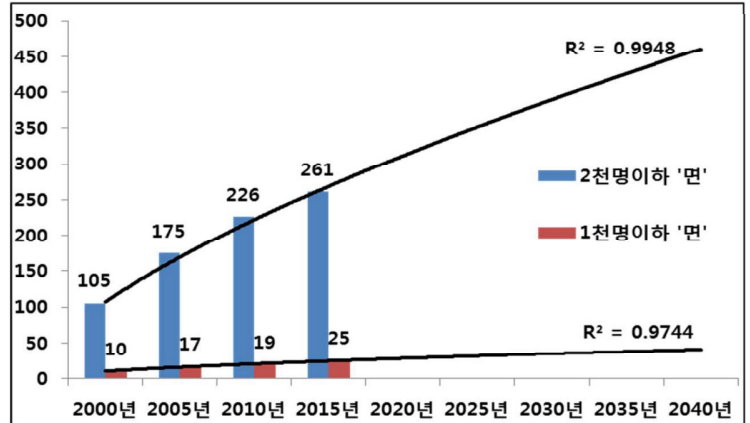
- ▶ 2040년 450개 면(2015년 기준 전체 면의 37.7%) 인구 2천명 이하로 전망

<2015년 기준 2,000명 이하 지역>



0 25 50 km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5

<인구 2,000명 이하 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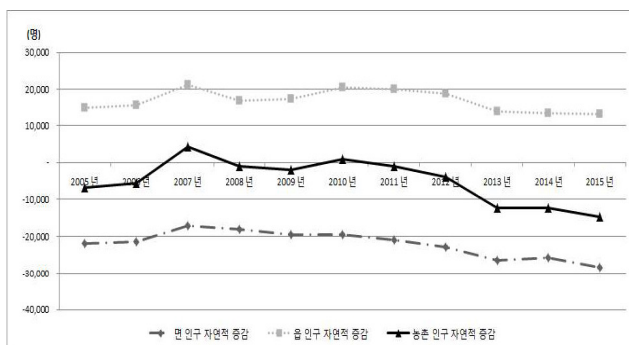
자료: 각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출장소 제외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인구 고령화 심화

- 귀농·귀촌 등 사회적 증가가 농촌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최근 10년 간 농촌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 사망)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농촌 인구의 증가는 도시(동)지역에서 농촌(읍,면)으로의 전입 인구 증가에 기인
- 인구 고령화 추세 지속
 - 고령화율 - 18.6%(‘05) → 21.4%(‘15), 평균연령 - 40.6세(‘05) → 44.8세(‘15)

<농촌 인구의 자연증감 실태>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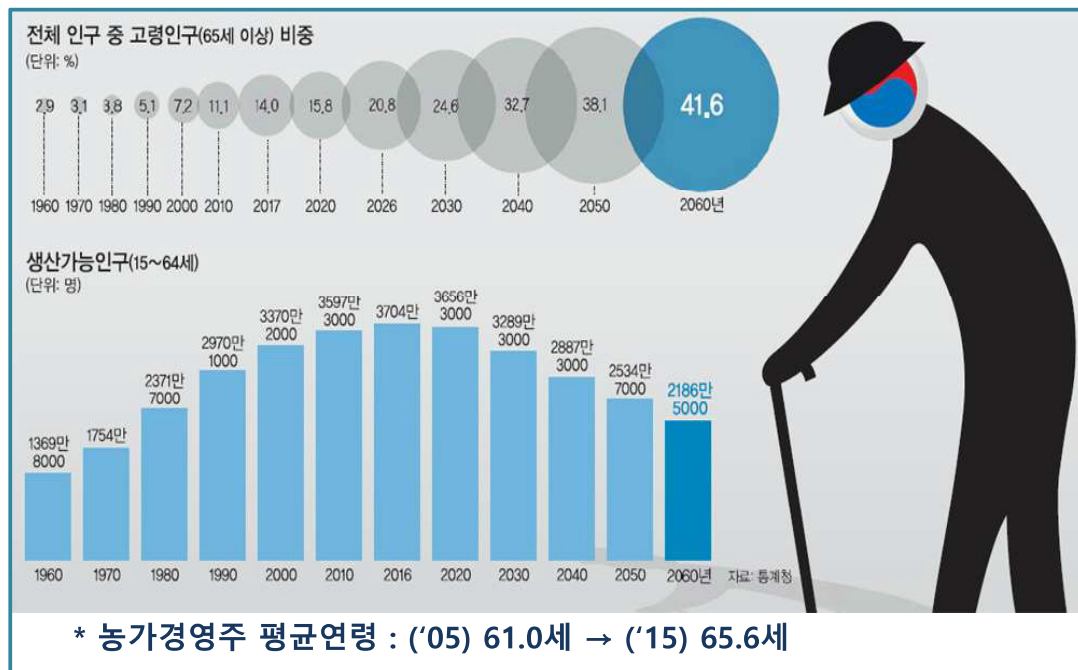
<농촌 인구의 주요지표>

구분	지역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평균연령 (세)	읍부	36.3	38.4	40.5
	면부	44.8	47.6	49.1
	농촌지역	40.6	43.0	44.8
고령화율 (%)	읍부	11.8	13.5	14.8
	면부	24.2	27.8	28.0
	농촌지역	18.6	20.9	21.4
유소년 비율 (%)	읍부	21.2	18.4	15.7
	면부	13.9	11.6	9.4
	농촌지역	17.2	14.9	14.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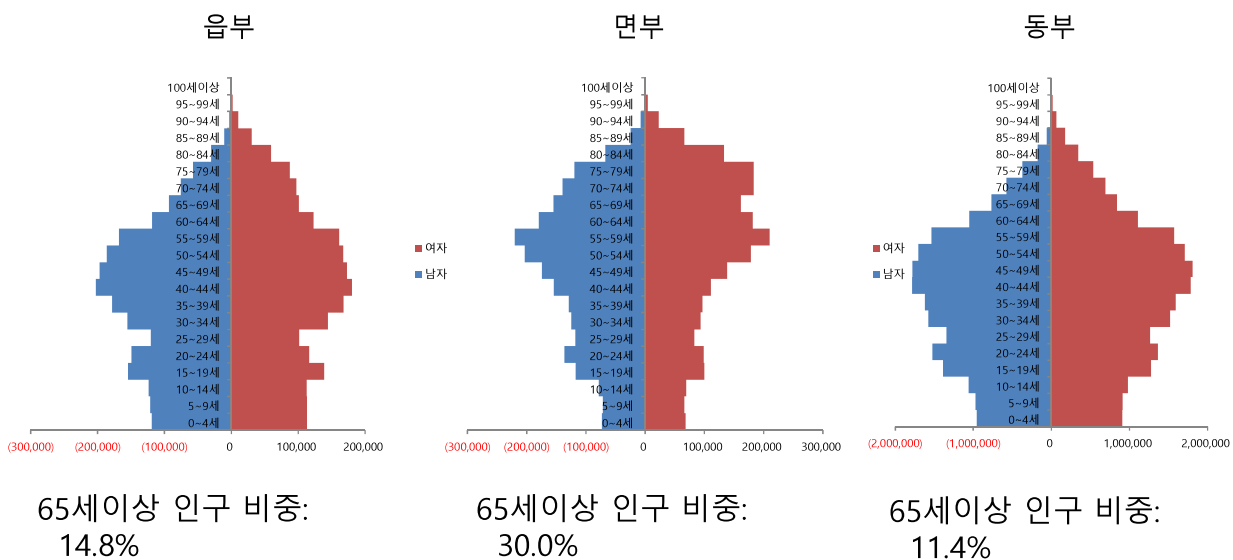
고령화는 결코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나,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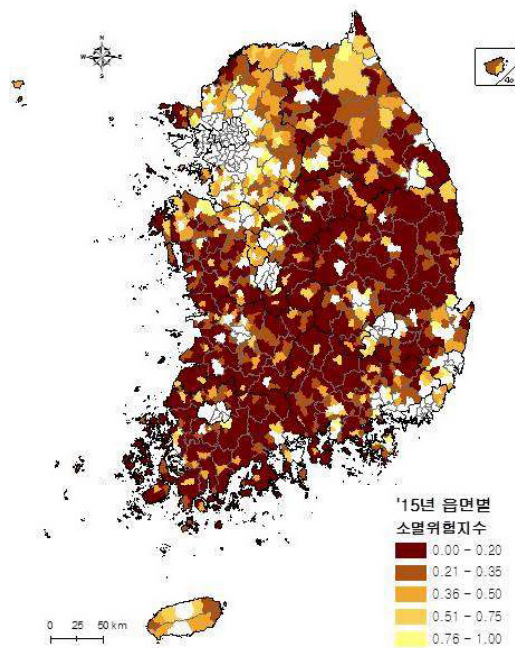
농촌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심각

● 농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문제 대두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인구소멸위험 실태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읍 지역 소멸위험지수: 0.81

면 지역 소멸위험지수: 0.30

동 지역 소멸위험지수: 1.24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의 가임여성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

1.0은 쇠퇴 시작 지역

0.5미만은 소멸위험 지역

0.2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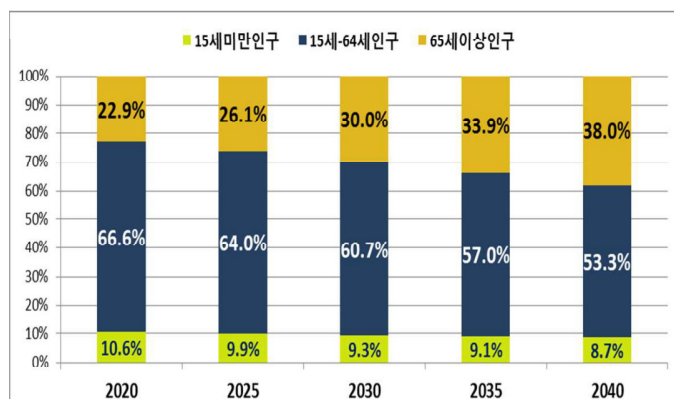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고령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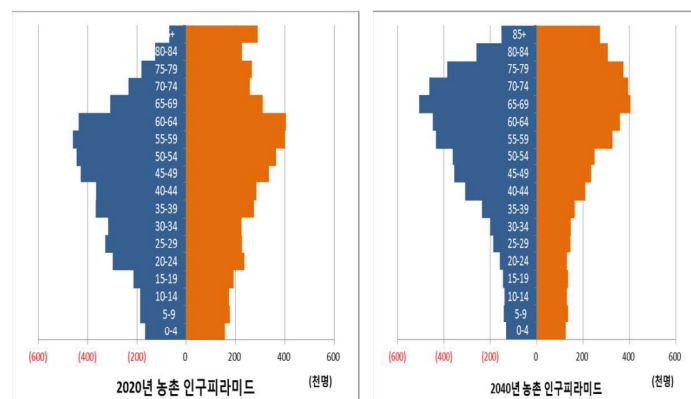
■ 농촌 고령화 지속 가능성

- 2040년 농촌 고령화율은 3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인구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
 -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인구 : 0.5명(2020) → 0.87명(2040)

<2040년까지 농촌인구 구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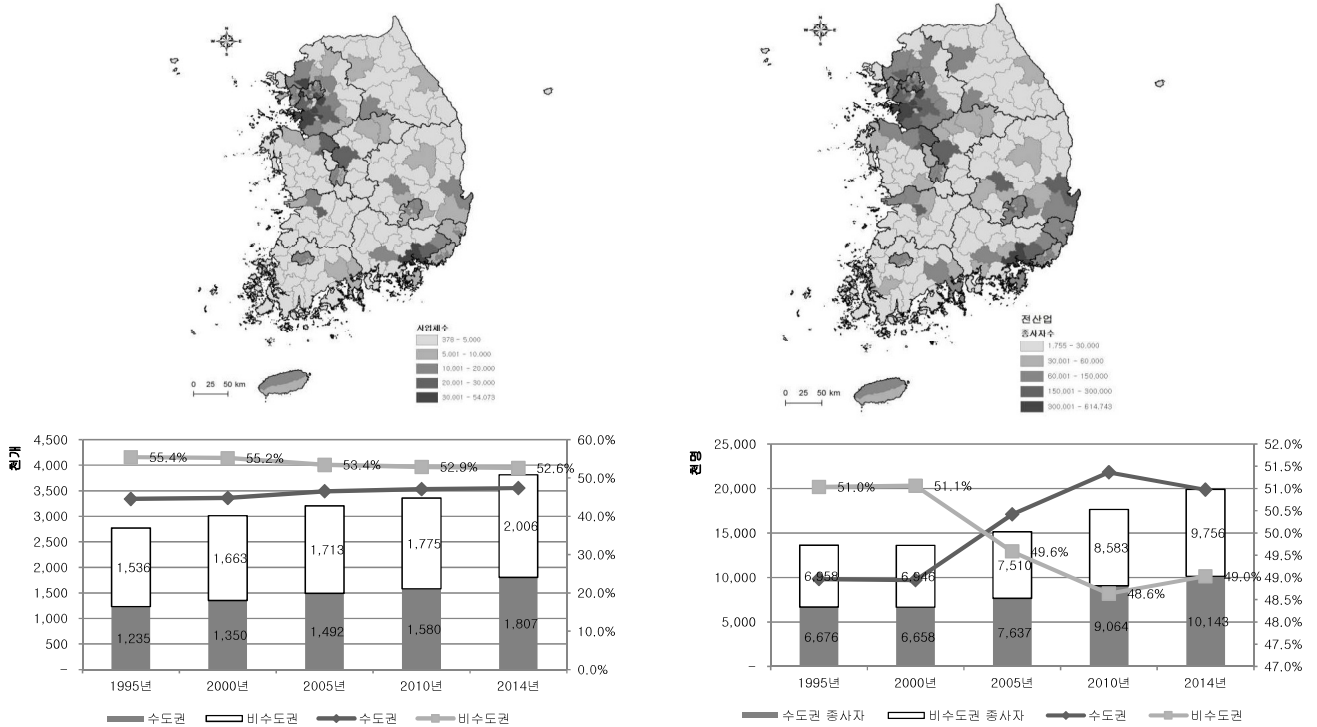


<농촌 인구 피라미드 변화 2020(좌), 2040(우)>



산업 및 일자리 불균형

- ▶ 비수도권 사업체수가 많고, 종사자수(일자리)는 적음(영세 소규모 기업 위주)
- ▶ 비수도권 산업 및 일자리는 대도시와 그 주변, 충청북부에 편중 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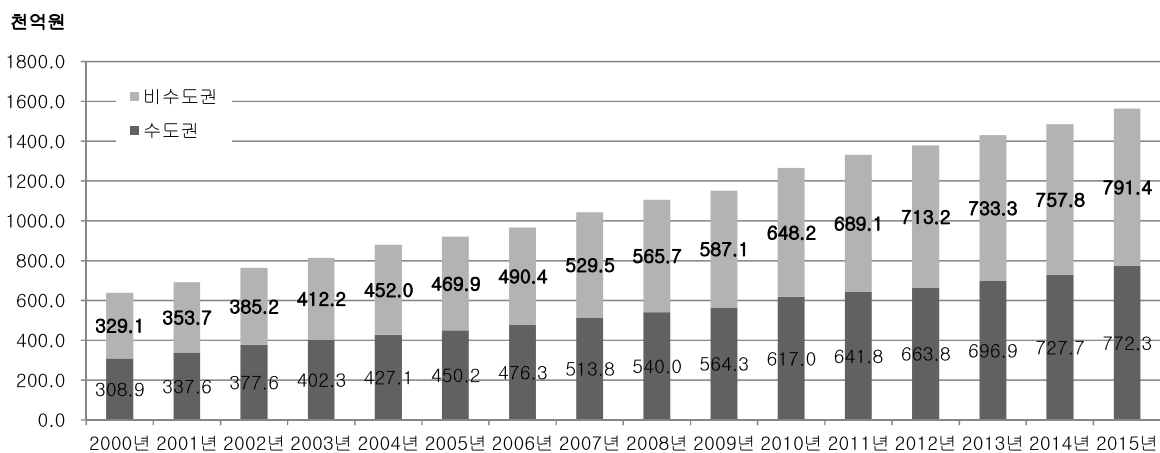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수도권의 높은 생산성

- ▶ '15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지역내총생산은 1.21%p 더 높음(약 1조 9천억 원 ↑)
- ▶ 비수도권은 일자리가 수도권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GRDP는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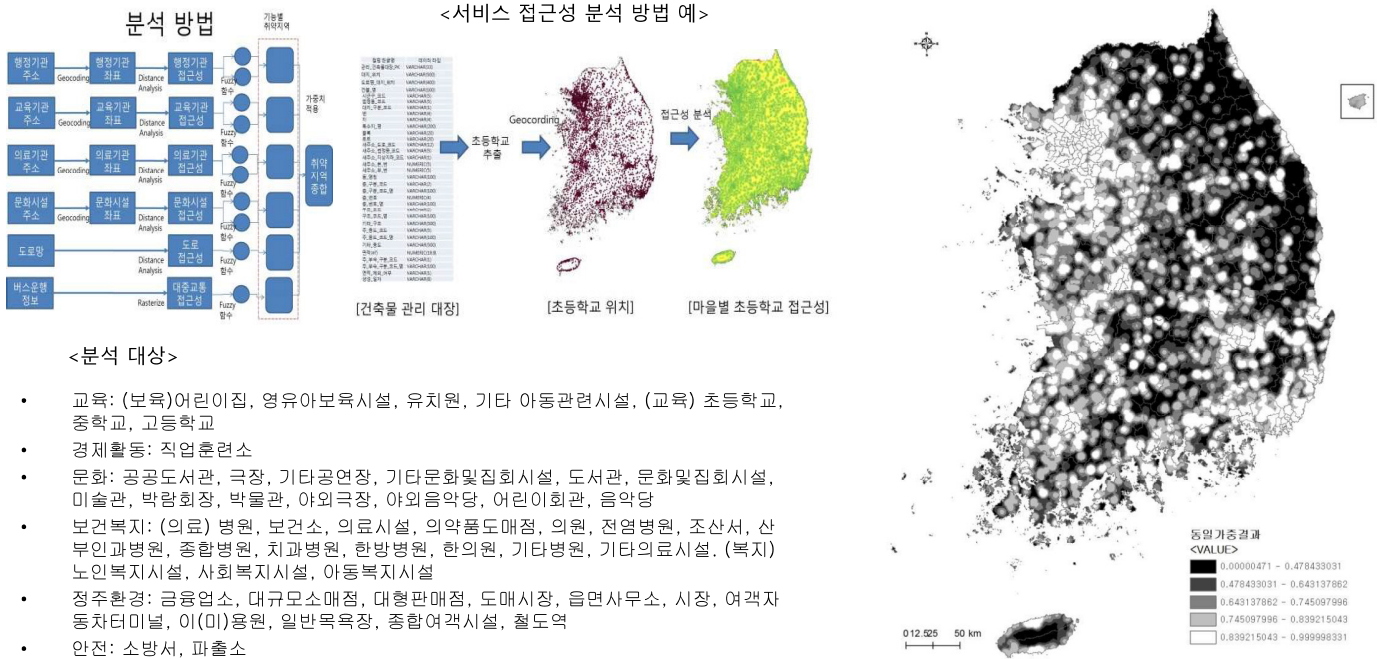
➡ OECD에서 말하는 New Rural Economy 증거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

▶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지역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접근성 낮음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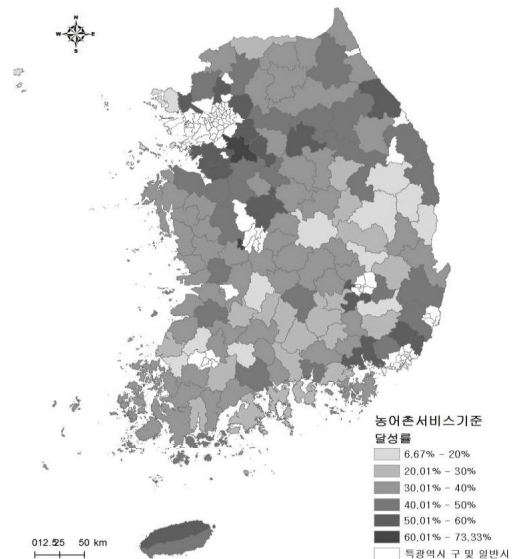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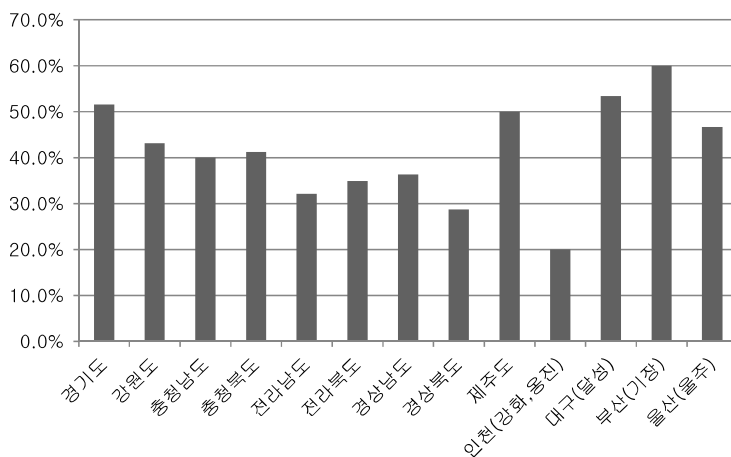
- 교육: (보육)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기타 아동관련시설,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경제활동: 직업훈련소
- 문화: 공공도서관, 극장, 기타공연장, 기타문화및집회시설, 도서관, 문화및집회시설, 미술관, 박물관, 박물관,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음악당
- 보건복지: (의료) 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의약품매점, 의원, 전염병원, 조산서, 산부인과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기타병원, 기타의료시설, (복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정주환경: 금융업소, 대규모소매점, 대형판매점, 도매시장, 읍면사무소, 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종합여객시설, 철도역
- 안전: 소방서, 파출소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낮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률

- ▶ 국가최소서비스항목인 농어촌서비스기준 2016년 시군 달성률은 **전국적으로 37.8%**
- ▶ 특히, 경북, 전남 지역에서 달성률이 낮은 편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주1) 17개 항목 중 2개 항목 자료 미비로 제외
주2) 15개 항목 중 시군별 달성비율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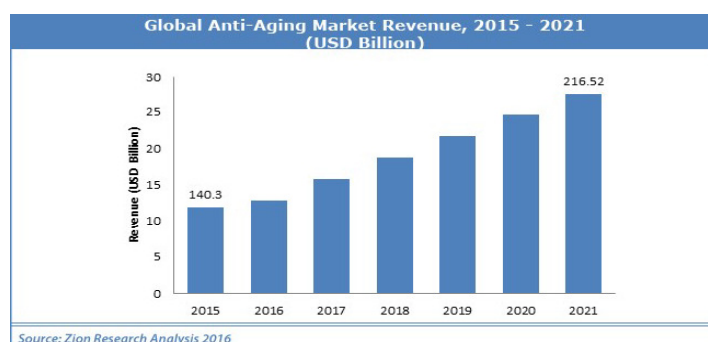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변화 가능성과 도전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러나...

- 전국적으로 확대된 젊은 귀농·귀촌인 증가
 - 40세 이하 귀촌인수: ('13) 21만4천 → ('14) 22만2천 → ('15) 24만 → ('16) 24만3천
-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새로운 농촌경제 등장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을 통한 거리의 소멸 혹은 축소 → 서비스 접근성의 극적인 변화 초래
- Aging is industry!
 - 고령화에서 창출되는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필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지방창생전략

마을·사람·일자리창생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 증가

- 일본은 08년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2060년 경 8,674만 명, 2110년은 4,286 만 명으로 감소 예상
- 1,727 개 시구정촌 가운데 896개가 소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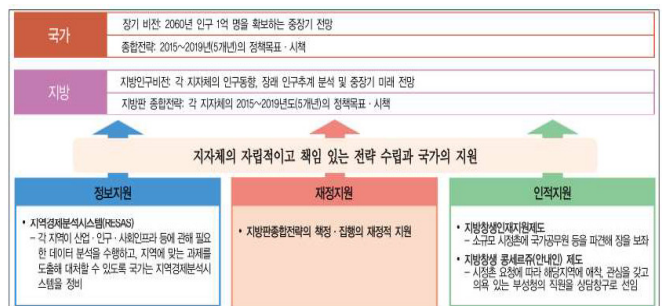
▶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하고 로컬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창생정책 도입

- 일본창생=지방창생이라는 정책현안 인식

▶ 지방창생법(2014)

-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도쿄권의 인구집중 방지, 지역의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사회 유지
-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의 설치·운영
-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국가계획, 지방계획)을 수립

정책 패키지	기본 목표(KPI)	주요 추진사항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을 창출 (젊은 층 고용창출, 여성취업률, 제임과국인 관광소비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확대)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 지방에 인재유입,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 지방이주 촉진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자방이주인구, 기업의 지방거점 및 고용지수, 지방대학 진학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OECD(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 추진 •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재정·취업 확대 • 지방대학 등 활성화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 (젊은 세대 취업률, 남성육아 휴업률, 첫째자녀 출산 후 여성재취업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OECD(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 추진 •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	4. 시·도에 맞는 지역개발 (작은기업수, 장수기업수, 창업률, 임직비율 계획 수립, 중소기업·리빙시장 규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기업(다세대주택, 다기능형 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향상 • 플랫폼화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경주자립권 형성 촉진 • 대도시권의 안심생활 기반 확보 •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프랑스,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

부처공동위원회(CIR)

▶ 농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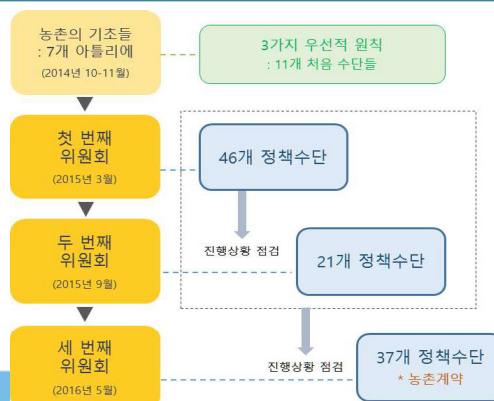
- 2014년 7차례의 아틀리에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15-16년, 3회) 개최

▶ 농촌을 위한 3가지 기본원칙

- 공공서비스 및 경제, 교육, 문화, 여가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각자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
-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역의 역량과 지역 대표자들의 역량을 강화
- 사회적 연결을 절단하고 지역들이 서로 간 반목하도록 만든 지역경쟁의 논리 넘어서기

▶ CIR의 목표: 농촌지역 국토의 매력도 향상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서비스 접근성 제고)

- 목표 1 :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타파
- 목표 2 : 새로운 농촌 지역들의 요구 사항에 대응
- 목표 3 : 농촌은 기회의 땅이며, 프랑스 발전에 있어 역할을 담당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새정부 정책 아젠다와 농촌의 위상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정부 정책 아젠다와 농촌의 위상

지역균형발전 논의와 농촌의 문제

- : 지역불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님
- : 비수도권내의 소지역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도 주목할 필요

도시재생 뉴딜과 농촌재생의 문제

- : 대한민국은 도시국가가 아님
- : 도시재생의 한 유형으로 농촌재생을 다루는 문제

산업정책의 하위 부문정책으로 자주 혼동되는 농촌정책

- : 농업정책 vs. 농촌정책
- : 농민 vs. 농촌주민 ...
- : 상대적으로 농촌의 미래 가치는 주목하지 못하는 문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정책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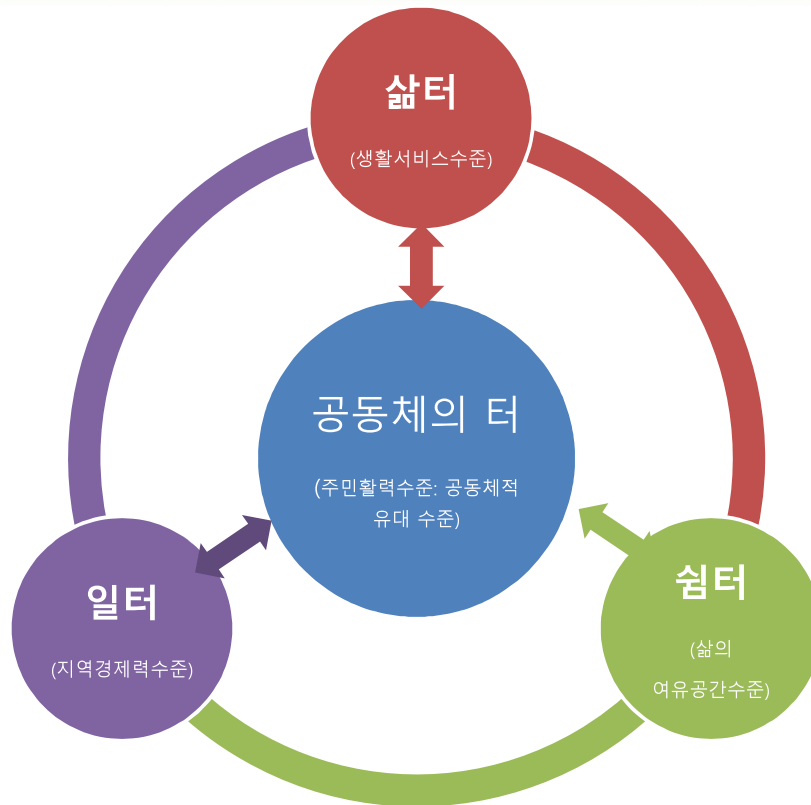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분	과 거	지 향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철학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성, 농촌다움(rurality) • 지속가능성
정책 범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제) • 복지 • 농업인(농촌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통합적 접근 (공간, 산업, 복지 등) • 농촌자원 • 전 국민
정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지역발전 모델 확산, 지원 체계 마련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H/W 사업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체질 강화, S/W사업, 지식·통계 기반 확충
사업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업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을 살리는 포트폴리오 방식
정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지표(인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표 포괄 (농촌다움, 지속가능성)
시스템/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향식(top-down) : 폐쇄적 분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bottom-up) : 개방적 네트워크 형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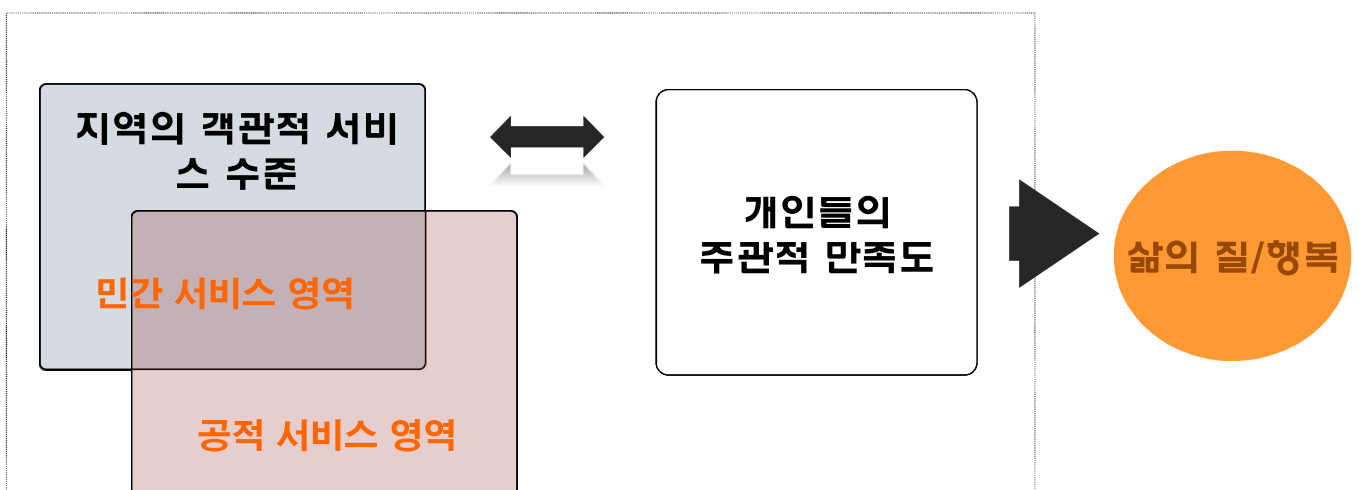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삶의 환경 제공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최저한의 여건 제공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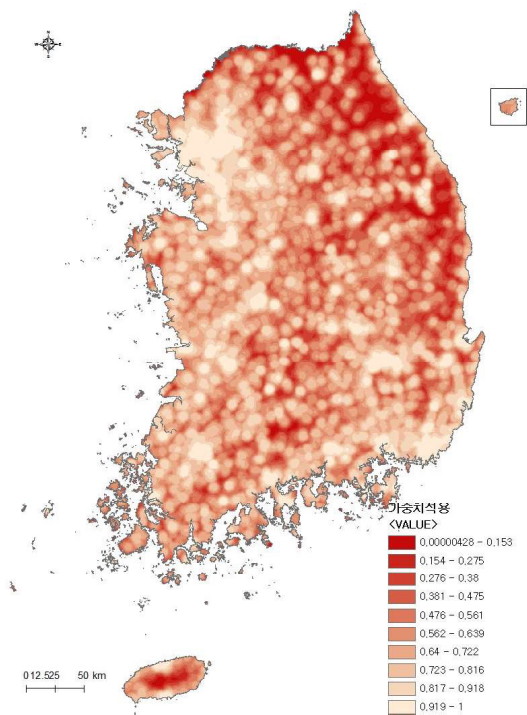
- : 독일 헌법, 삶의 질 수준의 등가치성 명문화
- : 이미 존재하는 삶의질향상특별법 정신 유지, 실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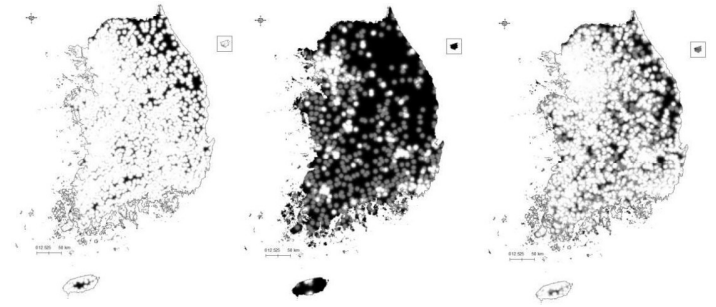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국민에 대한 등가치적 접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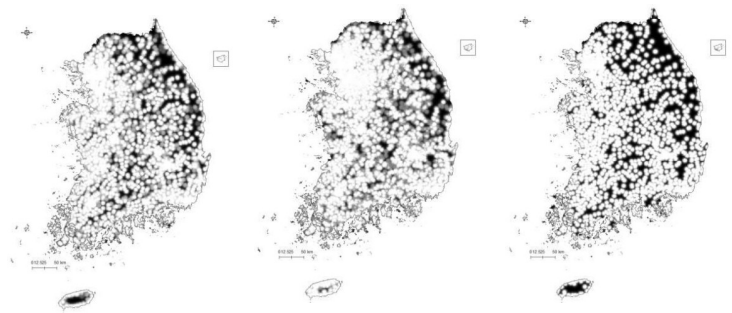
<공공·생활 서비스 접근성>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경제활동서비스 접근성> <생활기반서비스 접근성>



<교육서비스 접근성> <문화여가서비스 접근성> <생활안전서비스 접근성>



*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층별 건축물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해당 부분의 시설을 추출하여 공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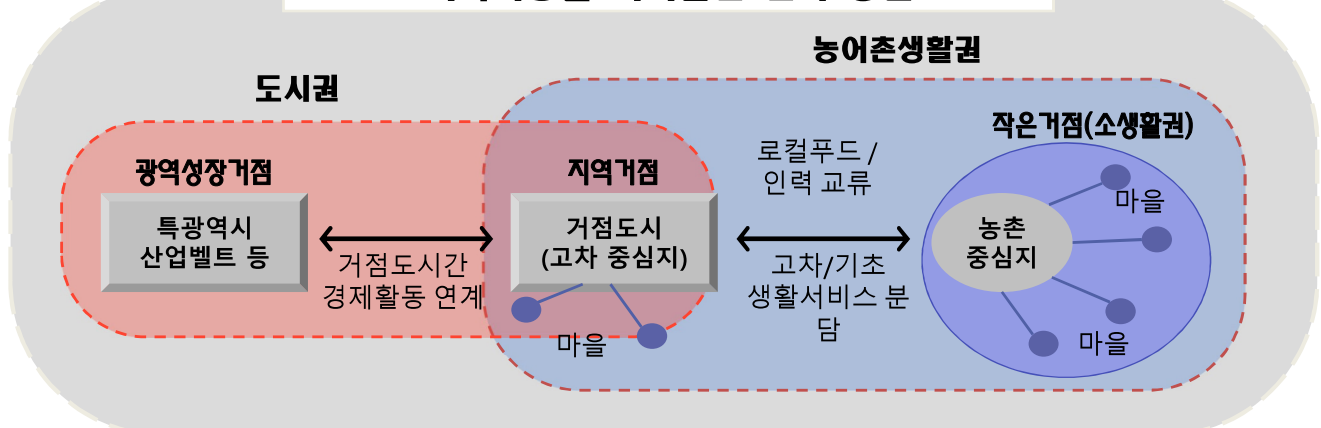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접근: 지역의 자립과 연대

마을부터 대도시 성장거점까지 사람, 서비스, 일자리의
자립과 연계협력

: 취약지역 개조-지역재생-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추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공간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사람-복지-일자리 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발전 추구

: **일본 지방소멸 대응**,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추구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가 출발

: 주민의 필요(needs)를 반영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출발

: 마을을 찾아다니는 **행복버스(농식품부)**, **백원택시**,
작은시리즈사업(전북도) 등이 주민의 호응을 얻는 이유

과소화, 고령화 상황이기에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조건

: **Aging is Industry!**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은 거점 만들기 (일본 사례)

- ▶ 도보권 내에 상점, 진료소, 공공시설 등 생활 서비스 시설 입지
- ▶ 거점지구와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제공
- ▶ 총무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여러 부처의 시책 연계
-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



작은 거점의 개념과 관련 지원 시책 사례



거점지역 상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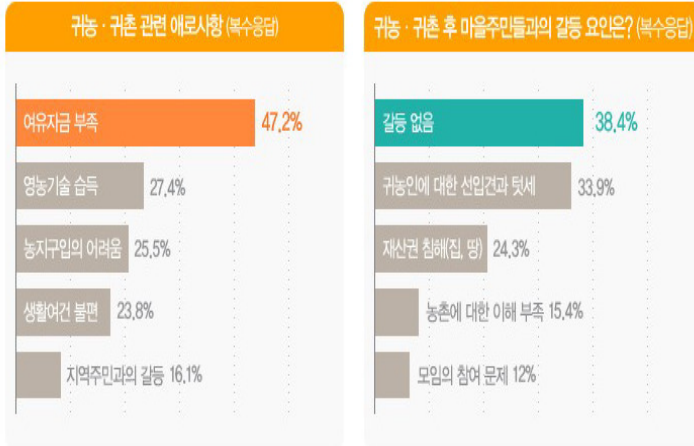
주민이 운영하는 지역 상점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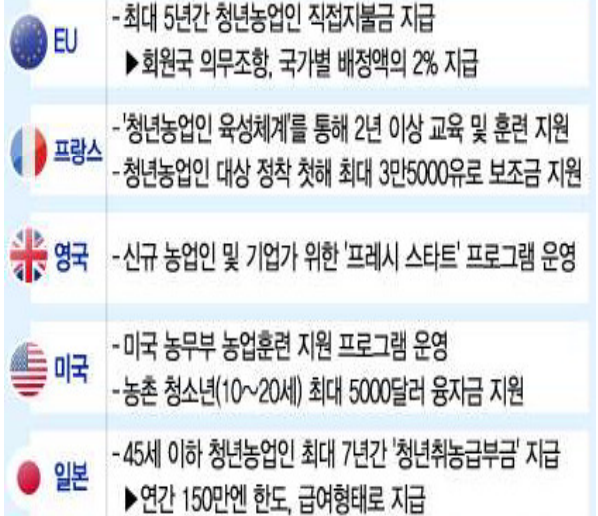
● 귀농·귀촌 촉진에서 나아가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기여 유도**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조사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

해외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정책 현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래픽: 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ging Industry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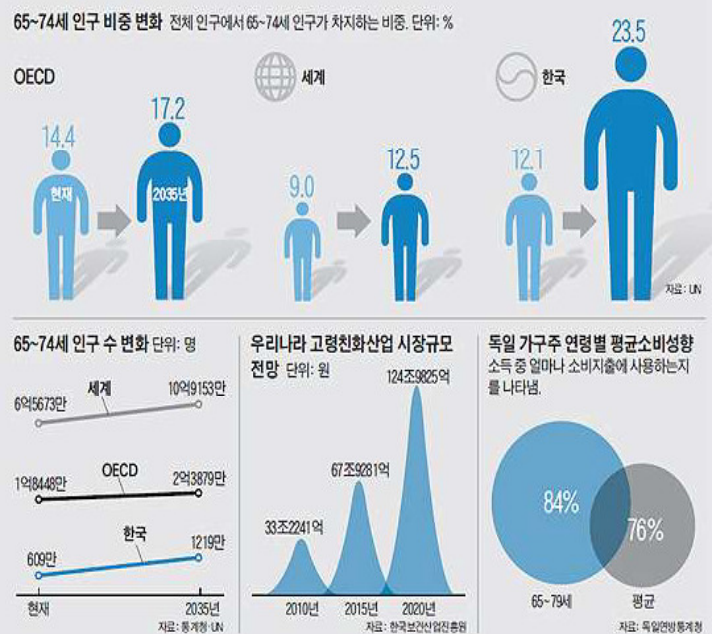
- 초고령사회,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긍정적 시각으로 새로운 전환
 - 초고령사회 = 장수사회 / 다문화사회 = 창의성과 개성 보유한 사회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년) (단위: %)



*주: 총계는 요양, 의료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정보, 의료, 교육 등 14개 부문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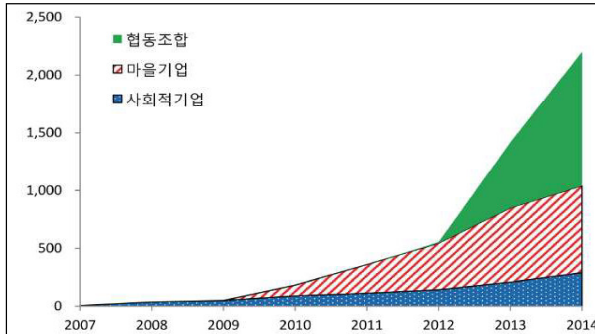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형 산업생태계 조성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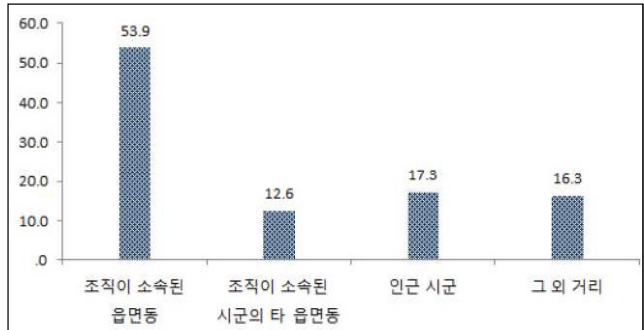
● 농업농촌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농업'도 주목

*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자료: 김정섭 외, 2015,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거래 네트워크



* 농업 경영체의 농업 생산 외 다각화 활동(6차산업) 관련 부가가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증가율 ('11→'13)
농업 생산 외 활동 참여 법인 수	4,497	5,678	6,938	54.3%
농업 생산 외 부가가치 추정(십억)	1,268.9	1,521.6	1,755.9	38.4%
농림업 전체 부가가치(십억)	26,721	27,359	27,376	2.5%

주: 농업 생산 외 활동은 농어업 법인조사의 가공·유통·음식·관광 활동으로 한정.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적 자원을 활용한 신 산업화와 일자리 문제 완화

- 청년, 귀농귀촌자 등 새로운 인구가 찾아오는 활력있는 농촌을 위해 정주여건 및 산업육성 패키지 지원
- 신활력사업 플러스
 - 주체 확대 육성, R&D 연계, 지역브랜드, 마케팅 등
- 구례 자연드림파크, 홍성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등 지역특화형 발전모델 확산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양한 혁신주체와 공동체

- 청년직불제, 공동생활홈 등 통해 청년, 귀농귀촌자 등 외부인력 정착 촉진
- 현장포럼 등으로 리더와 공동체 의식 함양, 공동체 활동 활성화
- 마을만들기센터, 6차산업센터 등을 비롯해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통해 협업 강화

농촌의 가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농촌정책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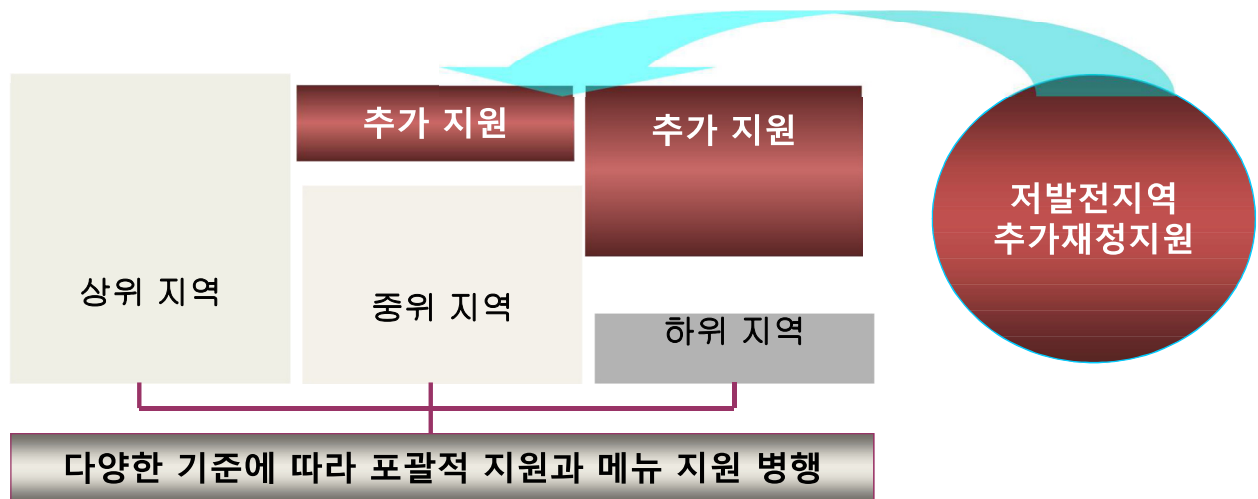
농촌은 도시의 잔여지가 아닌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농촌관광 확대 등 **농촌소비수요** 확대
: 풍부한 농촌의 유무형 자산 유지 및 활용

반드시 보전할 것은 보전, 농촌 특성 살릴 수 있는 정책
: 도시따라잡기 - **농촌다움(Rurality)유지**

농촌계획제도, 국가적 농촌유산공간 보전 프로그램, 마을생태 및 경관협정 프로그램 등 도입
: **일본 아름다운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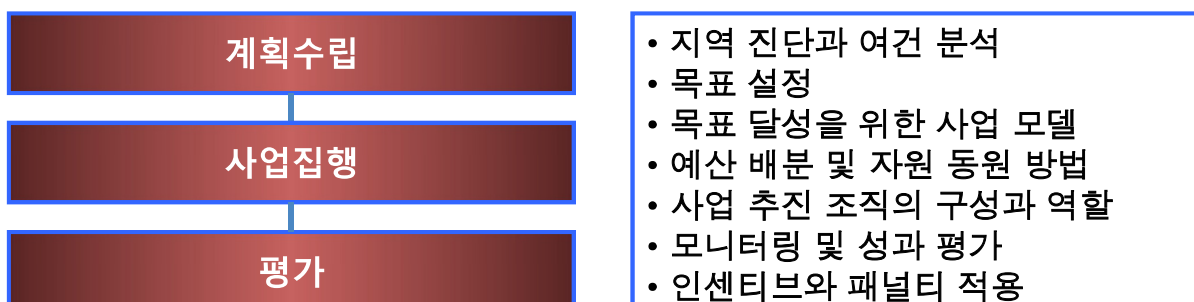
- 지특회계 손질방식 접근은 지양(정책의 지속성 중요),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지 기존 자원 우산씩우기 방식 곤란(균형발전 위한 자원임을 주목)
- 지역 유형별 차등 지원, '저발전지역'에 단위사업 아닌 추가적 재정지원
 - 정책군별 특별 배려 대상은 별도 '특수지역' 개념으로 접근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 자율적 특화발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출발

- 많은 시군 지역발전계획 수립
 - 현실과 맞지 않고, 재정과 연동 안된 구속력 없는 계획
- 단위사업 수만큼 많은 사업계획 난립
 - 종합계획, 사업계획간 연계 미흡하고 형식적 계획
- 주민이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통합적 **계획** 수립과 **실천**
 - **지방 자율성과 책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마다의 특화발전 실현 기반 구축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로운 정책모델 지향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삶의질향상 위원회

- 농어촌과 도시 지역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
- 현재 제3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15-'19) 추진 중이며 18개 정부 부처 및 청이 참여
-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기 도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역발전위원회

-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국가이념으로 실현하고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
- 다양한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참여
- 지역균형발전 달성 위해 기획, 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광범위한 기능 수행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본 준수하되 현장에 충실,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사합니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제 2.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협동생활경제

박영범 이사장
(지역농업네트워크)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협동생활경제



Contents

- I 거대한 전환기, 새정부 농정공약
- II 중앙-지방 투트랙 균형발전 전략



Q. 거대한 전환, 패러다임 전환



문명의 전환 (3차 산업혁명, 제러미 리프킨)

문명의 성격은 에너지 체계가 결정

1차,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태양열, 지열, 풍력)
이기적인 자아	생태학적 자아
근면	공감

또 하나의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체제

1차,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인쇄, 전화, 라디오, TV	인터넷
수직적 권력	수평적 권력, 협업
중앙집권화된 에너지 관리	분산 에너지 체계

한계비용 제로 사회

공적자본, 시장자본, 사회적자본을 활용, 3차 산업혁명 경제와 **탄소 후 시대로 이행**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도입, **한계비용 제로** 수준 사회로의 전환

극단적 생산성	자본주의의 적, 한계비용 제로
사물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 인터넷
협력적 공유사회	생물권, 프로슈머, 협업, 공감
스마트 인프라	새로운 스마트 경제, 분산에너지

Q 프로슈머 : 3D 프린팅 제품과 에너지를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생산,공유

Q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 결합 : **슈퍼 사물인터넷 플랫폼 창출**

- 경제적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신경 네트워크로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을 연결
- 빅데이터를 생성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에너지 인터넷, 물류 및 운송 인터넷에 공급
-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분산형 및 피어투피어 성격**
- 전 세계적인 **협력적 공유사회**, **수평적 경제** 확립
- 경제적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로 넘어가고 **경제생활이 민주화**

RAI-ET 지역농업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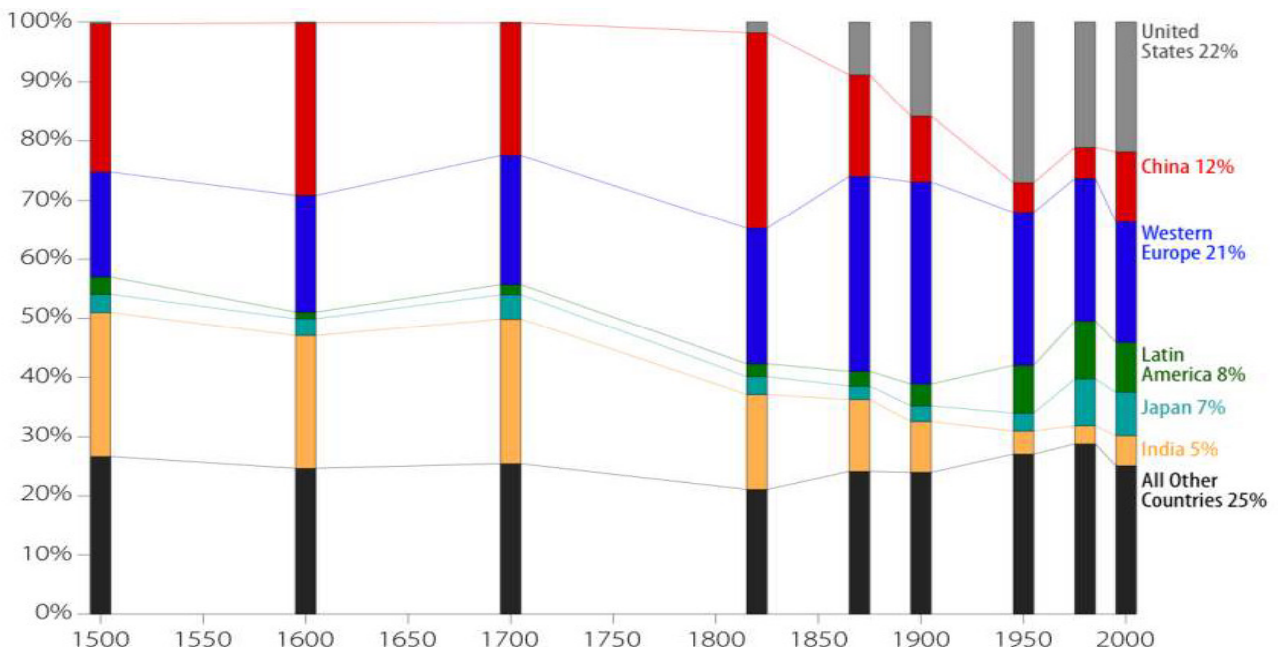
세계경제의 주도권 변화

Visualizing Economics
Making the Invisible Hand Visible

Visit www.visualizingeconomics.com
to view more examples

Percentage of World GDP (last 500 years)

China, India, Japan, Latin America, Western Europe, and United States



RAI-ET 지역농업네트워크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경제포럼



2008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10대 메시지

- ① 힘의 이동 : 동쪽, 신흥국, 개인(소비자)
- ② 불확실성
- ③ Reverse-Coupling : 신흥국성장 의존
- ④ 3대펀드 중앙은행 위협 : 국부·헤지·사모펀드
- ⑤ 달러 시대 종말
- ⑥ 새로운 리스크 관리모델 : 글로벌 공조체계
- ⑦ 협력(Collaboration)과 혁신(Innovation)
- ⑧ 창조적 자본주의로 사회공헌
- ⑨ 물 문제
- ⑩ 협력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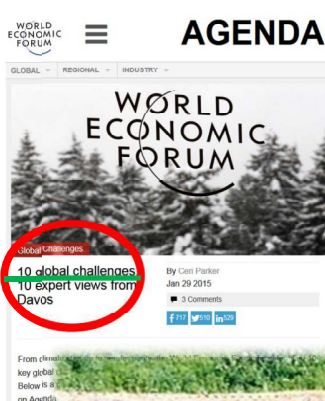
세계사회포럼



IMF의 폭탄선언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경제] 2011년 04월 25일(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은 5년 뒤 중국에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같은 기간 세계 GDP 가운데 중국이 18%, 미국이 17.7%

2011년 미국 연방 정부 신용 등급 강등 [위키백과]
2011년 8월 5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국채)**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더블A플러스(AA+)로 강등.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달러패권에 금이 가는 상징적 사건

3대 아젠다 : 에너지, 물, 식량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How to help smallholder farmers feed the world. To sustain a population of 9 billion people by 2050, we'll need to produce 60% more food. We can only do this if small farms flourish, writes Gerda Verburg, Chair of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Also: The CEOs of Nestlé, Technoserve, Walmart and Yara, as well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Food Programme on financing the fight against hunger.

Environment and resource security

"From all corners I heard increased commitment to action on climate change." The UN's Christiana Figueres draws four conclusions from Davos.

Also: Nobel Laureate scientists on the



저성장,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
한국 잠재성장률

3.8%

2010~
2015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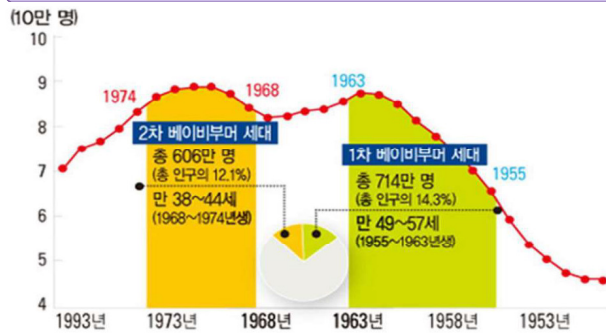
2016~
2026년

자료 :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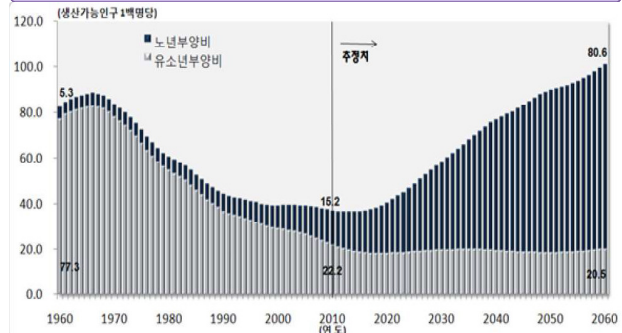
닛케이평균주가와 일본 6대 도시 땅값



한국의 1차, 2차 베이비부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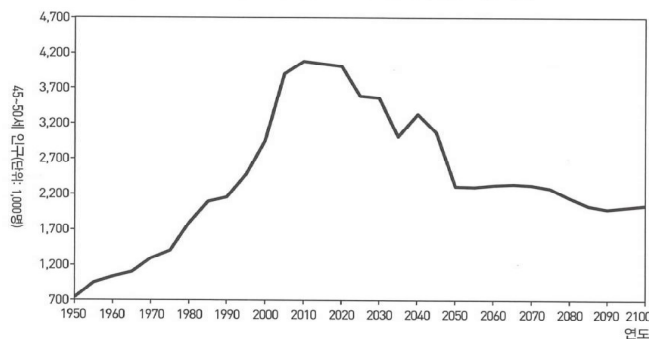


9

RAI-ET 지역농업네트워크

인구, 소비 절벽 (해리덴트, 2018 인구절벽이 온다)

|| 도표 1-14 || 1950년~2100년 한국의 소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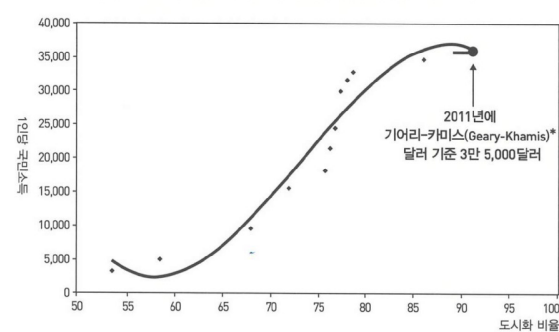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4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에서 3만 2,000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생활수준이 다섯 배 이상 높아졌다는 의미다. 도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1980년대 초부터 30년도 안 되는 더 짧은 기간 동안 똑같이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국민의 부와 도시화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루는 데 영국은 200년, 미국은 130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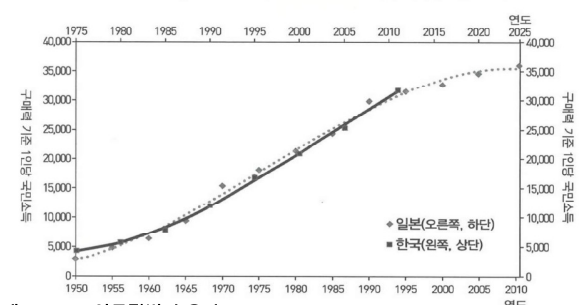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5년 시차를 두고 일본과 비슷한 S자형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의 인구구조 정점은 일본보다 22년 늦게 도래해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 흐름 정점이 일본보다 22년 늦은 2018년 무렵에 찾아온다. 하지만 유엔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매 5년마다 이뤄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표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25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늦게 출현한 데 따른 인구구조적 영향력이 뚜렷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출현과 경제 발전 사이에도 놀랄 만한 상관관계가 있다.

자료 : 해리 덴트, 2018 인구절벽이 온다

|| 도표 2-3 || 일본의 도시화 비율 대비 1인당 국민소득



|| 도표 2-4 || 25년 시차를 둔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10

RAI-ET 지역농업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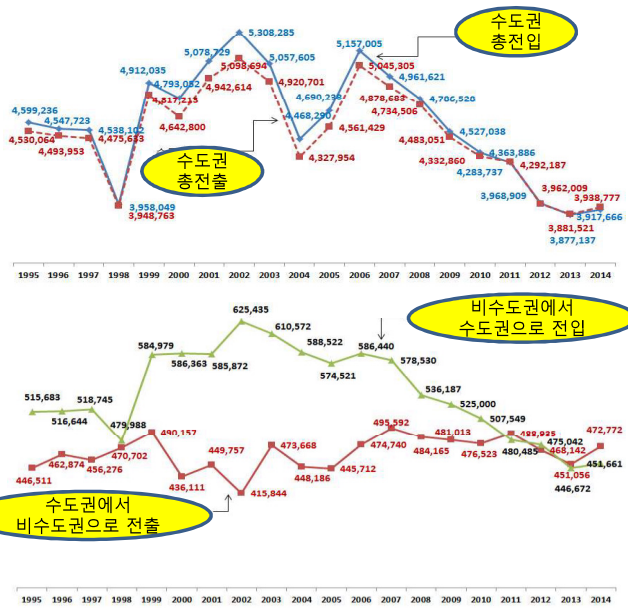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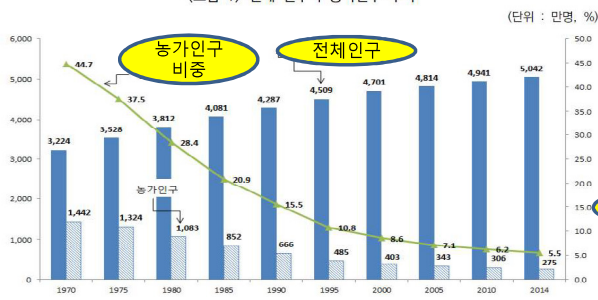
탈도시 인구이동 (김한중, 도시와 농촌간 인구이동 현황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2015.12)

인구 증가율 감소,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의 은퇴, 인구구조 변화, 도시화 정체
지역간 인구이동패턴 변화, 귀농·귀촌,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

〈표 1〉 도시와 농촌인구 추이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2014	
도시	인구	1,295	1,677	2,143	2,644	3,231	3,504	3,747	3,851	4,040	4,126	-
	비중	40.2	48.4	56.2	65.4	74.4	78.6	78.8	80.0	83.2	81.6	-
농촌	인구	1,851	1,791	1,600	1,401	1,110	956	1,006	876	876	930	-
	비중	57.4	51.6	42.0	34.6	25.6	21.5	21.2	18.2	18.0	18.4	-
합계	인구	3,224	3,468	3,812	4,045	4,341	4,455	4,753	4,814	4,858	5,056	5,042
	비중	97.6	100.0	98.2	100.0	100.0	100.0	98.2	101.2	100.0	-	-

〈그림 1〉 전체 인가와 농가인구 추이



11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귀농귀촌

귀농어·귀촌 가구(가구원) 현황



귀농어·귀촌 가구주 특성 (단위: %)



12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조직적 귀향귀촌귀농

더불어 함께 하는 귀향·귀촌·귀농

- 향후 10년간 50만 가구, 100만명 농촌정착 -

베이비부머와 청장년의
귀향·귀촌·귀농 지원

협동의 지역경제와
공생의 도농관계 구축

민관 협력체계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생생 상담

- 기본·전문 상담
- 전문가·지역 맞춤상담
- 주거·일자리·생활 지원
- 재무·자산 컨설팅

생생 교육

-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 단계별 맞춤 교육
- 기초·심화·현장 교육
-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생생 사업

- 지자체 협력사업
- 기관·단체·기업 협력
- 공동체사업 육성
- 도농교류사업 지원

생생 연구

- 귀향·귀촌·귀농 정책 개발
- 기관·단체·기업 컨설팅
- 중간지원조직 컨설팅
- 자원조사·지원제도 설계

13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조직적 귀향귀촌귀농

사전 서비스

- 상담
- 교육
- 재무컨설팅
- 정보제공
- 금융지원

- 자원조사
- 지원계획
- 지원조직 육성
- 홍보방안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주거지원 방안
- 일자리창출 방안



조합원

지자체 기관 단체 기업 연 론

사후 서비스

- 주거지원
- 일자리 지원
- 재무 컨설팅
- W턴 지원
- 사업 지원

- 홍보, 캠페인
- 지원기관 육성
- 기관, 단체, 기업 협력
- 공동체사업 육성
- 일자리 창출
- 주거단지 개발
- 도농교류 사업

14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도야마시 사례 (자료 : 도야마시)

- 〈도야마 시의 과제〉
- ①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사회 ② 과도한 자동차 의존으로 대중교통 쇠퇴
 - ③ 중심시가지 매력 상실 ④ 비교적 높은 도시관리 행정코스트 ⑤ CO2 배출량 증대
 - ⑥ '시정촌' 합병으로 유사한 공동시설 ⑦ 사회자본의 적절한 유지 관리

コンパクトシティを実現する 富山市の都市整備事業



コンパクト한 도시·대중교통 활성화

중심도시·도시 만들기

도야마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사회, 과도한 자동차 의존으로 대중교통 쇠퇴, 중심시가지 매력 상실, 비교적 높은 도시관리 행정코스트, CO2 배출량 증대, '시정촌' 합병으로 유사한 공동시설, 사회자본의 적절한 유지 관리가 과제이다.

시정촌 통합

도야마시는 2010년 10월 23일(목)에 시정촌 통합을 실시하였다. 이는 도야마시와 10개의 정(町)과 1개의 촌(村)을 통합하여 도야마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도야마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업 도시 (농업 분야)

지바문야 총 본점



지바문야 총 본점: 도야마시 도야마구 시나리 2-1-1. 지바문야는 도야마시의 대표 농산물 유통 업체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바문야는 도야마시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도시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도야마 토레타테 네트워크 사업 조직



환경 모델 도시·친환경 정책

CO2감축에 도전하는

환경 모델 도시

도야마시는 2010년 10월 23일(목)에 시정촌 통합을 실시하였다. 이는 도야마시와 10개의 정(町)과 1개의 촌(村)을 통합하여 도야마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도야마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환기, 새정부 농정공약



더불어 성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17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새정부 농정공약

나라를 나라롭게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

문재인의 농정정책

- 1편. 농민의 꿈
- 2편. 국가농정,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3편. 협치농정, 자치농정 실현하겠습니다
- 4편.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5편.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 6편. 여성 농어업인 위상제고와 미래인력 확보
- 7편. 사람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 8편. 일자리 늘리고 미래농업 대비하겠습니다
- 9편. 수산업을 살리고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 10편. 뿌리와 열매


돈 보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국가가 뒷받침하는 농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18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의
생생지각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1편 농민의 꿈

300만 농민의 꿈은 무엇입니까?
 마음 편히 농사 짓고 땀 흘린 만큼 돌려받는 것!
 이경해, 백남기 농민 열사의 꿈이고 절실한 요구입니다.

농민은 숨은 공로자입니다
 산업화에 필요한 사람과 땅을 내주었습니다.
 국민1인당 107평 작은 땅에서 먹거리를 책임졌습니다.
 물가안정이란 미명하에 낮은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농정, 완전 실패작입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입니다.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오르지 않는 농가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농업소득, 초동방역 실패한 구제역과 AI,
 무엇보다 농지와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을 확대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1. 농정 철학과 기초를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2.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3. 농어촌 지역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제2편 국가농정,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 경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농정 철학과 기초부터 바꾸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나라
 농업의 무한한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포용하는 나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라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진국처럼 직불제를 중심에 놓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절박한 과제입니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세우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국가뉴딜을 집중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19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의
생생지각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3편 협치농정, 자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에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농정으로는 복잡한 농업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폐지한
 협치기구 부활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함께 종합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통일농업 대비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아내겠습니다.

제4편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농어민의 큰 걱정은 가격과 판로입니다. 농어민에게 쌀값의 폭락은 재난입니다. 자연재해와 작업 중 부상도 걱정입니다.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물가인상을 반영하겠습니다.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 대북, 해외지원 하겠습니다.

가격과 판로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판매사업 잘하는 협동조합 길러내겠습니다.
 품목별 광역-전국 조직 육성하겠습니다.
 마케팅보드로 자율수급조절 지원하겠습니다.
 농촌농협과 도시생협의 협동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 농어민산재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업산재보험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20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5편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먹거리의 77%를 수입해 먹는 나라. 전 세계 산해진미가 넘쳐나지만 먹거리 안전이 가장 취약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장관공약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 해소하겠습니다
생태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방역행정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학교 과일급식으로 과수농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농산물로 군대급식 질 향상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취약계층 공공급식 늘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 도입하겠습니다.

제6편 **여성농어업인 위상제고와 미래인력 확보**

농촌 여성의 권리와 복지가 미흡합니다.
시골에 농사를 지을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시청년과 5060 세대가 농어촌에서 새희망을 찾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장관공약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여성 농어업인 복지 늘리겠습니다
공동경영주제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업과 가사 복지지원 늘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책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하겠습니다
40세미만 경영주가 1.4%에 불과합니다.
40세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하겠습니다.


귀농귀촌과 인생이모작 지원하겠습니다
5060세대 인생이모작 응원합니다.
2030세대 청년 귀농귀촌 강화하겠습니다.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농지 공급하겠습니다.
농고 농대 교육제도 개편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21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7편 **사람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농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안들리고 지역에는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초복지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이 농어촌을 떠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장관공약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보건교육, 교통주거 복지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100원택시로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확대하겠습니다.

보건 의료 공공서비스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하겠습니다.
거점 분만지원센터 설치하겠습니다.
방문 보건의로 서비스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터 힘터로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공원으로 농어촌을 가꾸겠습니다.
숲을 국민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8편 **일자리 늘리고 미래농업 대비하겠습니다**

도시로 사람과 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생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먹거리, 에너지, 특히 일자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장관공약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하겠습니다
로컬푸드와 6차산업화 확대하겠습니다.
30만 중소농가 소득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하겠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상호금융투자 확대하겠습니다.


4차산업 미래농업 준비하겠습니다
식량, 물, 에너지 위기 대비하겠습니다.
생태농업 연구개발 강화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22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새정부 농정공약



문재인의 **생생지작**
生生之樂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
농어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제9편 수산업을 살리고 권익을 높ی겠습니다

우리 수산업 위기입니다.
작년 수산물 생산량이 처음으로 100만 톤이 무너졌습니다.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식품산업과 동반성장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해외수출 지원하겠습니다.
항만을 경제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족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수산직물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하겠습니다.

농수산업간 형평성 확보하겠습니다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부문과 형평성 맞추겠습니다.

제10편 뿌리와 열매

농경사회를 극복하겠다는 인류의 오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입니다. 뿌리 없이 건강한 나무는 없습니다.
문재인은 한국농업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우리사회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국민과 함께 담 흘려 농사 짓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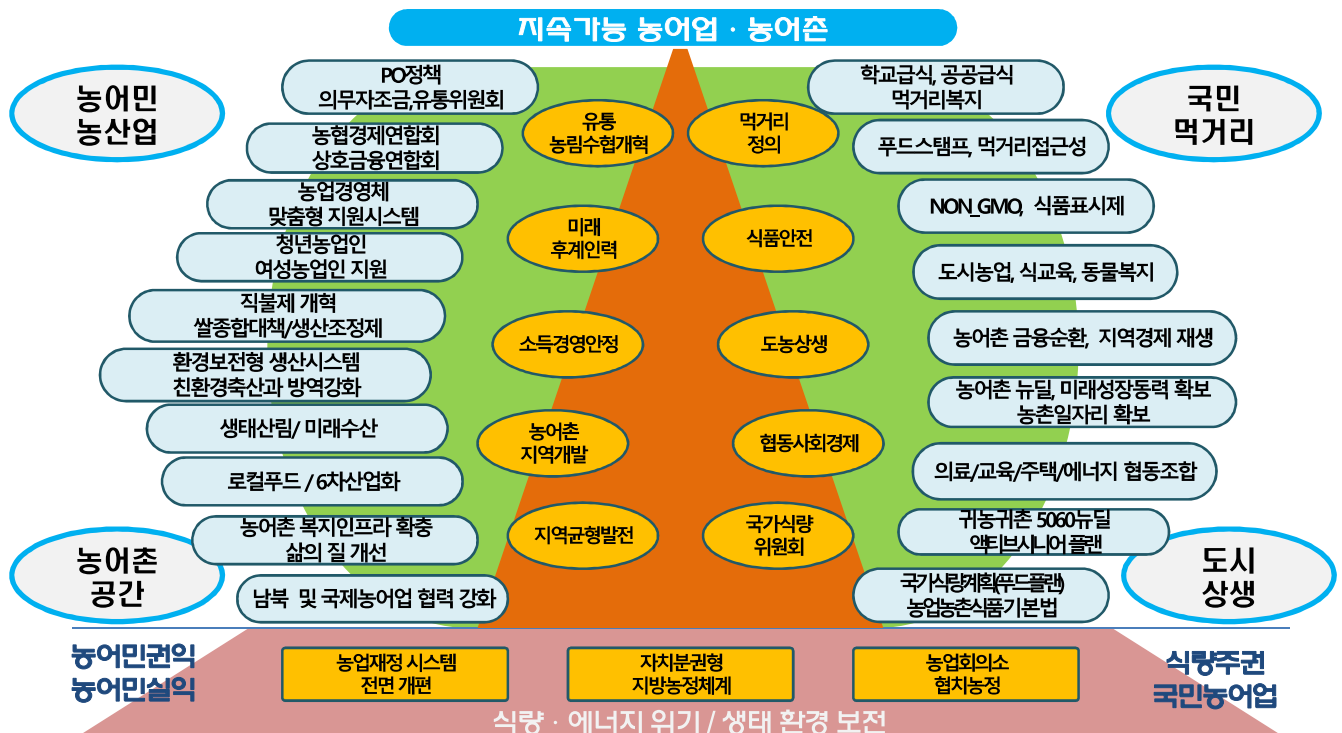
지속가능 농어업 · 농어촌

국민주권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23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새정부 농정공약 : 정책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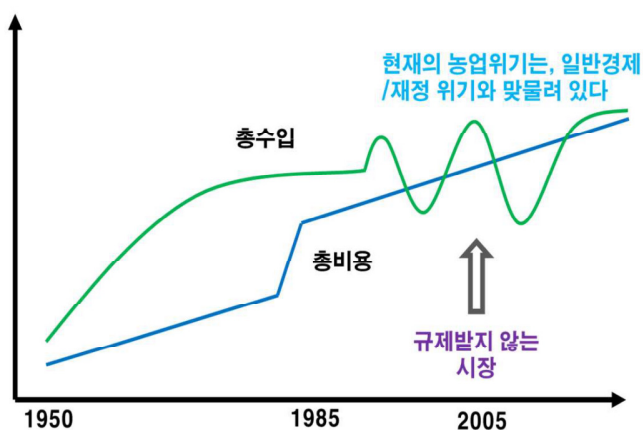
II. 중앙-지방 투트랙전략



농업소득 압착

- 선진국 농업도 저성장, 고령화 및 인구감소, 기후변화, 자유무역 확산 등으로 구조변화
- 농업에 대한 압착 (income squeeze) 심화, 전업농 감소 및 겸업농 증가 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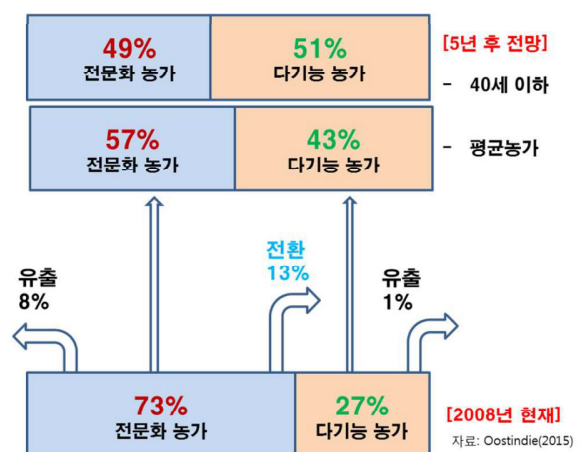
1950~현재까지의 농업소득의 변화



* 자료: Ploeg and Roep(2003)을 기초로 수정

* 자료 : 황수철, 전환아카데미(1차) 강의자료. 2015.

전업농 감소/겸업농 증가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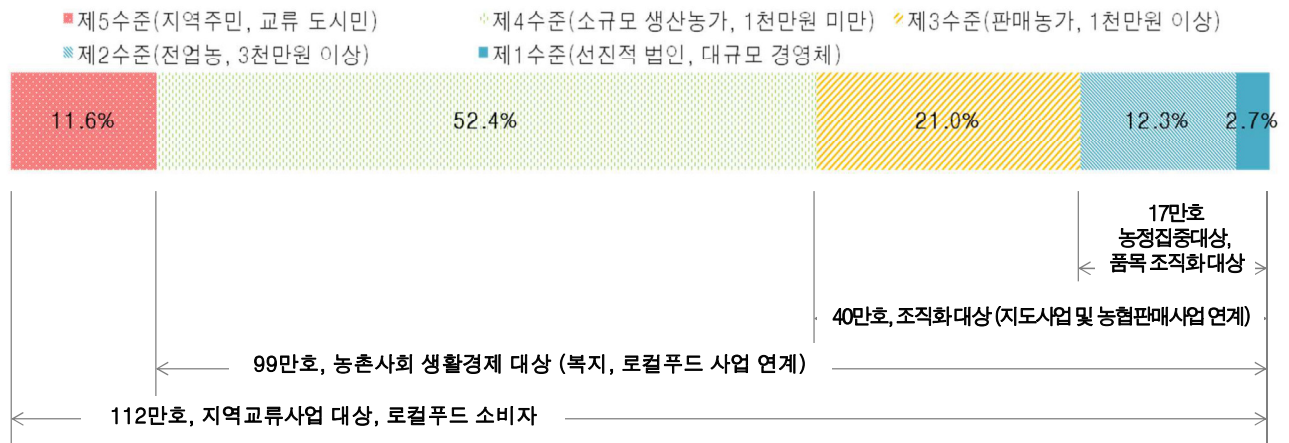


자료: Oostindie(2015)

농가구조 변화

- 2014년 기준 판매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36.0%, 3천만원 이상 농가는 15.0%
- 주요 과수와 시설채소 품목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정체 또는 감소 상태로 전환

판매규모별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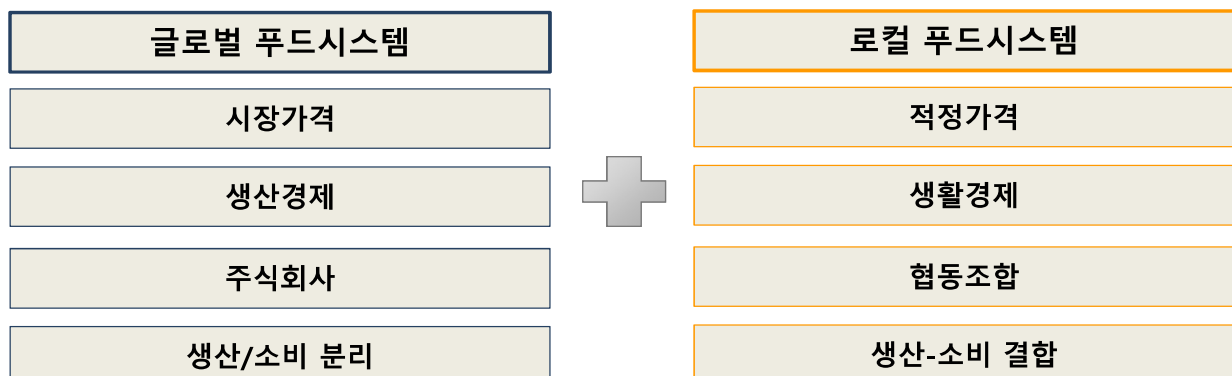


* 자료 :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통계청

27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관점의 전환



28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농정의 두 트랙

기존 상업농, 전업농은 시장지향, 시장경쟁력 강화영역으로,
이외 농가는 지역순환 영역으로 육성하는 두 트랙(Two-track)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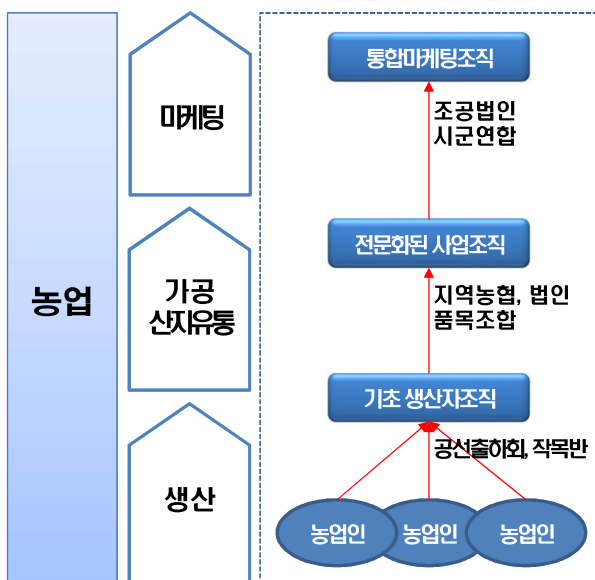
29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조직화 (품목+지역)

품목별 협업체 육성 영역

비즈니스 영역



마을영농 협업체 육성 영역

커뮤니티 영역

지역 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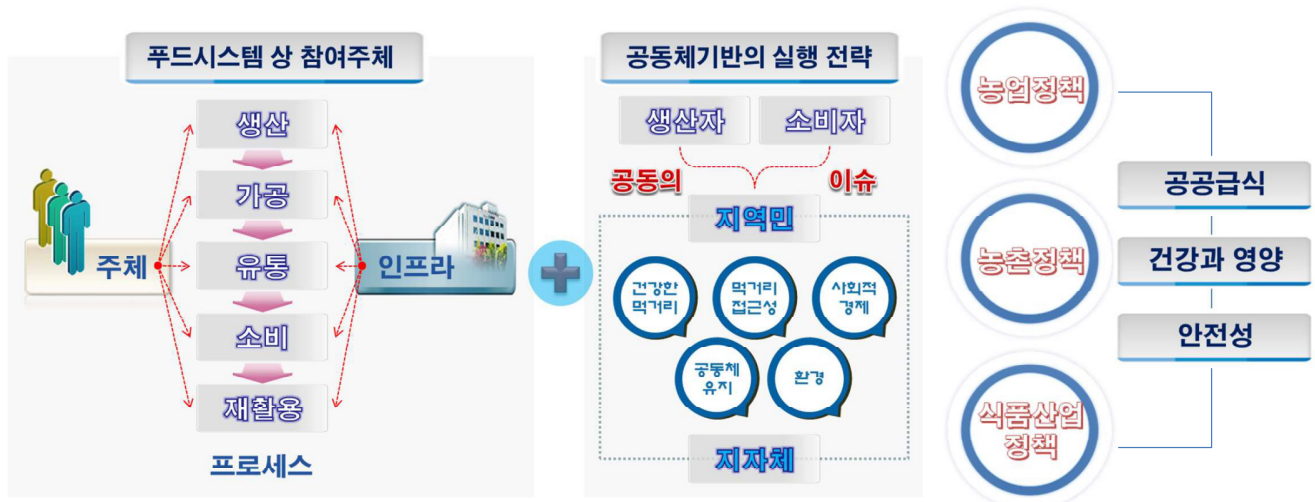


30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농업에서 푸드로

0. 푸드플랜은 기존의 생산자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지역 내 먹거리 수요계층, 푸드시스템 상 산업관계자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해야 함
0. 푸드플랜은 먹거리 이동경로 상의 산업관계자를 비롯한 지역민 전체를 참여주체로 설정할 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푸드'를 지역민 공동의 이슈로 인식할 때 정책개입의 논리 명확



31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새로운 인식 : 먹거리 정의

산업적 관점을 넘어 먹거리 기본권 관점에서 푸드, 인간생존 필수요소.

밀라노 푸드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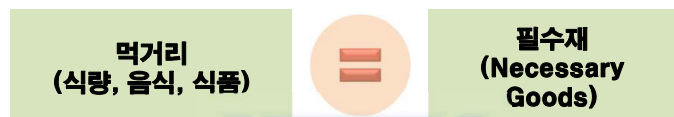
Food Justice / Food Security

먹거리 정의



Food is the first necessity of people.

民以食为天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여긴다



식량안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학교와 노인 급식 지원, 푸드뱅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인간이라면 누구나 굶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 이상의 먹거리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32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밀라노 푸드협약

2015밀라노 국제 엑스포 '세계도시 푸드정책 협약' 서명,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노력

푸드정책 실행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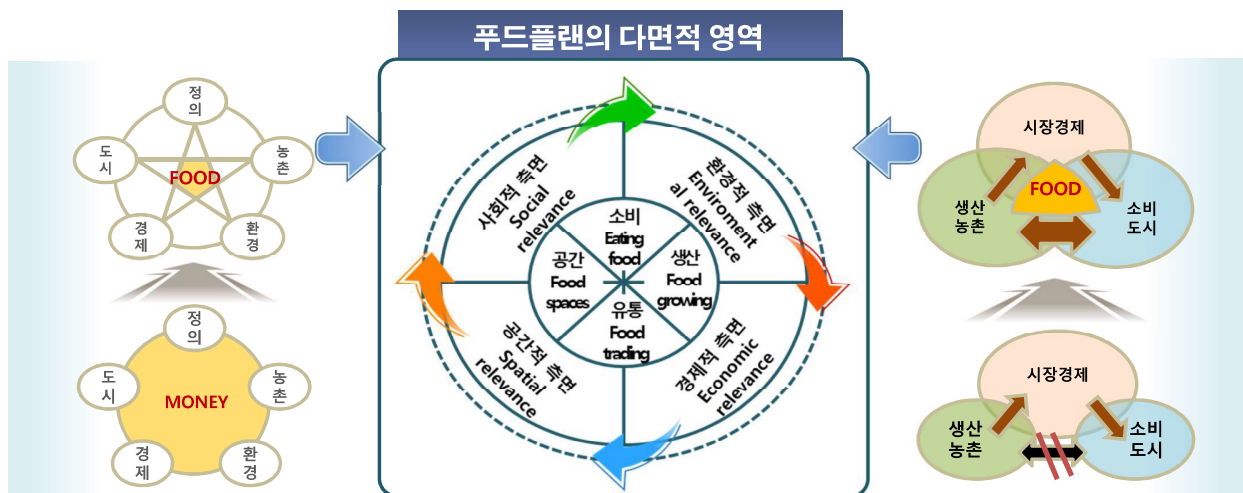
권장행동	실행과제	비고	권장행동	실행과제	비고
효과적인 실행가능 여건보장 (거버넌스) (6개항)	1. 지방정부 내 기관 및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을 촉진	추진 체계	푸드의 생산 (7개항)	24. 도시주변 생산자에게 실행가능한 서비스 제공 지원	생산 가공
	2. 지역수준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			25. 도시-농촌 짧은 체인, 생산자-소비자 네트워크 등 지원	
	3. 지역정책과 시민사회 푸드계획 수립 및 평가 확인			26. 물(폐기물) 관리개선으로 농업·푸드식품생산 재사용	
	4. 지역 푸드정책·계획의 개발수정과 전략적 역량 구축		푸드 공급과 유통 (7개항)	27. 적절한 푸드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푸드의 흐름을 평가	공급 유통
	5. 푸드시스템 자료변환 위한 다중정보시스템 개발 증진			28. 푸드의 저장·가공·수송·유통의 개선된 기술 지원	
	6. 푸드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재해위험 감소전략 개발			29. 지역푸드 법률·규정에 의해 푸드제어시스템 평가 강화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7개항)	7. 지속가능한 식생활(건강, 안전, 환경, 문화, 권리)의 홍보	식생활 영양	30. 모든 푸드의 권리실현 위해 공공조달 가능성 활용	재활용	
	8. 불평한 식생활 및 비만관련 비전염질병 해결 착수		31. 지자체 공공시장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제공		
	9. 푸드관련 주제를 위한 지속가능 식생활 지침 개발		32. 지속가능 생계보장 시장 인프라의 지원 확대·개선		
	10. 지속가능 식생활 안전식수 위한 기준과 규정 적용		33. 비공식 부문의 기여를 인정 적절한 지원 교육제공		
	11. 캠페인 수행 자발적이고 규제력 있는 기구의 검토		식품 폐기물 (4개항)		34. 푸드손실 폐기물 감소 평가·모니터 활동가의 소집
	12. 사람중심 전략 시행 건강·푸드분야 공동행동 장려				35. 특정대상 목표의 푸드손실과 낭비 인식 제고 활동
13. 안전식수 공중위생의 보편적 접근 위한 적절한 투자	36. 연구조사·교육·커뮤니티 조직 등 민간부문과 협력				
사회적 경제적 형평성 (6개항)	14. 취약계층 건강푸드 접근을 위한 현금지원과 푸드 공급	접근성	먹거리의 생산 + 먹거리의 공급과 유통 + 식품 폐기물	거버넌스 +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 사회·경제적 형평성	
	15. 학교급식 프로그램 단체급식 서비스의 방향 전환				
	16. 푸드·농업부문 노동환경 개선, 양질 일자리 촉진				
	17. 소외계층, 도시농촌 푸드관련 사회적 연대활동 장려				
	18. 푸드 네트워크 촉진과 풀뿌리 사업과 활동의 지원				
	19. 지역활동 강화 참여형 교육, 훈련, 연구조사 촉진				
푸드의 생산 (7개항)	20. 도시재생계획 통해 도시와 근교지역 농업을 통합	생산 가공			
	21. 도시와 인근 농촌의 푸드생산·가공·유통 추구				
	22. 통합된 토지이용계획 관리 위한 생태계접근법 지원				
	23. 지속가능 푸드생산 위해 토지접근과 사용권 안정 보호				

33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푸드플랜 개념

푸드: 문제해결의 대상에서 수단으로 관점 전환, 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 분야



농업(식품)에 대한 관점의 변화

생산에 한정되었던 농업의 개념이 유통,가공,식품,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문제 해결 대상 ⇒ 문제 해결 수단

가치사슬의 관점

농업의 다기능성

농촌경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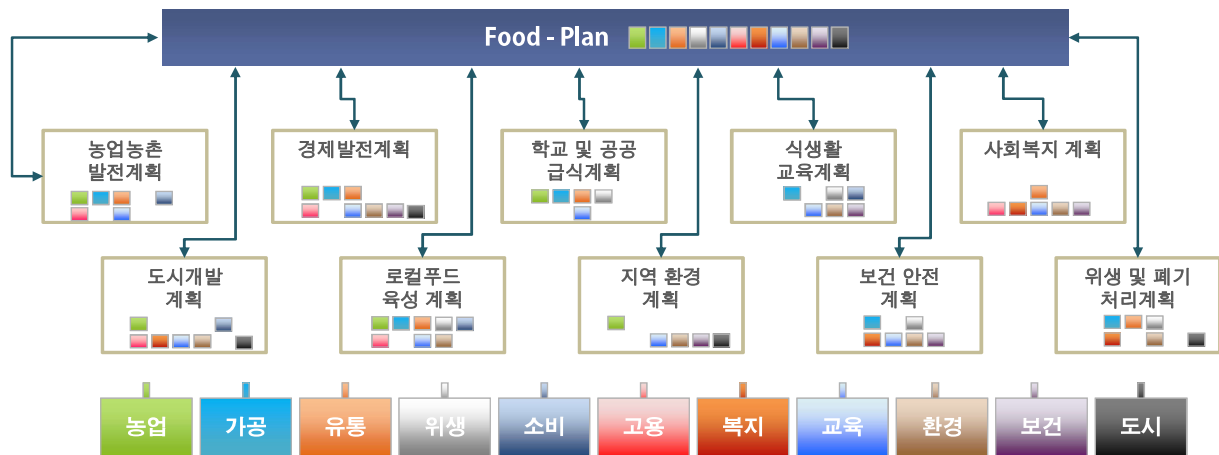
지역자원 개발

34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푸드플랜의 정책적 위상

0. 푸드플랜은 농업생산-소비 영역 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이동경로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경제·문화적 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의 연계전략임
0. 분야별 정책 및 계획의 효율적 연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푸드플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적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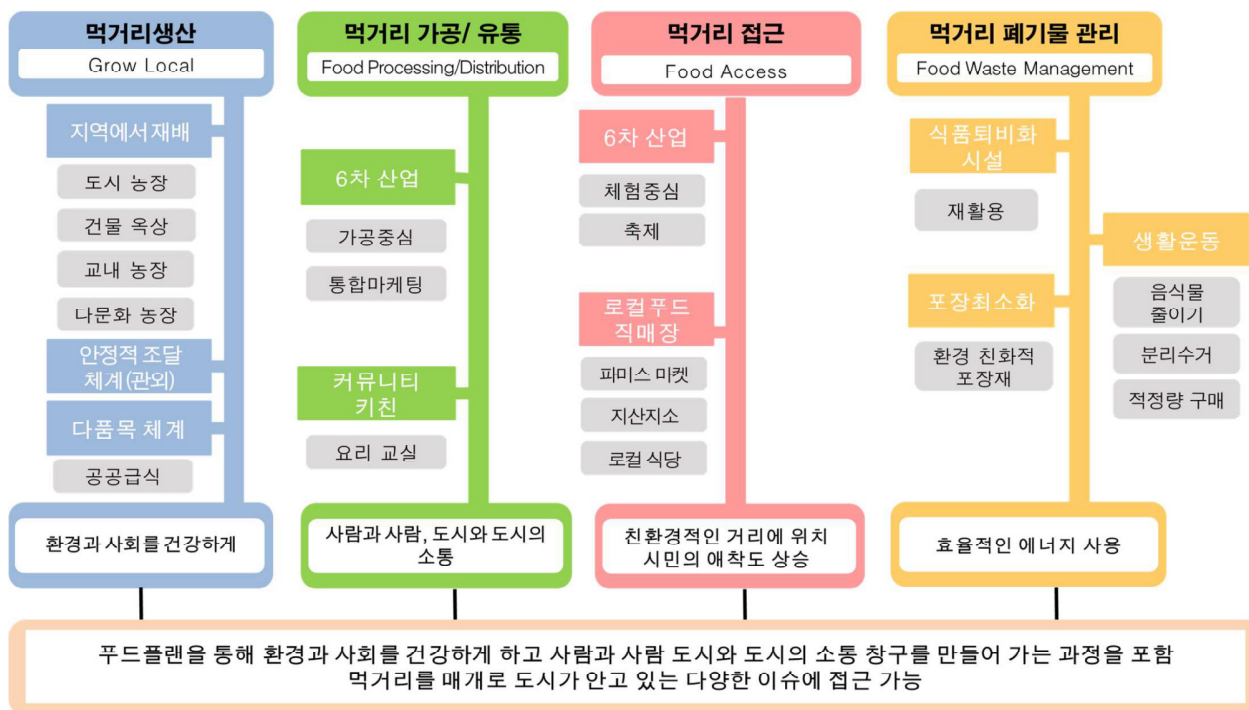
밀라노 푸드정책 협약에 제시된 아젠다의 두 가지 축

1축) 먹거리의 생산, 공급과 유통, 식품 폐기물 관리 / 2축)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35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커뮤니티 푸드플랜의 체계



36

RA·ET 지역농업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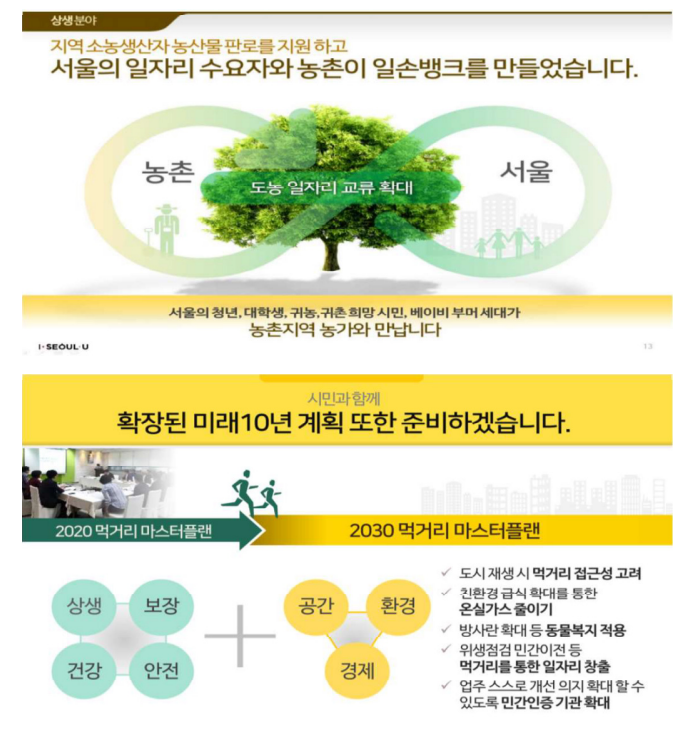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6/20)



37

RAI-ET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6/2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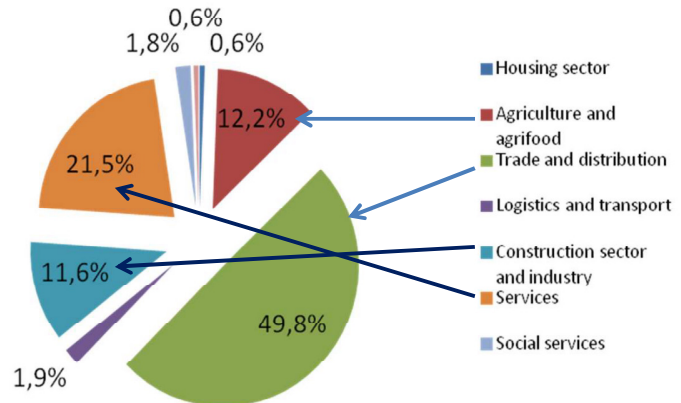
RAI-ET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과 지역경제



트렌토COOP

농협 : 92개소, 2.2만조합원, 2,693명고용
 신협 : 57개소, 12만조합원, 2,887명고용
 생협 : 79개소, 10만조합원, 2,663명고용
 노동서비스주택사회적 : 295개소, 3만조합원 1만명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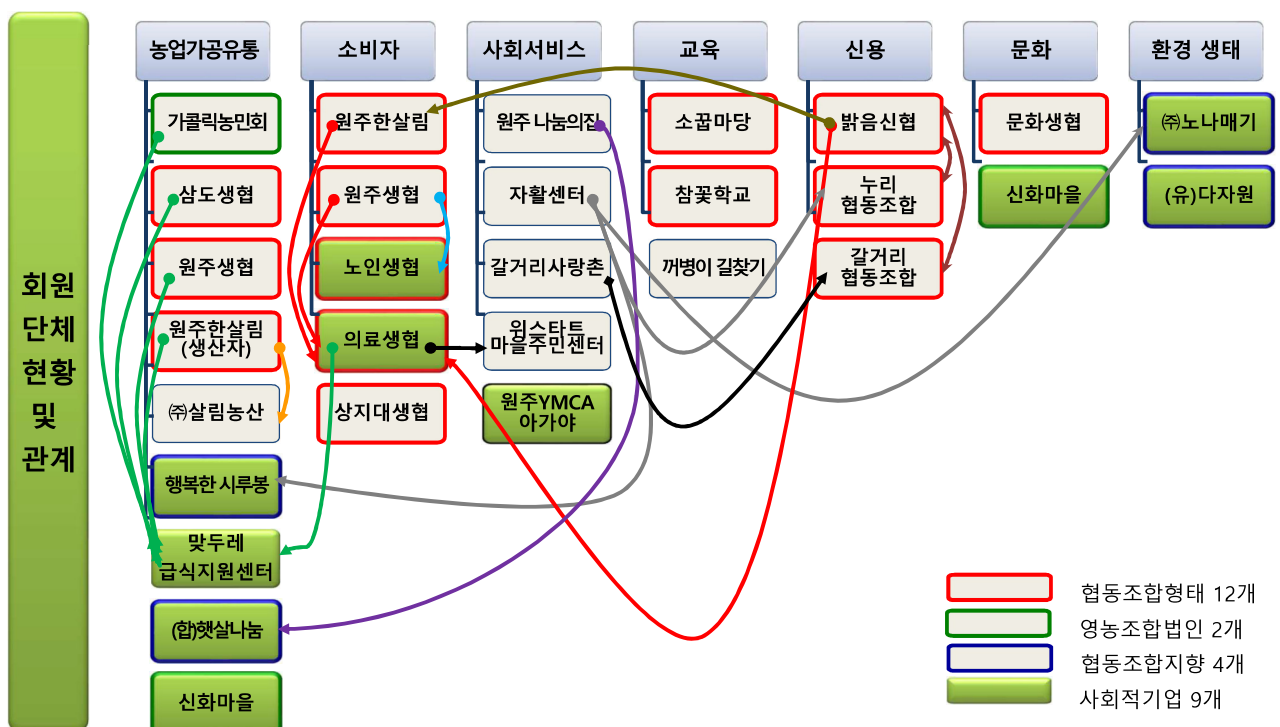


볼로냐 L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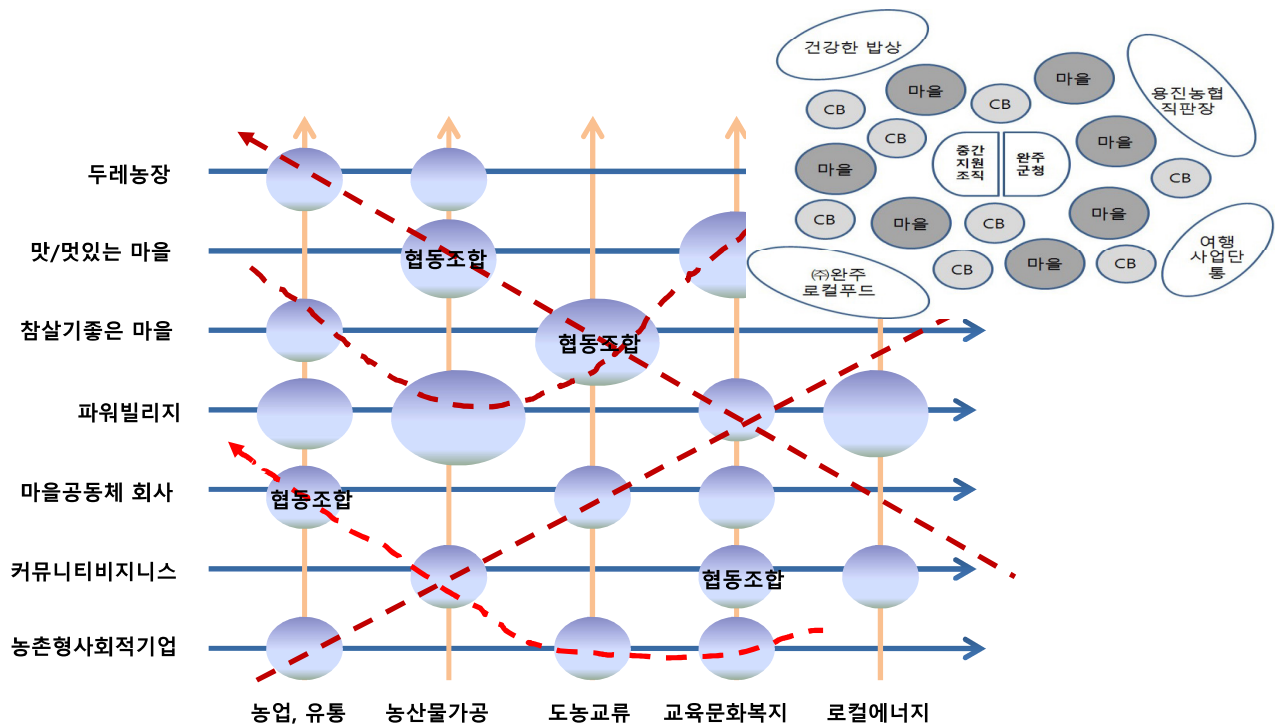
회원조합 235개, 총매출 114억 유로
 총고용 44,000명, 조합원수 1,278,502명
 매출구성 : 농협 12.2%, 생협 등 49.8%
 건설협동조합 등 11.6%, 서비스 21.5%

RAI-ET 지역농업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완주사례 (자료 : 임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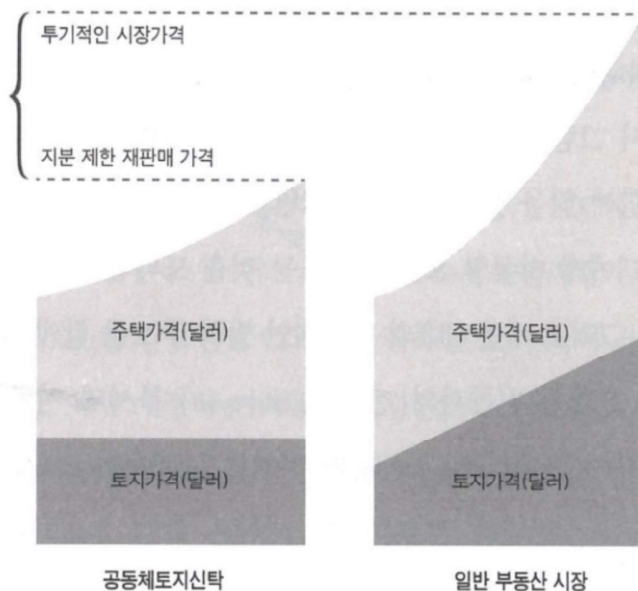


41

RAI-ET 지역농업네트워크

토지, 주택.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 [마이클 루이스, 팻 코너티]

커뮤니티 토지 컨트롤에 의한 지불가능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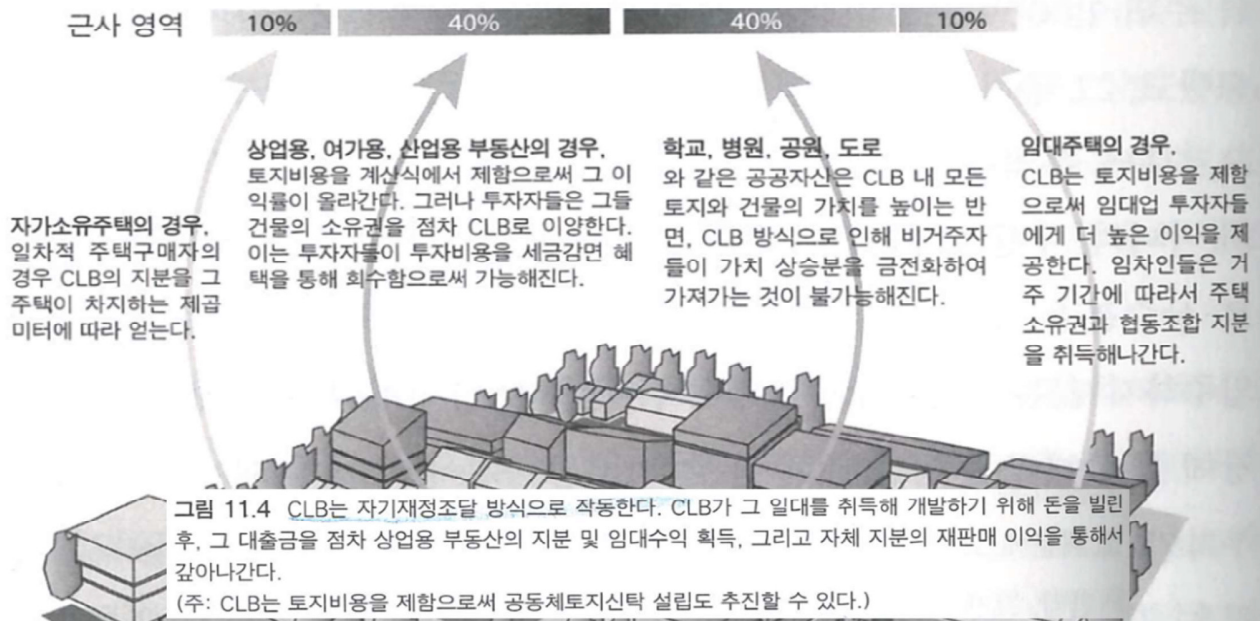


공유재산의 바퀴



42

토지은행협동조합(CLB)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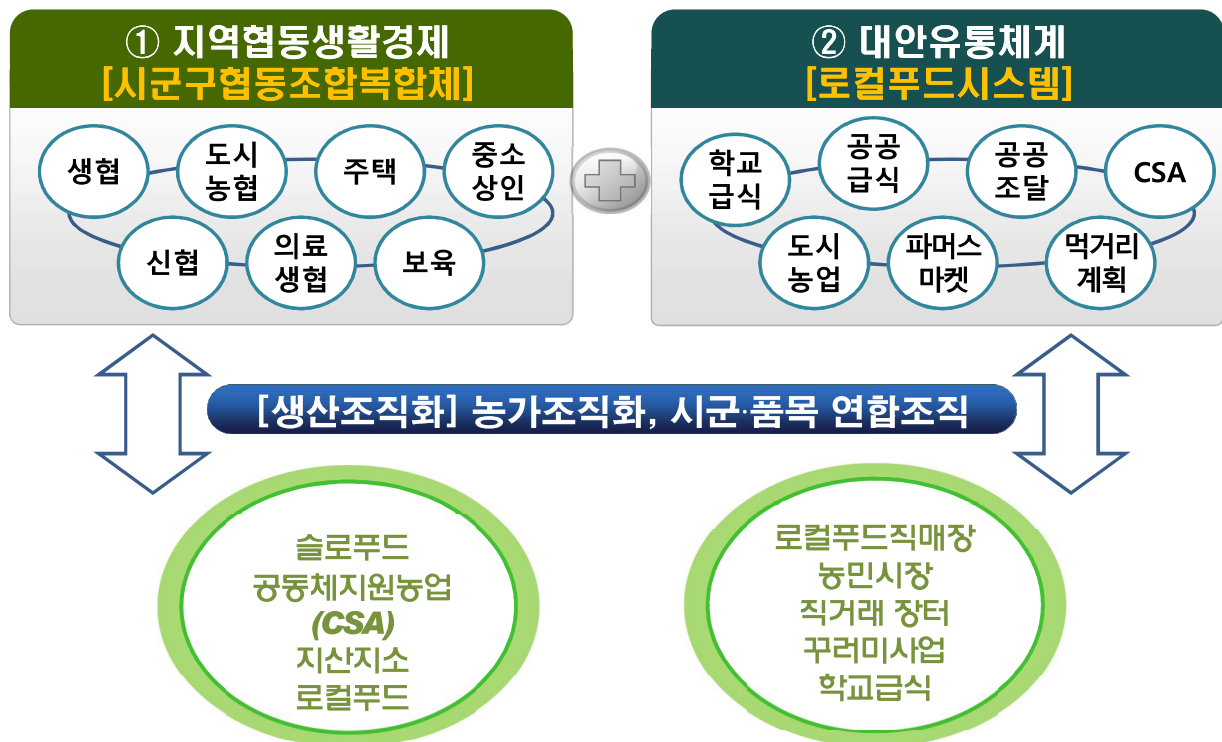
협동조합복합체

I.

- 1 사회적 경제영역과 연계, 지역사회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 2 개별법 협동조합과 연계, 협동조합 자원 활용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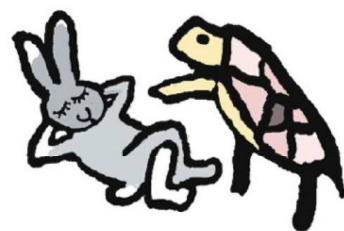


지역협동 생활경제



45

RAINET 지역농업네트워크



함께가자 우리

로컬푸드 개워서 함께가는 거북이가 되어야 합니다.

서적



RAINET 지역농업네트워크

발제 3.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전략

최지연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 아젠다별 지역균형발전정책 5차 워크숍 (2017. 10. 11(수) 오후 3시)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 지 연

Content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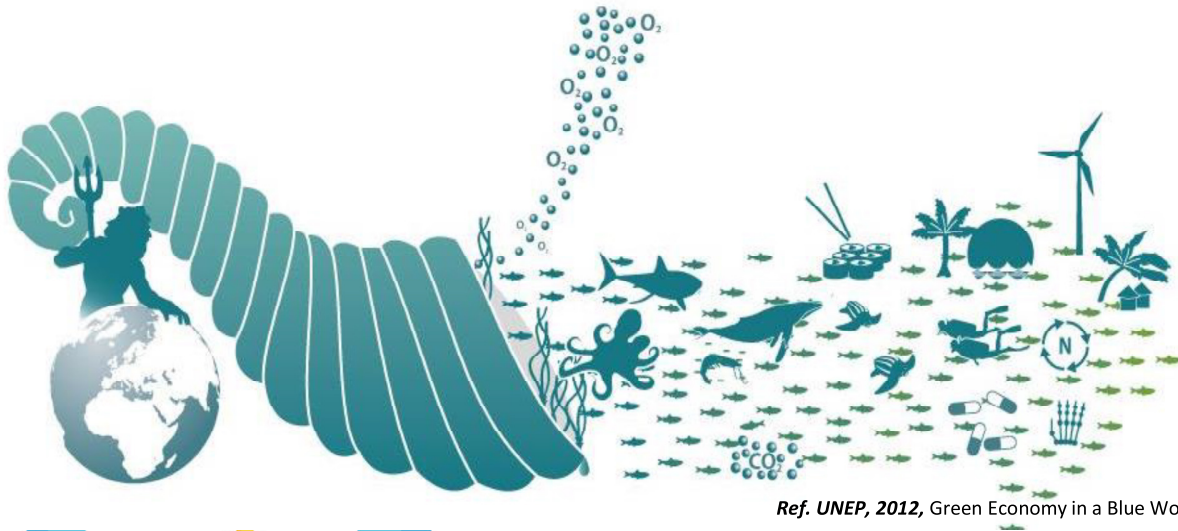
해 양 수 산
국 정 과 제 와
지역발전전략



- 1 왜 연안·해양지역인가?
- 2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역량과 정책현안
- 3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지역발전
- 4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

Prologue

World oceans, a cornucopia of goods and services



Ref. UNEP, 2012, Green Economy in a Blu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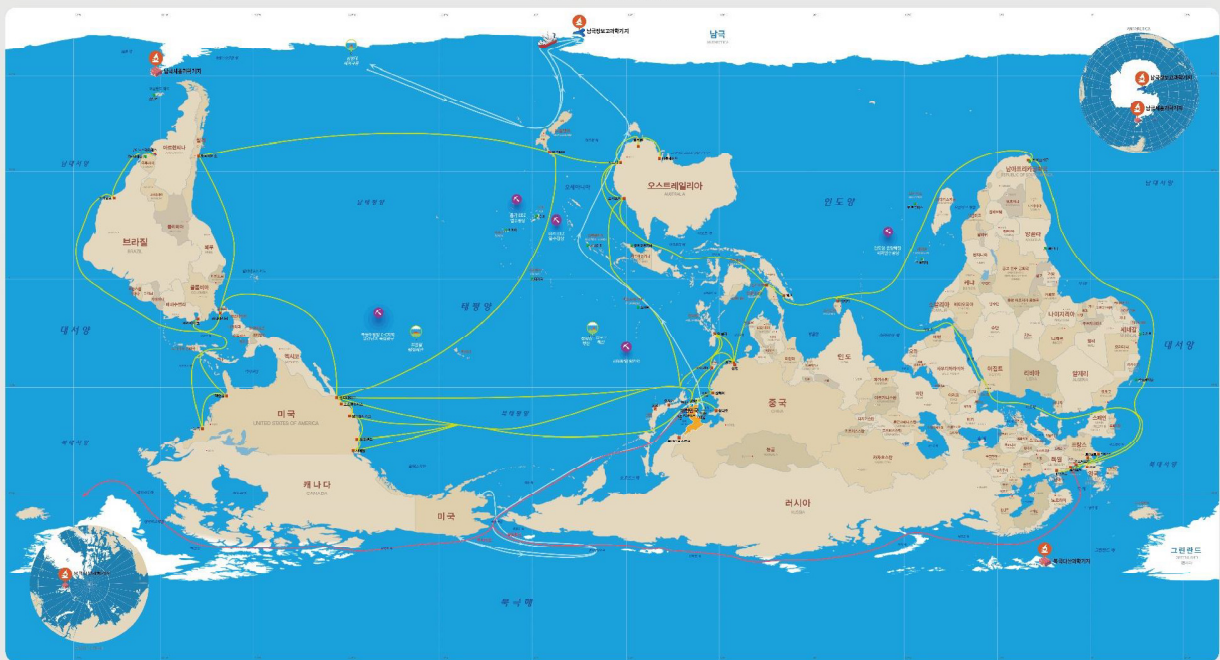


3/40

Prologue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거꾸로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료: 해양수산부)

4/40

1

왜 연안·해양 지역인가?

국가경제의 핵심공간



항만 6위



수산 1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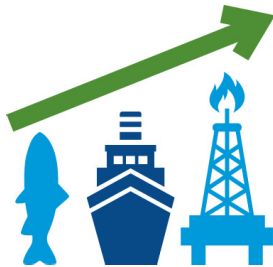
해양과학 15위



해양관광 16위

한국,
세계 12위권 해양국가

(자료: '06년 ADL 평가)



해양수산업 산출액

155.2조원

해양수산업 부가가치

86.9조원

(14년 기준)

· 연간 1억 명 해수욕장 이용 (15년 기준)



· 수산물 섭취량 세계 1위 (15년 기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58.9kg

* 노르웨이(2위, 53.3kg), 일본(3위, 50.2kg), 중국(4위, 39.5kg)

5/40

1

왜 연안·해양 지역인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27.4%

연안인구('15)
14,108.3천명



34.2%

연안 GRDP('14)
482.1조 원



28.1%

연안 전사업체종사자수('15)
5,879.1천 명

전국 연안·해양권역 이용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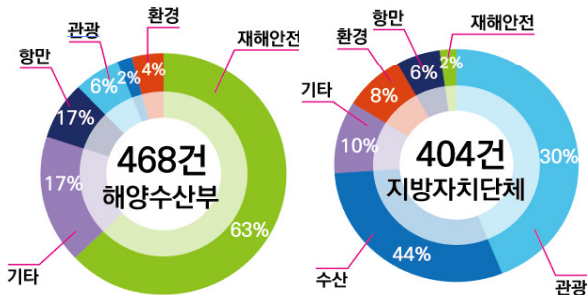


6/40

1

왜 연안·해양 지역인가? 해양수산 기반 지역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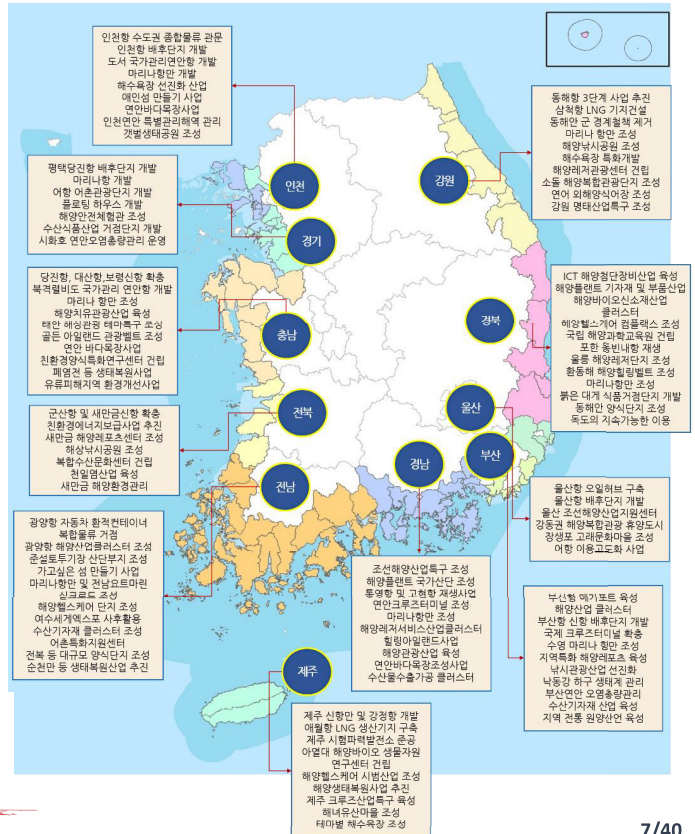
연안·해양 기반 해양수산 사업 수요 증가



연안·해양지역성장체계

연안·해양자원, 해양수산업, 지역역량
결집기반으로 활용 가능

연안·해양가치 창출과 지역 맞춤형 활용
국가와 지역 해양력의 균형발전



7/40

2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현주소와 정책현안

지역발전정책의 연안·해양

연안·해양지역 특성 반영 한계

1990년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지역균형발전 혁신주도 다극분산	지역경쟁력 강화 광역화/연계협력 특화발전	지역주민정책체감 행복 자율참여/협업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사람중심 균형발전
해양수산부 창설 (1996)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2008)	해양수산부 재창설 (201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 관련 정책

해양수산 부문별 기능분리적 접근

해양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 환경관리해역
- 연안통합관리
- 해양보호구역
- 해양관광

수산·어업

- 양식어장 관리
- 내수면 어업
- 어촌 복지 및 개발
- 어촌체험마을
- 귀어·귀촌 정책

해운·해사

- 해운산업
- 크루즈 산업기반
- 도서민 교통지원
- 안전한 해상교통

항만

- 항만개발
- 항만재개발
- 항만 배후단지
- 부산 북항 재개발

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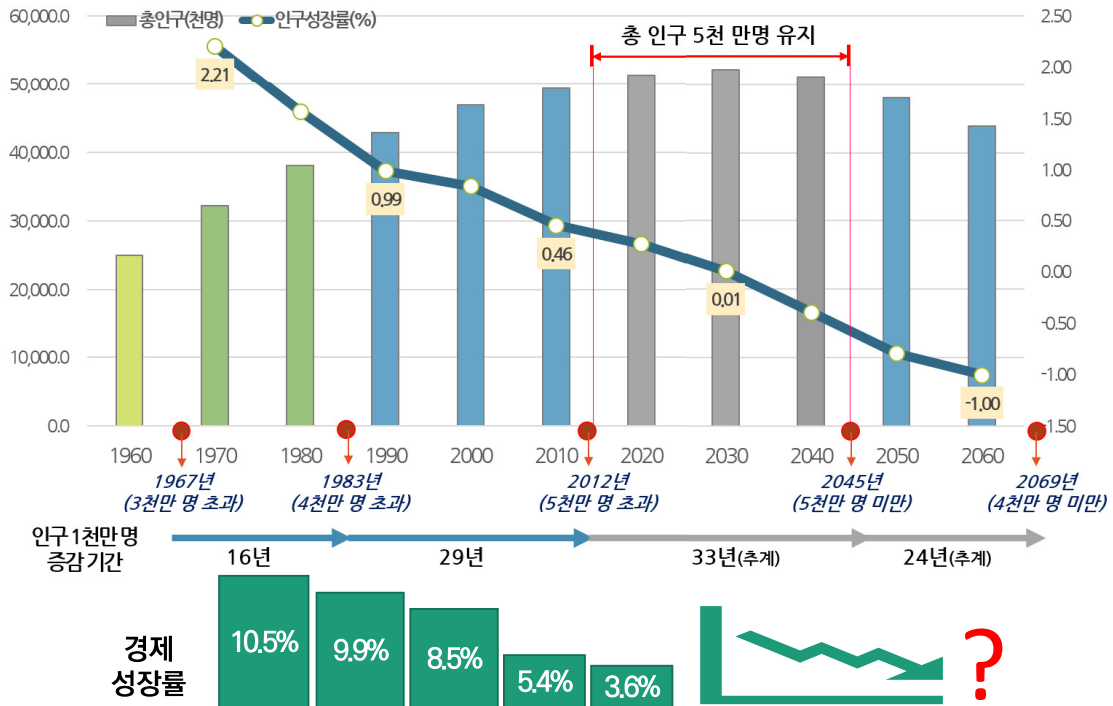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현주소와 정책현안

저출산·고령화

경제 저성장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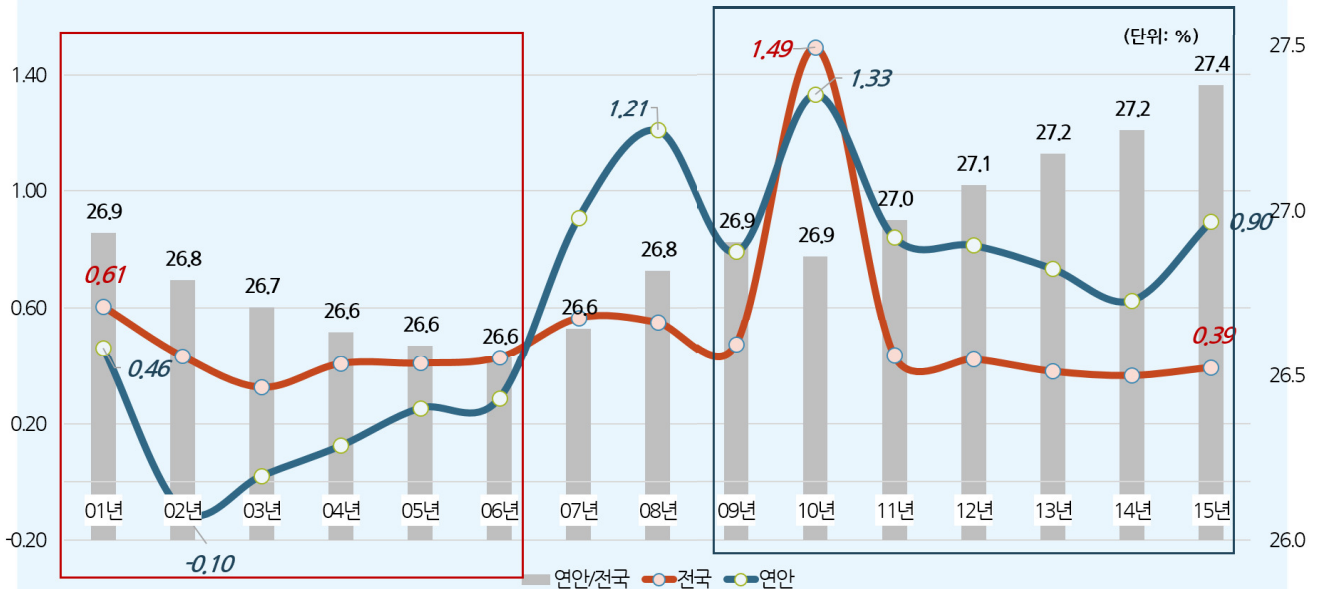
기후변화



9/40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현주소와 정책현안

연안 시·군·구 인구(15년) : 14,108 천명 (전국의 27.4%)



10/40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현주소와 정책현안

★ 연안 대도시 인구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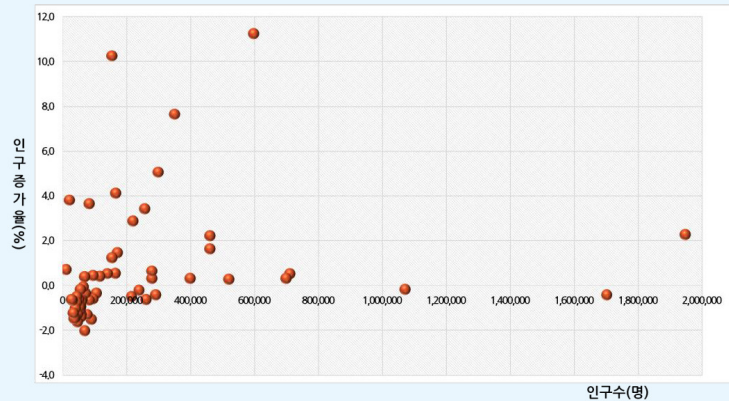
- 부산&창원 감소
- 수도권 연안인구 증가

★ 연안 중급 지역 인구증가

- 수도권 집중 → 산업 & 주거
- 전남무안및순천(생태 및 교육도시)

★ 연안 소급 지역 인구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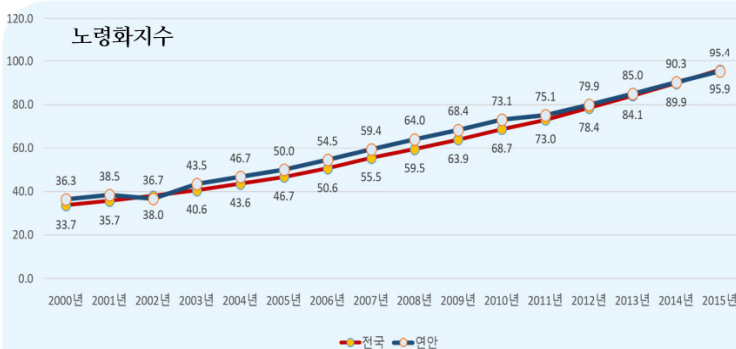
- 전남 고흥, 영암, 해남 크게 감소



인구규모	지역수				인구비중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00만 이상	3	3	3	3	35.2	34.5	33.9	33.4
50만~100만	3	3	4	4	13.4	14.4	17.9	17.9
20만~50만	9	12	13	13	20.1	26.5	27.6	28.4
5만~20만	37	31	27	27	29.5	22.0	17.5	17.4
5만 이하	7	10	12	12	1.8	2.6	3.1	2.9
계	59	59	59	59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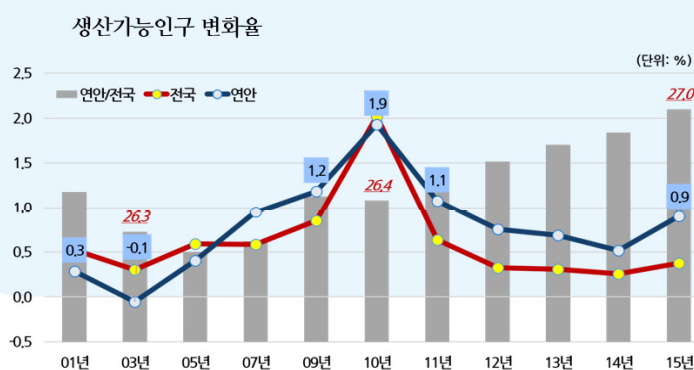
11/40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현주소와 정책현안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부산연안	36.3	52.8	89.5	126.3
인천연안	26.1	37.3	55.9	76.1
울산연안	16.0	23.5	36.6	55.5
경기연안	21.5	26.6	41.8	53.9
강원연안	47.2	66.9	102.2	148.1
충남연안	58.8	82.6	96.7	115.7
전북연안	65.3	90.8	122.6	162.3
전남연안	56.8	79.6	109.5	146.4
경북연안	43.2	61.6	90.2	126.0
경남연안	33.5	45.5	63.0	87.3
제주연안	25.4	33.9	67.3	87.8

노령사회 가속, 젊은이는 빠져나가는... → 활력을 잃어가는 사회



구분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부산연안	-0.99	-1.07	1.12	-0.24
인천연안	0.88	1.08	2.83	1.43
울산연안	2.28	1.38	1.86	0.21
경기연안	5.33	3.89	3.31	3.20
강원연안	-1.11	-1.55	0.49	-0.81
충남연안	-1.61	0.51	2.48	1.24
전북연안	-0.87	-1.86	1.69	-0.72
전남연안	-1.87	-1.31	0.95	-0.19
경북연안	-0.88	-0.44	1.13	-0.45
경남연안	0.25	0.34	1.52	0.10
제주연안	0.35	0.32	2.15	3.33

12/40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현주소와 정책현안

입지계수 전통적 경제기반 축소 → 농림어업, 제조업 비중 낮아짐

합 계	2006년	2010년	2014년
A 농업, 임업 및 어업	2.0	1.8	1.6
B 광업	1.6	1.9	1.7
C 제조업	1.4	1.5	1.5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1.5	1.6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	1.3	1.3
F 건설업	0.9	0.9	1.0
G 도매 및 소매업	0.8	0.9	0.9
H 운수업	1.1	1.1	1.1
I 숙박 및 음식점업	1.0	1.0	1.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4	0.3	0.3
K 금융 및 보험업	0.8	0.7	0.7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0.7	0.7	0.8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6	0.5	0.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7	0.7	0.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	1.0	1.0
P 교육 서비스업	0.9	0.9	0.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9	0.9	0.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	0.9	0.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9	1.0	1.0

전통산업의 저변화 여가 비중

13/40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현주소와 정책현안

자생력 저하 우려

연안 재정
자립도 25.5% 10년
24.6% 15년

초고령사회 가속

고령화
지수 71.2 10년
95.4 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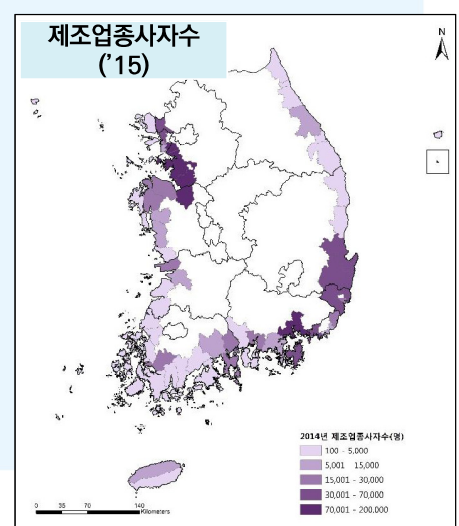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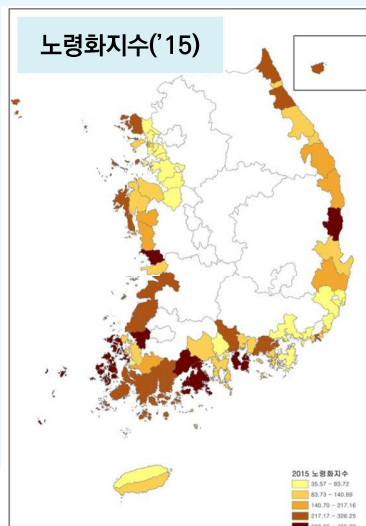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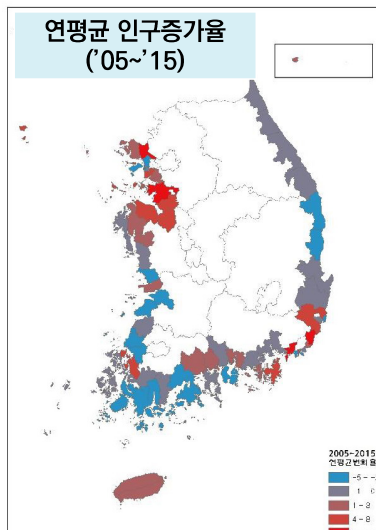
고용 없는 성장

제조업
LQ 1.50 10년
1.49 14년

연안 경쟁력 약화 우려

연안지역 활력 저하

투자 및 일자리 감소



14/40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 현주소와 정책현안

✓ 바다로 연결된 경제·문화·환경적
자원의 동질 영역

✓ 해양수산 기반 특화산업과
사회경제기반 차이

항만
도시

- 항만도시축소와 원도심 낙후
- 인천·경기권 확대/부산·울산권 축소

중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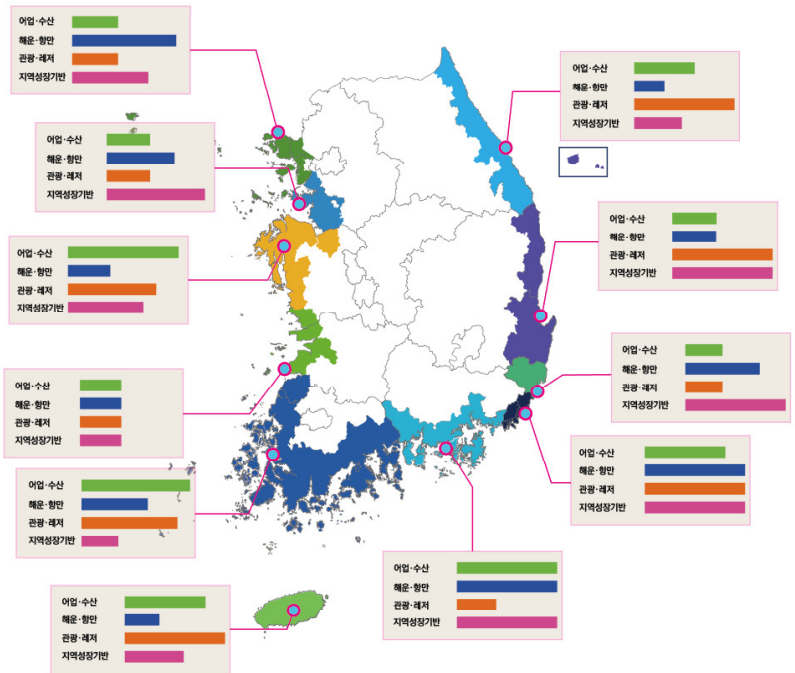
- 수도권 인근 충남연안지역 성장
- 목포, 군산 등 산단, 항만 노후

어촌

- 초노령화와 수산업 위축 등
어촌마을경제 위축

섬

- 5인 가구 미만 도서 증가
- 해양관광 수요 증가



15/40

★ 국외 지역발전정책 방향

유럽 2020 전략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성장, 포용성장

ICT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충, 고용 안정성, 빈곤·사회적 소외 철폐 등

영국의 해양계획
(Marine Plan)

노동요인 (인구, 일자리 등)

생산성요인 (부가가치 등)

성과/낙후요인 (낙후도 등)

위험요인 (단일산업 비중 등)

연안 대도시지역

- 재개발 휴양도시
- 도심 활성화구역

연안 비도시지역

- 노령 비도시지역
- 미숙련 노동 농어촌
- 숙련 노동 농어촌

연안 전환지역

- 경기침체지역
- 경제성장기회지역
- 낙후지역

연안도시 주변지역

- 부유 도심지역
- 산업지역

해양계획을 통한
연안·해양지역의 질적 성장
연계

연안 쇠퇴·성장지역 발전전략
→ 지역의 해양자원과 공간 활용

16/40

★ 국외 지역발전정책 방향

일본지방창생전략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 확립

지역의 자립적 전략수립과 국가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임해부가 강한
요코하마 만들기

선진

교류

창조

감동

쾌적

활약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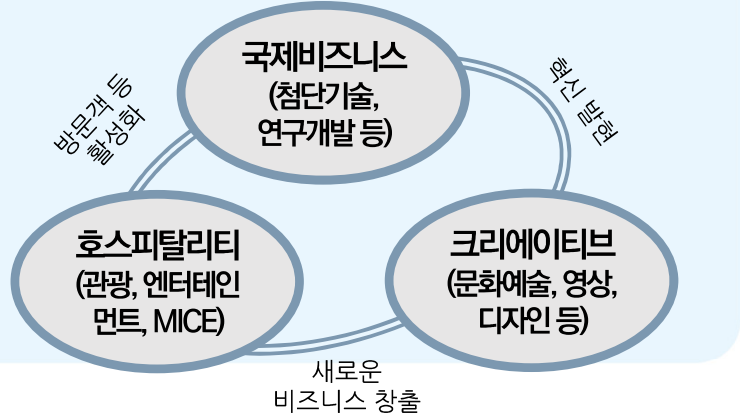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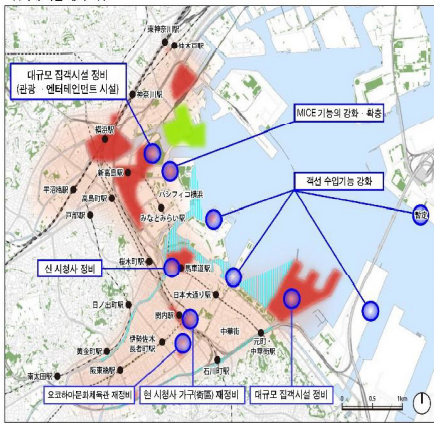
사람·물류

가치매력

역사문화

녹지안전

시민



17/40

3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지역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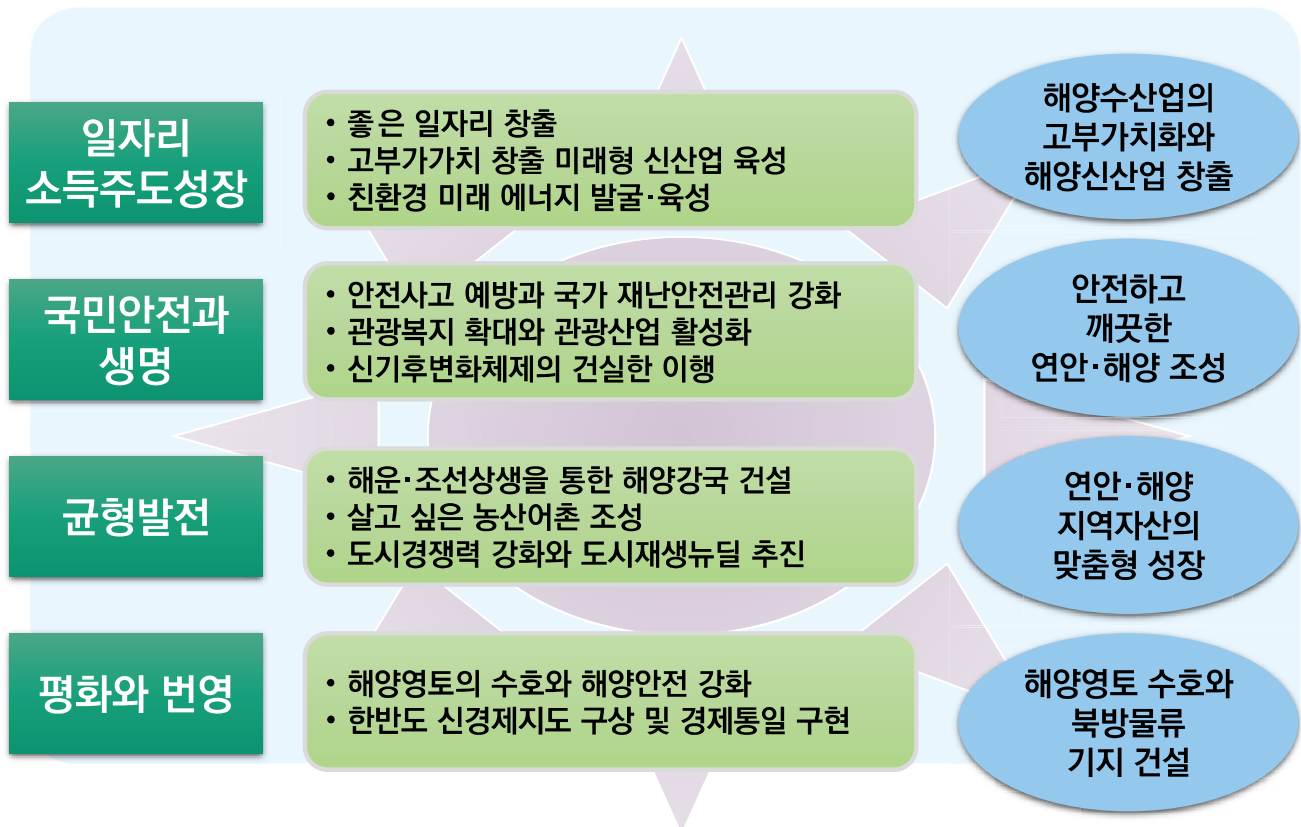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해양수산부 주관	타부처 협조	
국민이 주인인 정부	<div>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div> <div>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div> <div>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div>	3	20	
더불어 잘사는 경제				<div>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부)</div> <div>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강화 및 국토교통사업 경쟁력 강화(국토부)</div> <div>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산업부·미래부·국토부)</div> <div>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산업부)</div>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div>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안전처)</div> <div>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안전처)</div> <div>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환경부·식약처)</div> <div>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div> <div>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div> <div>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div> <div>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문체부)</div>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div>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div> <div>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div>	<div>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div> <div>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div> <div>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div>	<div>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산업부·국토부·행자부)</div> <div>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div> <div>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농식품부)</div> <div>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농식품부)</div> <div>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식품부)</div>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div>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div> <div>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div>	<div>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통일부)</div> <div>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외교부)</div> <div>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외교부)</div> <div>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산업부)</div>	

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해양수산 분야의 과제 및 사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
 자료: KMI 동향분석, Vol. 40(2017.8)

18/40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지역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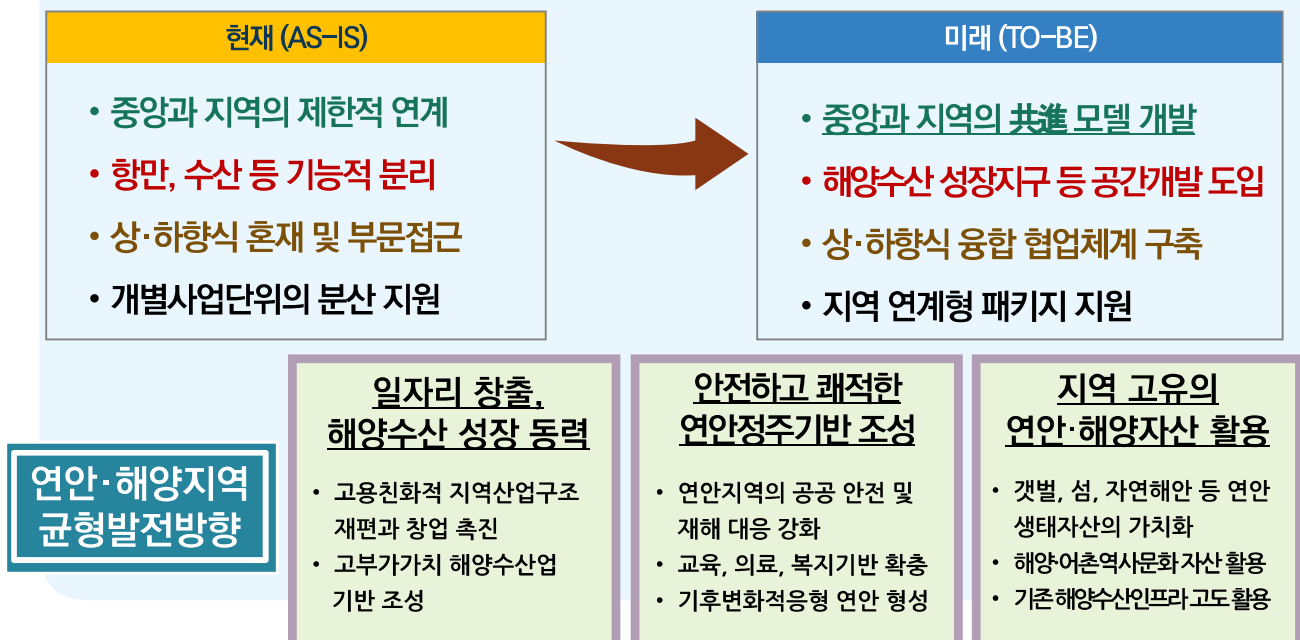


19/40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

연안·해양,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공간

→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발전동력과 지역역량 연계**



20/40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

연안·해양지역
발전 혁신역량 증진

해양수산업의 고도화와 지역비즈니스 연계

지역 연안·해양자원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 정주환경 조성

친수문화·생태환경 보전



21/40



22/40

전국 연안·해양권역 기본추진계획(안)



23/40

4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

비전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국가 해양수산 경쟁력 연계 강화

전략

지역 맞춤형
연안·해양발전

해양수산 융합형
일자리 창출

연안지역
삶의 질 향상

해양수산 지방권한
강화와 상생 협력

추진
과제

연안·해양
지역균형 발전체계 구축

항만
도시

복합
지역

어촌
지역

중양·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정책
발굴

성과
관리

정부
지원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 마련

일자
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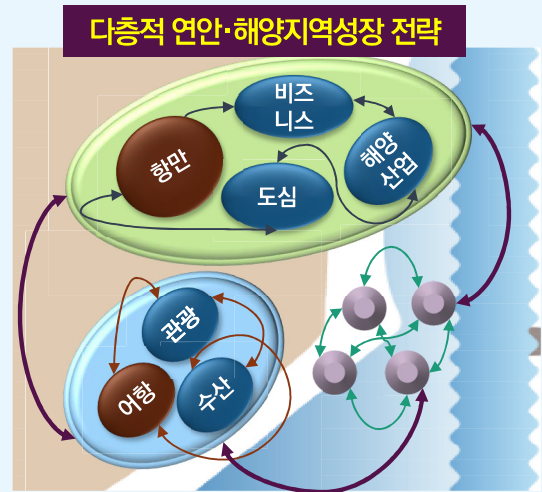
협업
체계

지역
인프라

24/40

1.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

- 항만·산업도시, 수산·관광 기반 중소지역, 어촌·섬 등 연안·해양지역과 배후지역과 연계한 해양수산 지역 발전체계 마련
- 해양수산 부문 국가정책과 연계, 일자리·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방안
- 해양수산성장지구 등 거점개발과 낙후지역 연안형 도시·지역재생 추진 등



25/40

2.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 마련

- 해양수산 관련 지역현안 발굴과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이행 및 효과적 예산집행
- 중앙과 지역의 상시적 소통채널과 정보 공유 등 “해양수산 지역발전지원센터(가칭)”
- 지역주도사업의 국가정책화 추진과 지역 융·복합 협력사업과 추진 지원

3.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 마련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전국 연안·해양 종합발전계획”으로 확대, 연안·해양권역별 종합발전계획 체계 수립 및 이행
- 연안·해양지역발전 성과관리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지역발전체계와 연계한 연안·해양지역발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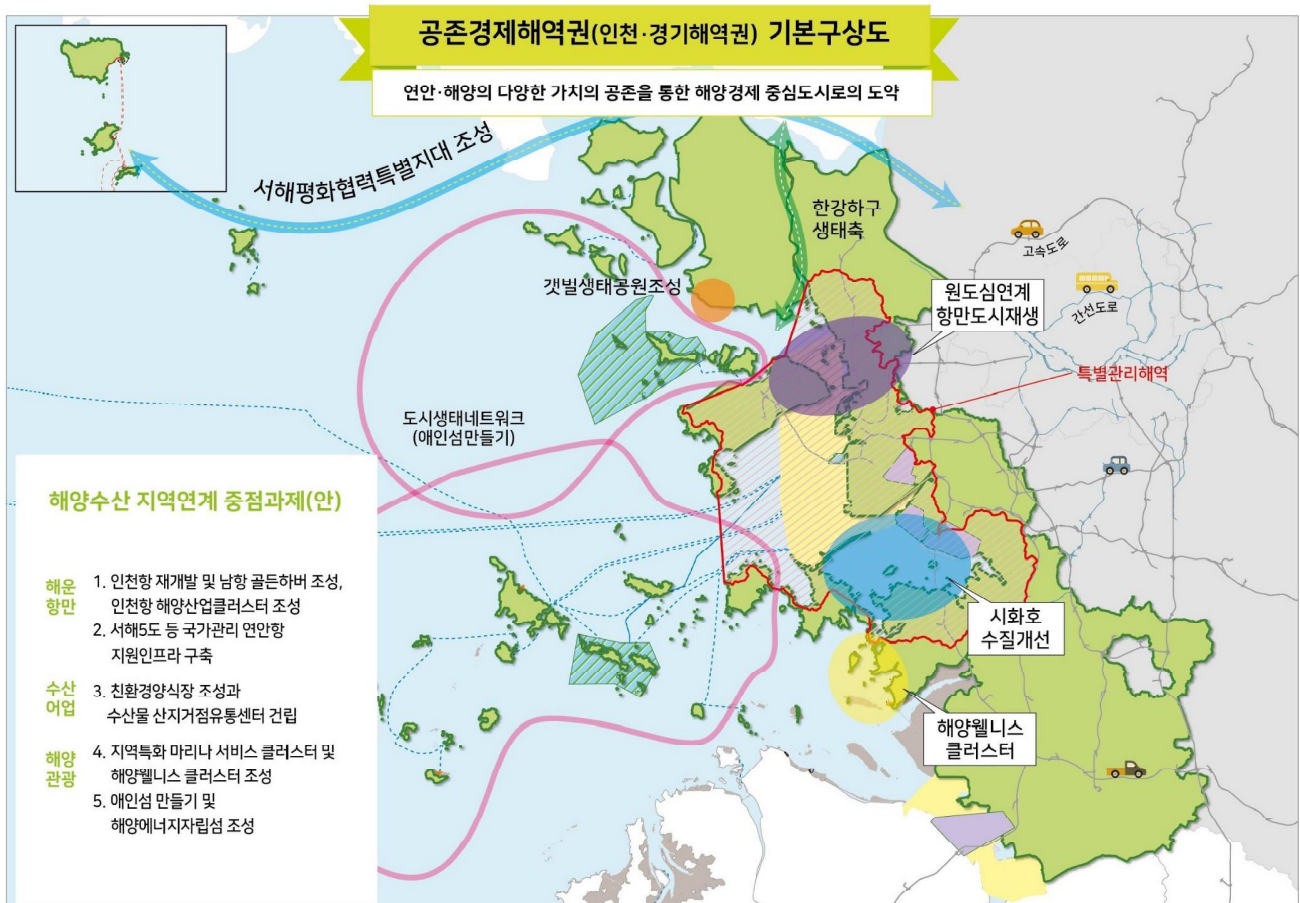
26/40

공존경제해역권

- 수도권 인접, 육·해·공 물류네트워크 기반 조성 → 동북아 물류 관문의 역할
- 해양 친수·국제도시 조성,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등
- 서해접경해역 – 서해5도와 그 주변해역의 해양안보·안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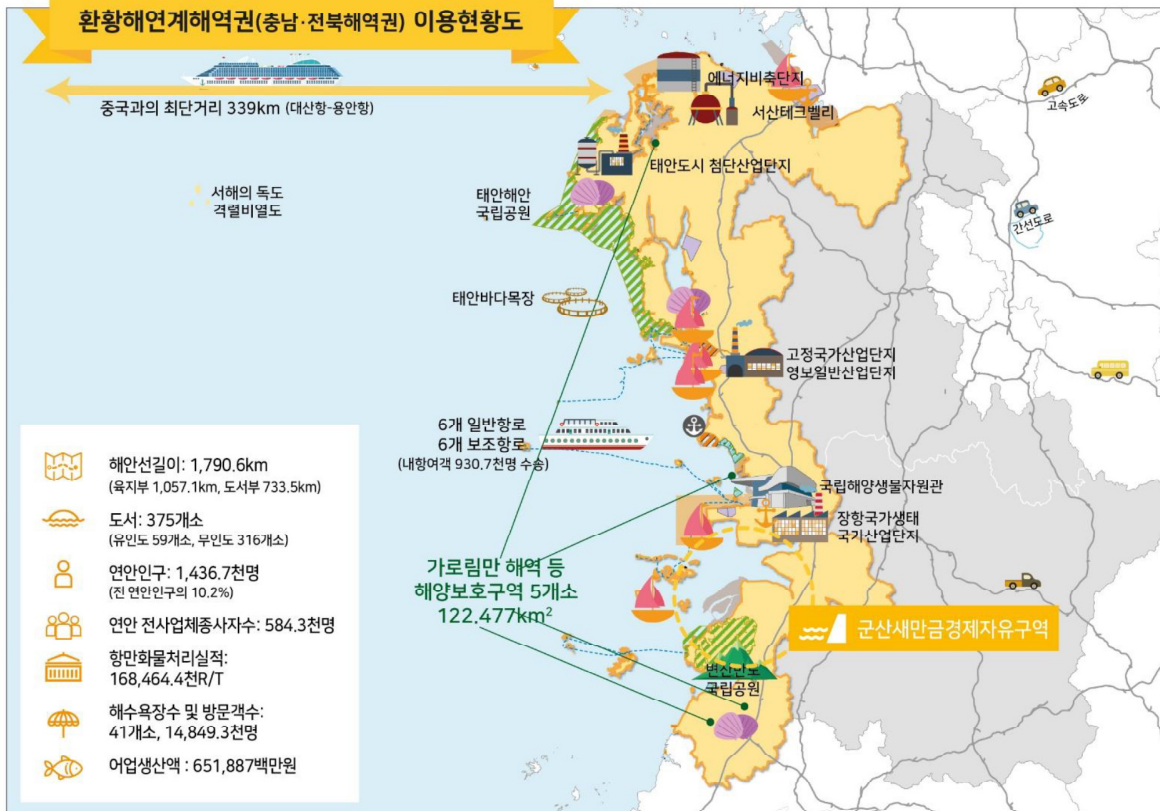
2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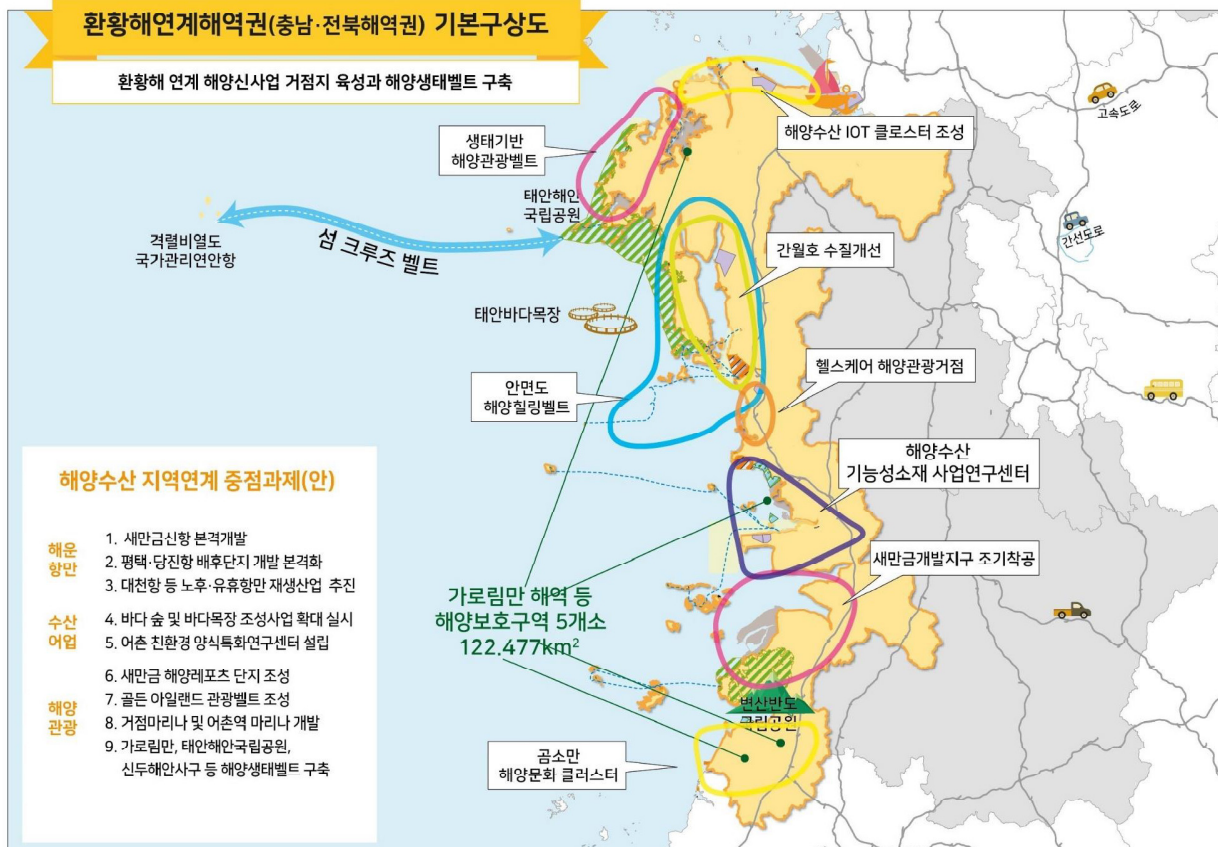
28/40

환황해연계 해역권

- 중국과의 최단거리 입지, 서해북부와 남부 사이 위치
→ 환황해권의 해양경제·문화·생태의 중심축
- 새만금,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생태산업단지 등 해양신산업의 입지적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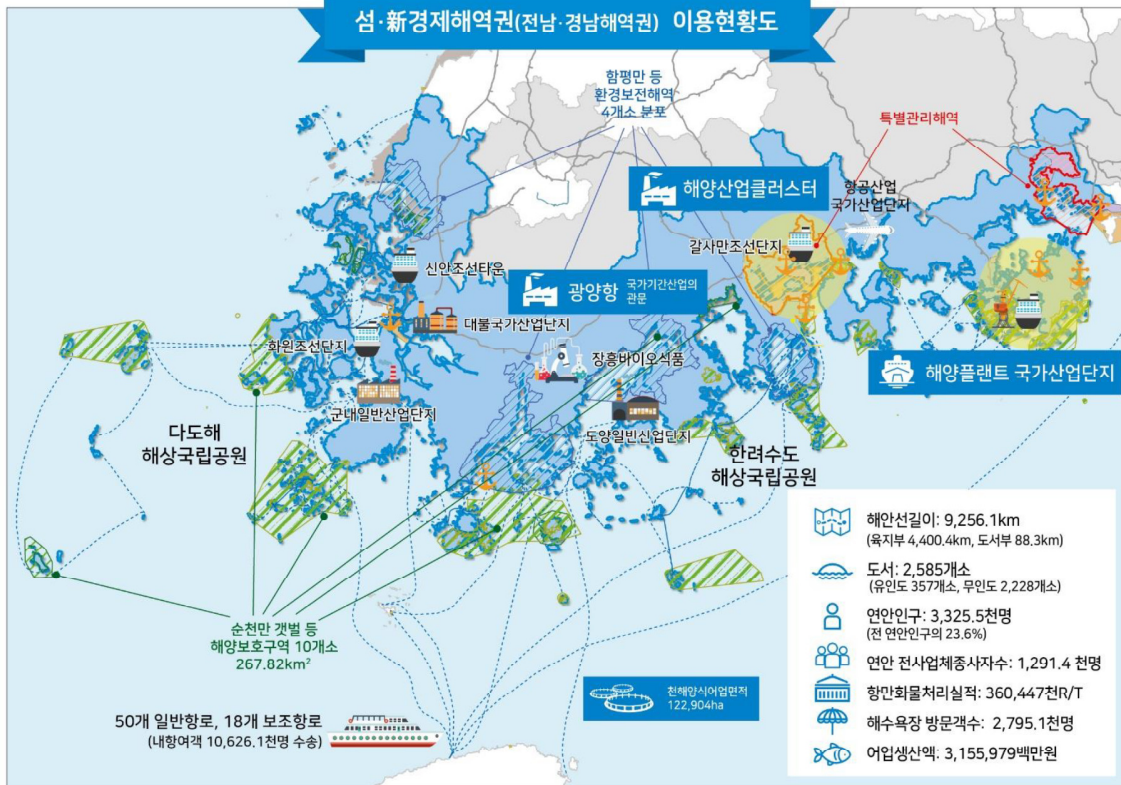
2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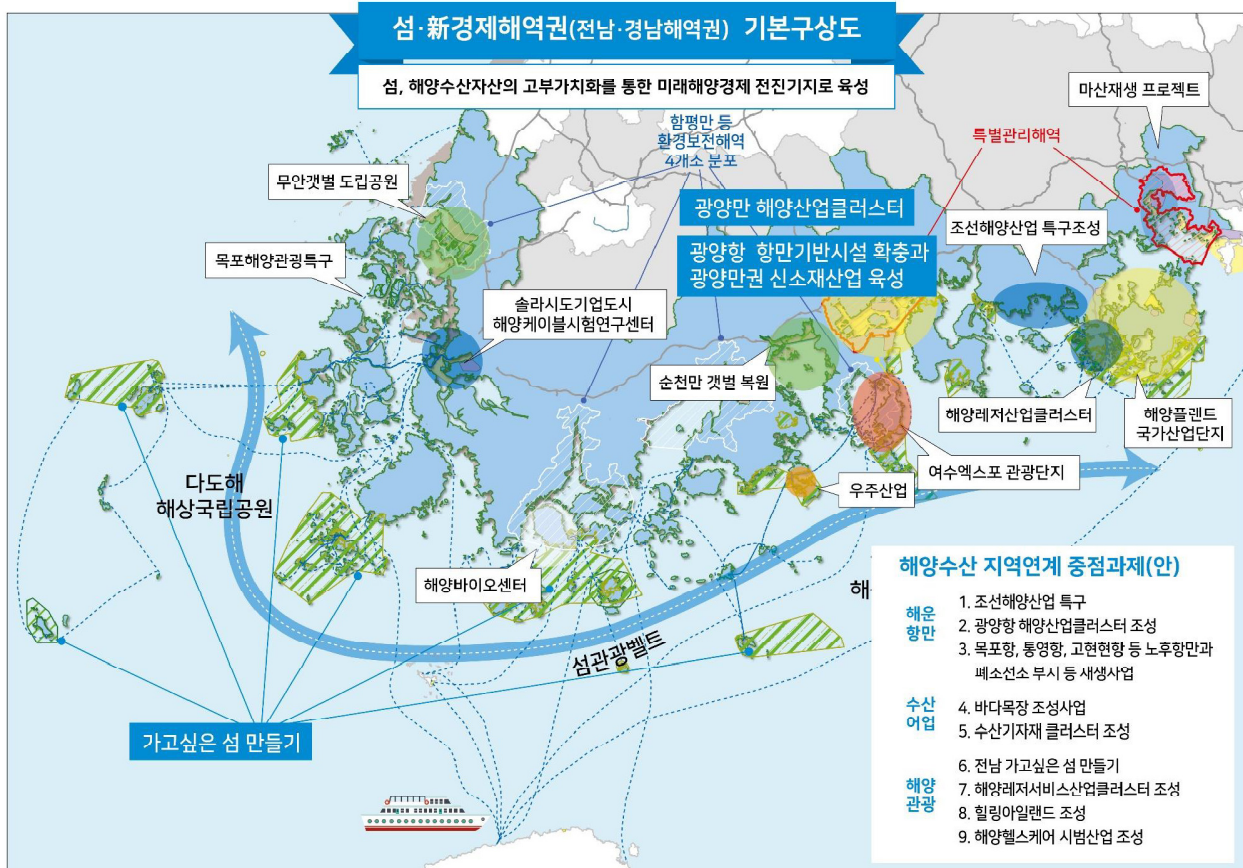
30/40

섬·新경제 해역권

- 우리나라 도서의 52.4% 분포, 전 해안선의 61.8%
- 천혜의 수산양식단지, 해상국립공원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분포
- 광양항 등 항만, 국가산업단지, 조선단지 등 분포



31/40



32/40

- 부산·울산, 국가 해양경제 주도 → 조선업,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물류, 수산, 원양산업 등 해양산업의 집적, 해양수산 전문인력 풍부
- 해운대, 국제여객터미널, 국립해양박물관 등 세계적 해양 관광도시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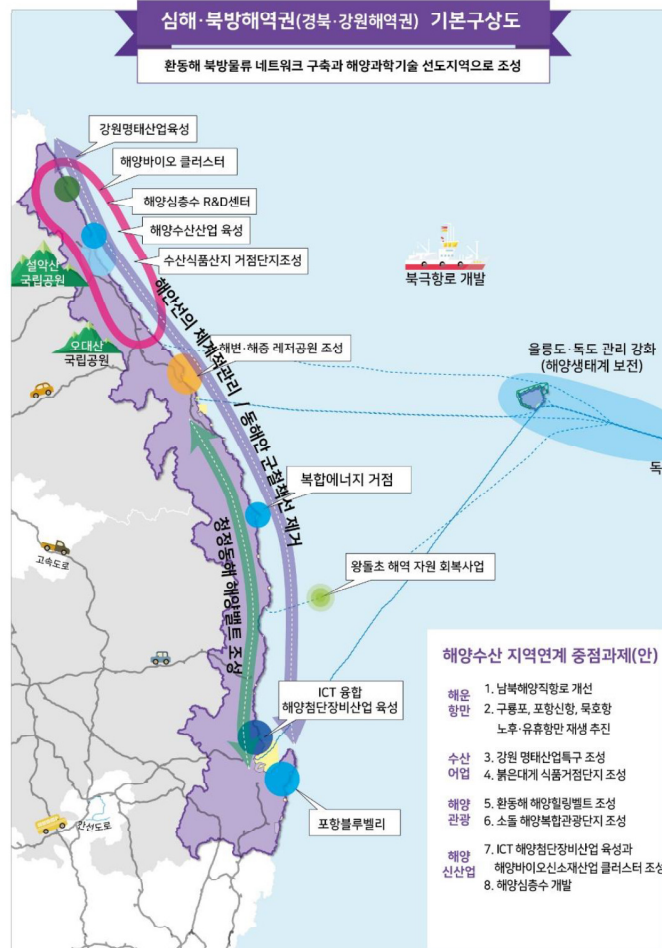


심해·북방해역권

-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 등 북방물류기지로 지리적 입지 확보
- 북극항로 등 유라시아 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 수행 가능
- 해양심층수 등 해양 물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광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분포
- 산업·에너지 특화 항만과 산업단지 등 조성
- 해수욕장, 일출명소, 마리나, 해양레포츠, 바다 낚시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분포



35/40



36/40

- 제주 특유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해양 자연경관 및 해양생태·문화유산 간직
-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 이미지 형성
- 해양자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풍력산업, 치유산업 등 해양신산업의 다각화 추진



내륙해양영토권 (육상내수면) 기본구상도

내수면 관광·어업 활성화를 통한 내륙 해양수산력 증진



39/40

감사합니다.

Q & A

최 지연
(jychoi@kmi.re.kr)

발제 4.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발전전략

이희수 교수
(중앙대학교)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발전전략

2017. 10. 11. (수)

중앙대학교 대학원장/교육학과 교수 이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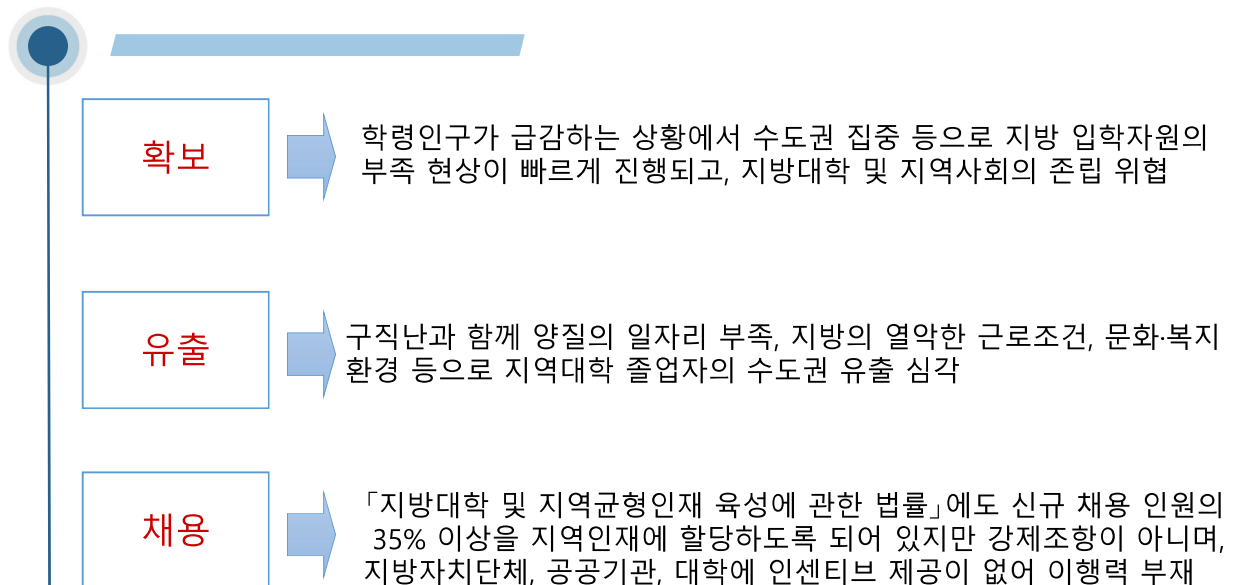
I. 지역인재양성

모든 길은 협치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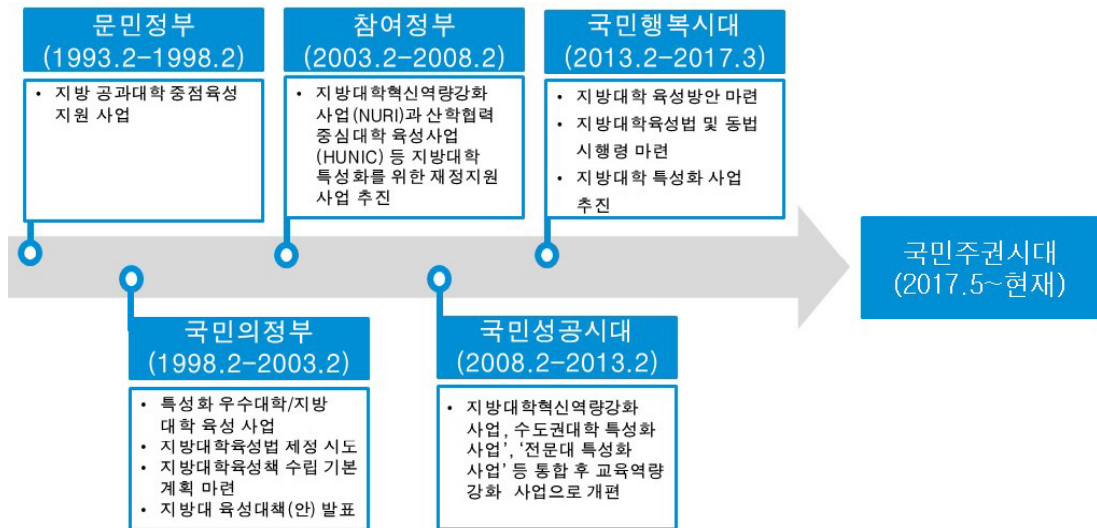
3

지역대학의 입학자원 확보, 유출, 채용이 심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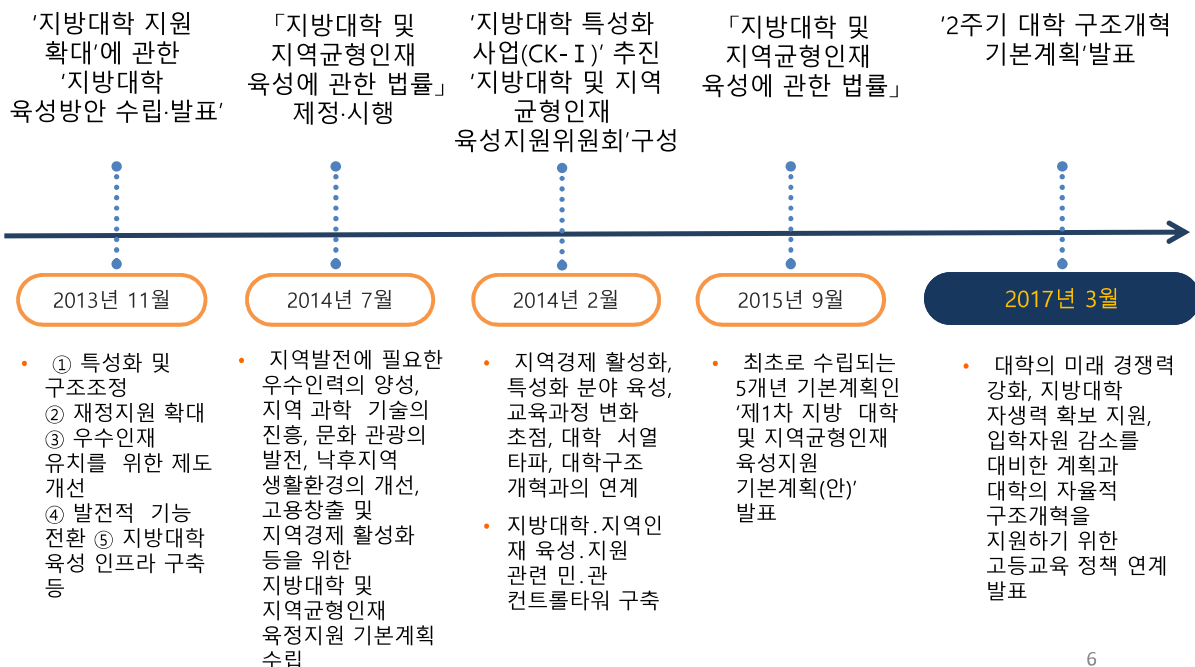
4

지역대학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습니다



5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대학-산업-인재가 상생하는 창조지역사회

목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

내용

1.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교육 기회 확대:

우수 지역인재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2. 대학의 지역사회 수요 맞춤 교육 강화:

지방대학이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확대, 지역 산업 맞춤형 대학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

3.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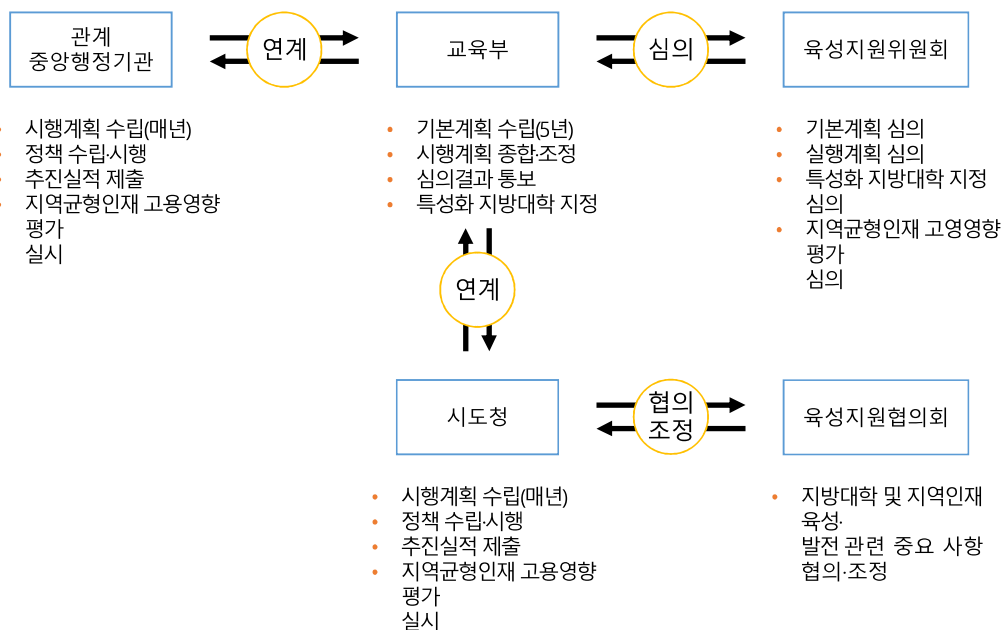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임용·채용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지역인재의 보다 용이한 사회 진출 지원

4. 대학 인재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산업) 활성화:

지역 혁신 거점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행정 여건을 개선하여 대학·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산업) 활성화

7

지방대학육성 및 인재양성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상의 시행 성적표입니다

제1조 목적

-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
-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

책무 이행 현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세종, 광주, 충남, 경북의 조례 미제정

* 기초자치단체 중 동해시, 전주시, 청주시 조례 제정

9

II. 지역발전 전략

문재인 정부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입니다.

- 1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지방분권 실현
- 2 지방의 재정자립이 실현,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3 주민참여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4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 5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 6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 7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 스마트고속도로로 전환
- 8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11

문재인 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국정과제'입니다

국정목표	전략	국정과제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전략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전략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12

문재인 정부의 지역대학 관련 예산도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도 고등교육 전체 예산은 9조 4,417억 원

대학교육 역량강화의 예산은 1조 8,786억 원

지역대학과 관련된 지방대학 육성사업(R&D)의 예산은 1,518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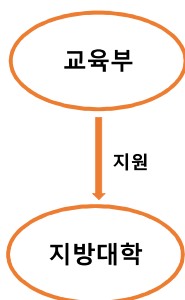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1,357억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1,602억원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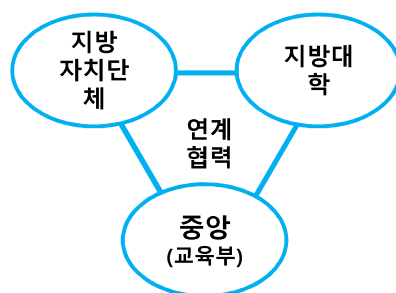
13

지방대학 및 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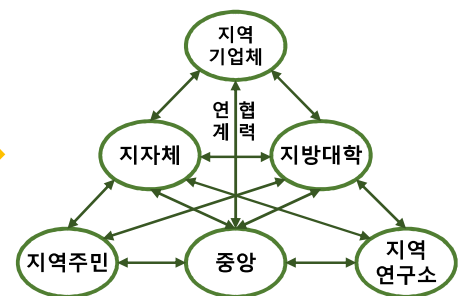
1세대



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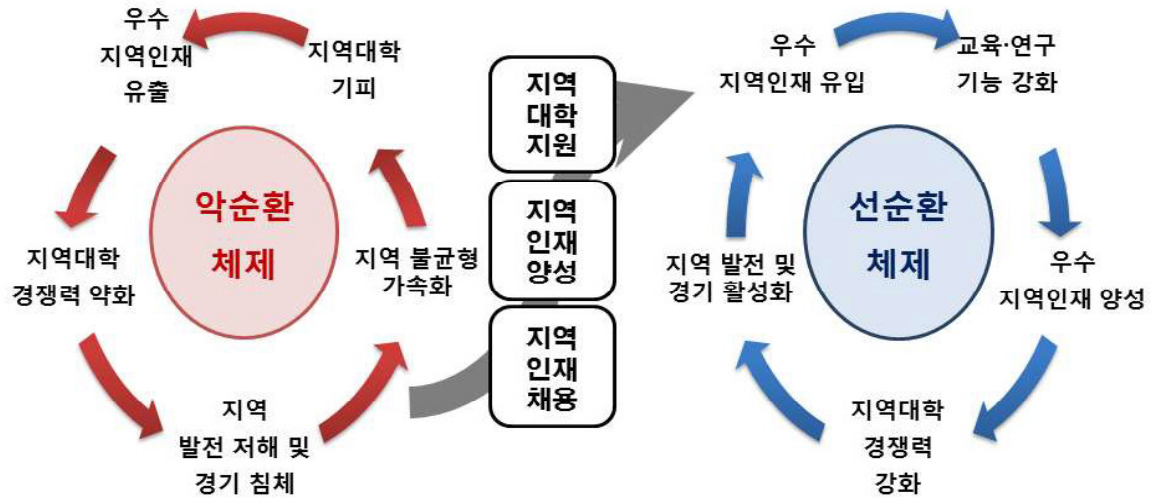


3세대



14

지역대학은 삶의 근원인 지역의 자산으로 선순환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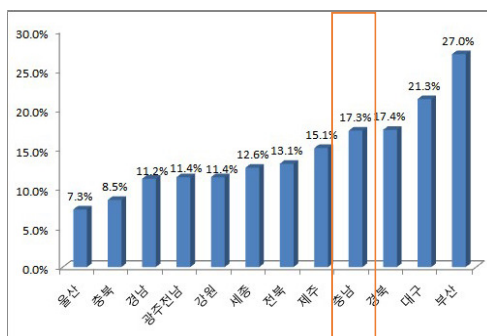
15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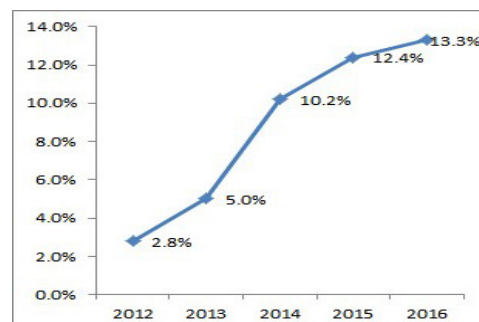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도입,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현황(2016년, %)】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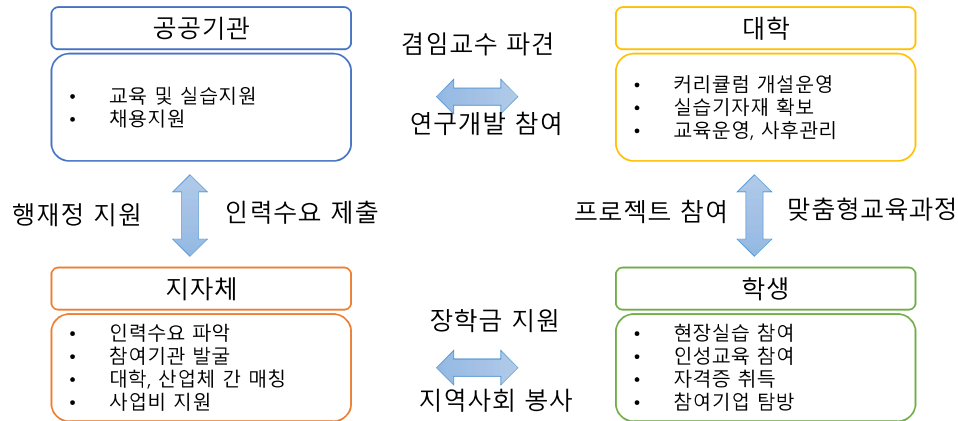


16

지역인재를 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

-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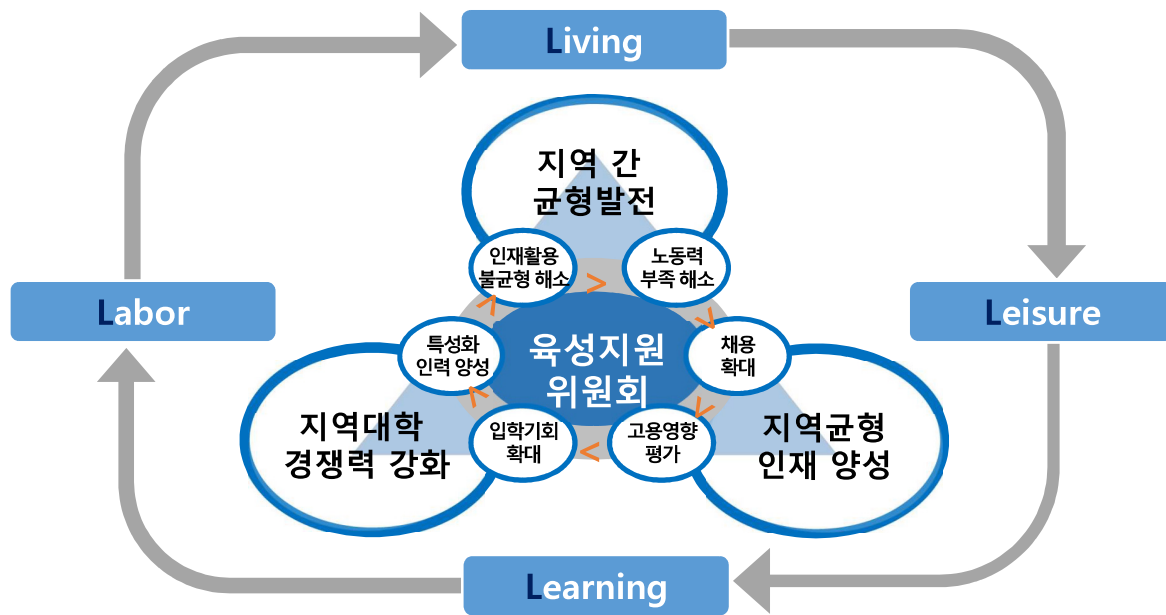
한국형 COC+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 명칭	지의 거점정비사업(대학COC사업)	지(地, 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 (지의 거점 COC+)
사업 목적	• 지역의 니즈와 대학의 시드(교육·연구·사회공헌)의 매칭에 의한 지역과제의 해결	• 지방의 대학군과 지역의 자치체·기업이나 NPO, 민간단체 등이 협동하여 지역산업을 스스로 일으키는 인재 등 지역을 담당하는 인재육성을 추진
최종 목표	• 지역재생·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대학의 형성	• 젊은 층 인구의 도쿄 일극집중 해소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적(全學的)인 활동이라는 것을 명확화 • 대학의 교육연구와 일체가 되는 활동 • 대학과 자치체가 조직적, 실질적으로 협력 • 신청 시점까지 지역 연계 실적 • 자치체의 철저한 지원·매칭펀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적(全學的)인 활동이라는 것을 명확화 • 대학의 교육연구와 일체가 되는 활동 • 대학과 지자체가 조직적, 실질적으로 협력 • 신청 시점까지 지역 연계 실적 • 자치체의 철저한 지원·매칭펀드방식 • 자치체 교육진흥기본계획, 신청 내용과 관계되는 자치체 기본계획 등에 신청 대학의 역할 기재 • 지역의 대학, 중소기업, 벤처기업, NPO 등과 연계
성과 지표	• 사업에 대한 연계 자치체의 평가	연계 자치체에 소재하는 기업 등으로의 취직률·고용창출 수 사업에 대한 연계 자치체의 평가 및 중소기업 등의 평가

자료: 文部科学省高等教育局(2015).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について~COCからCOC+へ~.

18

4L이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19

감사합니다.

발제 5.

지역R&D혁신체계 개선방안

김성진 교수
(호남대학교)

지역 R&D 혁신체계 개선방안

2017.10

호남대학교 김성진 교수

Contents	Page
I. 지역 R&D 혁신체계 현황	1
II. 지역 R&D 혁신체계의 문제점	7
III. 환경 변화	14
IV. 개선방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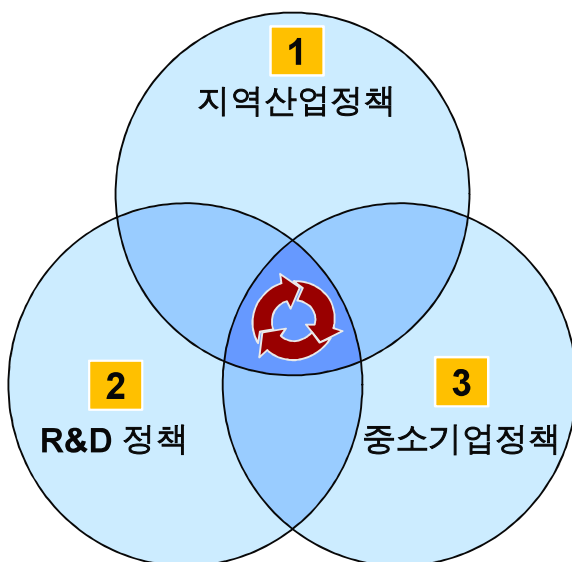
과거 정부에서의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중앙부처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상대적인 위상이 악화 되었음

	배경 및 목표	주요정책																	
MB정부 (2008~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년)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2009~2013)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박근혜정부 (2013~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5+2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거버넌스 실패로 유명무실화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수도권 규제 완화, 혁신도시 추진 지체 등 균형발전 위상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 수립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지역(행복)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 보장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생활권 중심의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체감형 지역발전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미약지역 일자리 위기대응 부족, 균형발전정책 후순위 설정 등 한계																	
지역투자 계획 및 규모	<table><tr><th></th><th>'15</th><th>'16</th><th>'17</th><th>계</th></tr><tr><td>투자 계획(5개년 계획, 조원)</td><td>33.4</td><td>33.9</td><td>33.8</td><td>101.1</td></tr><tr><td>실제 투자(시행계획, 조원)</td><td>30.5</td><td>31.3</td><td>29.5</td><td>91.3</td></tr></table>					'15	'16	'17	계	투자 계획(5개년 계획, 조원)	33.4	33.9	33.8	101.1	실제 투자(시행계획, 조원)	30.5	31.3	29.5	91.3
	'15	'16	'17	계															
투자 계획(5개년 계획, 조원)	33.4	33.9	33.8	101.1															
실제 투자(시행계획, 조원)	30.5	31.3	29.5	91.3															

2

본 발표의 대상이 되는 지역 R&D 혁신체계는 지역산업정책, R&D 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이 통합되는 영역으로서 향후 개선방안 도출의 주요 영역

지역 R&D 혁신체계 구성요소



구성요소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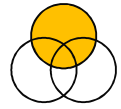
1.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적 위치인 지역의 전략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발전 계획
 • 산·학·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2. R&D 정책은 과학기술체계를 의미하며 지역 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및 응용연구기관과 이들에 설치된 응용연구시설물의 집합체에 의하여 실현되는 지역의 과학기술진흥계획
3. 지역중소기업정책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혁신기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R&D를 위한 지원으로 기업지원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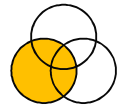
지역산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산업발전계획은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였으나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수행



구분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시기	2014~2018(매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조정(매년 수립)
대상	14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제외)
법적근거	-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관	지역기업, 연구소, 대학, 테크노파크, 지역발전위원회
수립주체	산업부+시도(시도 단체장이 이끄는 산업발전총괄위원회 구성) (산업부 계획)
수립절차	시도별 민관 공동위원회→지역경제위원회(차관급) 의결 (정책위 의결 후 지역위 보고)
지향점	지역산업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추진과제	-지역특화발전 지원 -지역 맞춤형 지원 -산업육성발전 주요내용 1. 산업육성 포트폴리오 작성(고용/생산) 2.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3. 기술인프라(연구장비 등) 활용률 제고 4. 산업기술인력의 수요-공급 mismatch 해소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를 확대) 5. 대표산업 집적화(산업단지, 집적지 등)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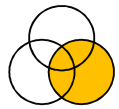
R&D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이 되며 국가 및 지역의 R&D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설정



구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시기	2013~2017(매 5년마다, 현재 4차 계획 수립 중)
대상	17개 시·도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수립주체	과기정통부+각 지자체+관련부처(범부처계획)
수립절차	과기정통부(총괄), 지자체(부문)별 계획수립 후 국과심(지역협의회→국과심 본회의)확정
지향점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지역특성화 과학기술 역량 제고
세부추진과제	1. 지역주도형 R&D 사업기반 확충 2.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3. 중앙·지역의 역할분담 및 국제협력 강화 4. 지역 R&D 추진체계 개선 및 재정비 5. 지역 R&D 투자 특성화·내실화 6.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7.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5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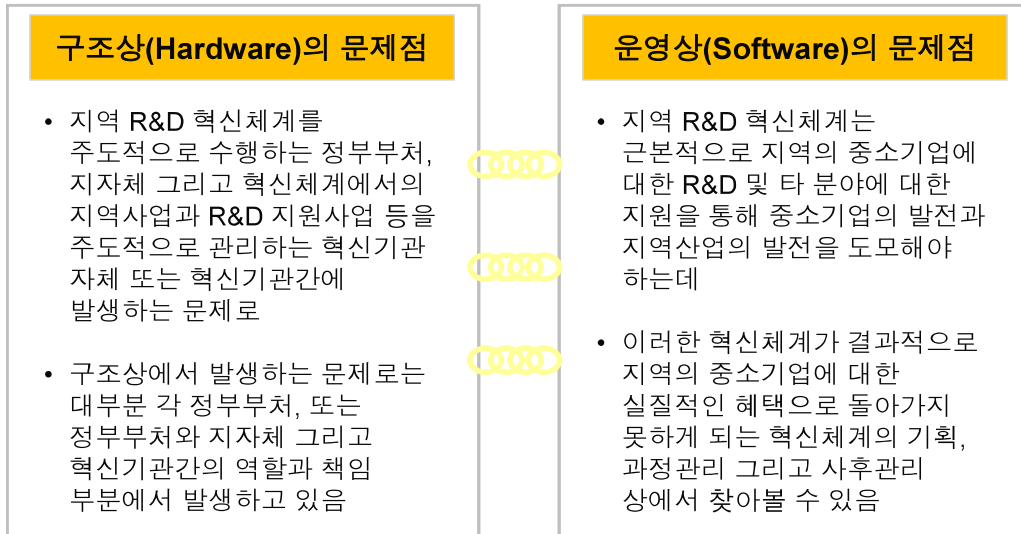
구분	중소기업 지원정책 구분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금융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확실성과 위험이 큰 시장실패 영역에 대하여 정부가 자금배분을 보완해주는 제도로, 특히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신용보증기금, 은행 및 투자조합 등과 같은 대리기관을 통해 금융지원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한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자본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기술개발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R&D 투자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구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에 의해 개발된 기술 혹은 그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정부가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법 제도적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수립 등 유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관련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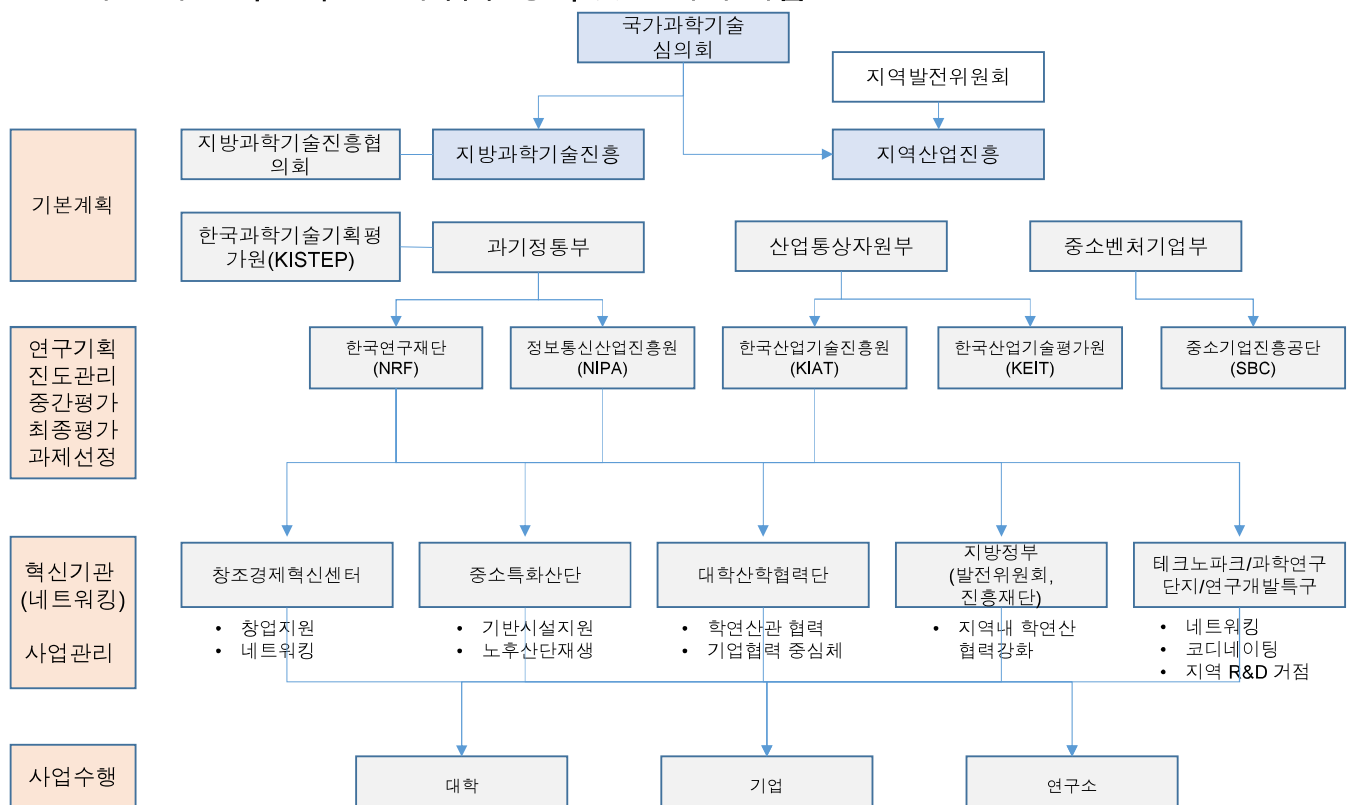
Contents	Page
I. 지역 R&D 혁신체계 현황	1
II. 지역 R&D 혁신체계의 문제점	7
III. 환경 변화	14
IV. 개선방안	19

7

지역 R&D 혁신체계의 문제점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자체 그리고 혁신기관의 구조적 문제점과 혁신체계가 기획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구분



현재 가장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복잡한 혁신기관과 함께 이들에 대한 Governance 문제 그리고 혁신기관간의 업무 중복 및 연계가 미흡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R&D 사업의 중복성과 복잡성 그리고 많은 혁신기관간의 업무 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처내 또는 부처간의 R&D 사업의 중복성
- 혁신기관 Governance의 복잡성
- 각 혁신기관간 지원 연계 기능 미흡
- 지역혁신체계의 Leadership 부재
- 지방중소기업의 제기하는 문제점
 - 지자체 정책과 중앙부처의 정책간에 Conflict가 존재하므로 지역정책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지자체 또는 지역 혁신기관이 주도
 - 지자체의 혁신기관 등이 성과를 내려고 해도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하고 성과에 대한 기준이 모
 - 혁신기관에 대해 자생력 확보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게 필요
 - 혁신기관이 운영자금 확보하기 위해 핵심역량이 아닌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기때문에 혁신기관간의 업무 중복은 당연한 것임
 - 혁신기관의 경우 특정 분야의 국책연구소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때문에 다방면의 사업을 폭넓게 진행하고 이러한 방식은 또 다시 전문성을 약화

10

R&D 지원을 위한 기획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접근이 많고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반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단기 대중적 정책의 고착화 및 금융정책적 접근이 빈번
- 지역 정책 수립에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부재
- 지역주도적 R&D 추진을 위한 R&D 기획·관리 역량 미흡
 - 지역R&D 사업의 기획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체계 구축 미흡
 - 중앙정부가 기획하는 국가R&D와 지역R&D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 부재
- 혁신형기업과 단기 실용기술개발에 편중되기 때문에 특정기술의 단순 도입 및 활용단계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
- 지방중소기업의 제기하는 문제점
 -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이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적정기술 등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
 - 기초 R&D 사업은 연구소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고 기업은 응용(실천화) R&D 사업의 참여기회 제공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데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혁신기관이나 기업이 지역 R&D의 자율 확보가 어려움
 - 연구개발부터 마케팅 및 시장 확보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
 - 영업역량 확대를 위해 영업스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사업지원 필요

11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기관의 역량이 부족

- 각 혁신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가 기업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
- 지역기업들의 R&D 사업을 효과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함
- 기획의도가 좋아도 운영에 있어 기업의 Needs를 반영하지 못하여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낮음
- R&D 사업 진행 중 혁신기관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 기능이 있어야 함
- 지방중소기업의 제기하는 문제점
 -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이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적정기술 등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
 - 기초 R&D 사업은 연구소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고 기업은 응용(실천화) R&D 사업의 참여기회 제공
 -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데 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혁신기관이나 기업이 지역 R&D의 자율 확보가 어려움
 - 연구개발부터 마케팅 및 시장 확보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
 - 영업역량 확대를 위해 영업스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사업지원 필요

12

혁신기관의 운영하는 지원정책의 변화가 빈번하고 지속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기관의 역량이 부족

- 혁신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의 변화가 심하고 지속성이 부족
-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매출액 등 성과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지표가 부족
- 참여기관이 R&D 지원사업을 성장을 위한 기반이 아니라 인건비 확보의 수단으로 여김
- 사후관리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혁신기관의 인력 및 역량 부족
- 지방중소기업의 제기하는 문제점
 - 매출액 등 성과 중심의 지표로 R&D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과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중도에 폐기되는 경우가 있음
 - 행정 서류 중심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R&D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교수 위주의 심사 위원들이 많음
 - 국책연구소나 혁신기관의 성과물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동적이고 정보 제공에 미온적임
 - 국책연구소나 혁신기관의 성과물의 기술가치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받는데 두려움이 있음

13

Contents

Page

I. 지역 R&D 혁신체계 현황	1
II. 지역 R&D 혁신체계의 문제점	7
III. 환경 변화	14
IV. 개선방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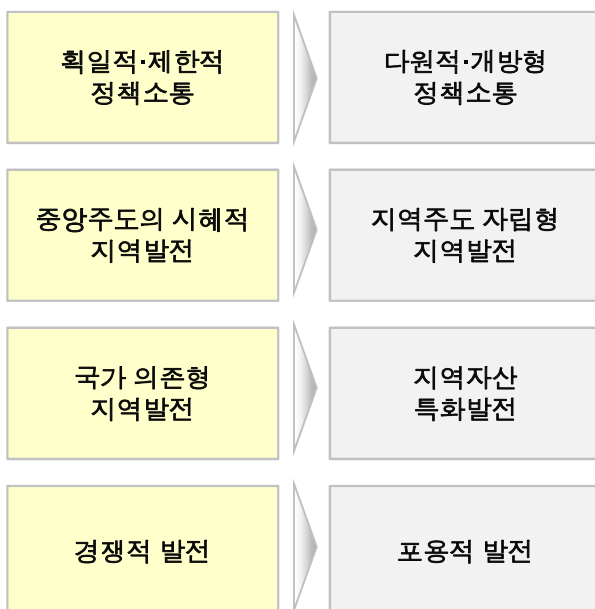
14

환경 변화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새정부는 현재까지의 중앙주도적인 지역발전에서 지역주도의 자립형 지역발전 등 지역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5

이러한 지방분권은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발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 선진국에서도 중앙주도의 국가발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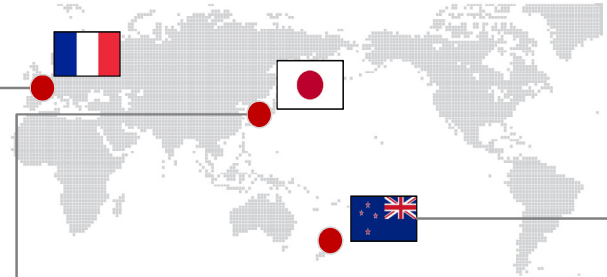
지방분권의 필요성 및 주요국의 지방분권 계기

현재 문제점

-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 집중 비대화
- 중앙정부의 통제와 보호로 혁신의 저하
- 지방 재정자립도 하락과 중소기업의 활력 저하

지방분권화 추진

-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화 및 플랫폼화
- 지방정부간의 자율과 경쟁으로 국가 혁신 (연구원 등 산하기관별 경쟁)
- 지방 재정 자립추구와 중소기업 법인세 등의 지방세화로 지역 활성화



지역사회의 요구 및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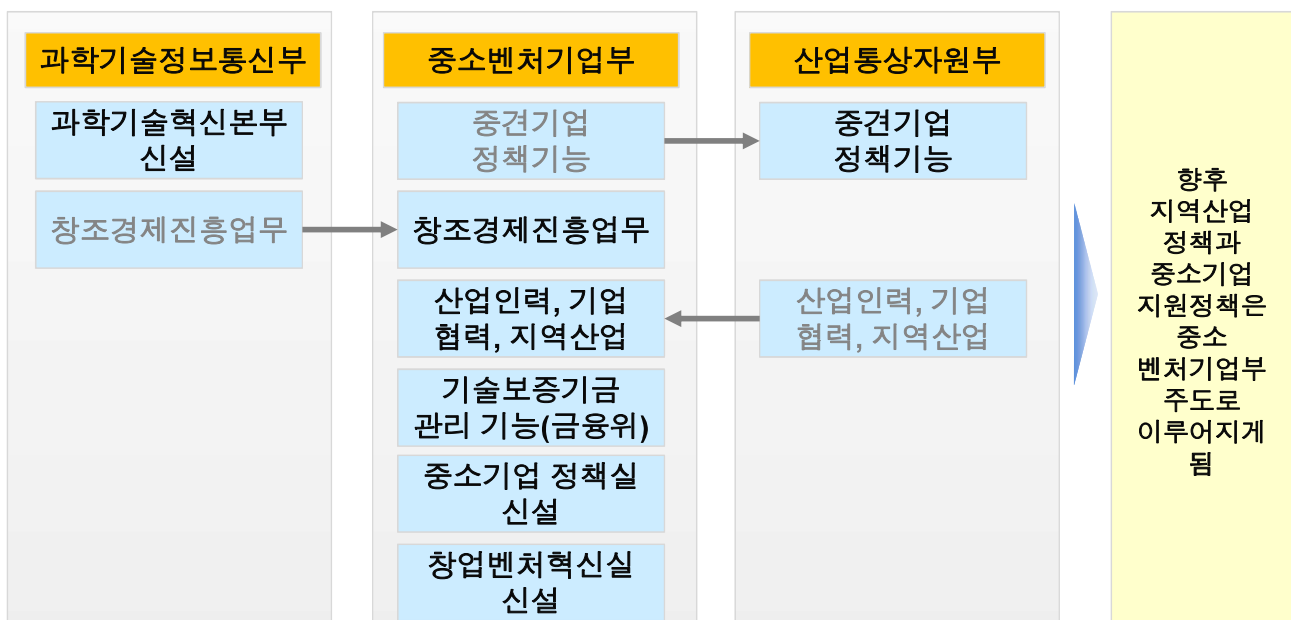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인한 **경제위기**,
정치적 급진주의 등(1975)

재정 재건 구축과정의
재정위기대안으로 행정개혁 제기
보조금을 삭감해도 견딜 수 있는 지방분권으로 시작

16

새정부의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향후 R&D의 큰 흐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이루어지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주도적인 정책 수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

조직개편 내용



17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Mega Trend**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개발이 필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방향성

산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전반에 자동화가 확산, 제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플랫폼 생태계 선점에 따라 승자독식 심화 가능성 *다품종 대량맞춤생산 확산, 자동화·초연결성으로 토지, 교통 등 지역적 입지요인에 대한 의존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전략산업이 제조업 기반인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에 집중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창출 등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나, 실업 등에 따른 소비 위축, 세수 감소 및 복지비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간 부의 격차, 근로자간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 심화 예상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신기술 습득, 전직 등을 하지 못한 취약 계층 다수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미래 산업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생태계 구축에 집중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로봇이 수작업 등 기존 일자리를 대체, 창의·감성 업무 등 高부가가치 업무로 재편, 일자리 총량은 감소 전망 우세 '20년까지 세계 15개 경제권 510만개 감소(710만개 소멸, 200만개 창출, WEF)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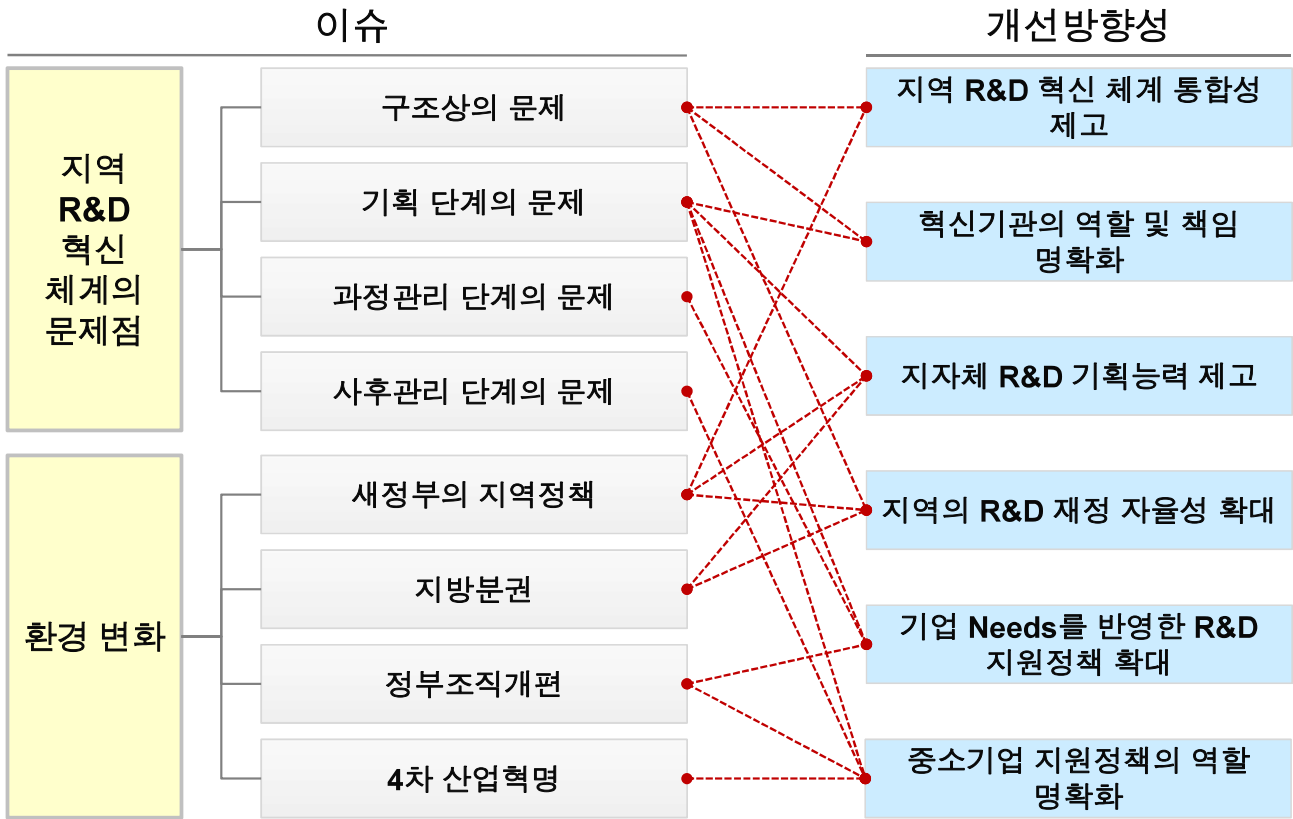
Contents

Page

I. 지역 R&D 혁신체계 현황	1
II. 지역 R&D 혁신체계의 문제점	7
III. 환경 변화	14
IV. 개선방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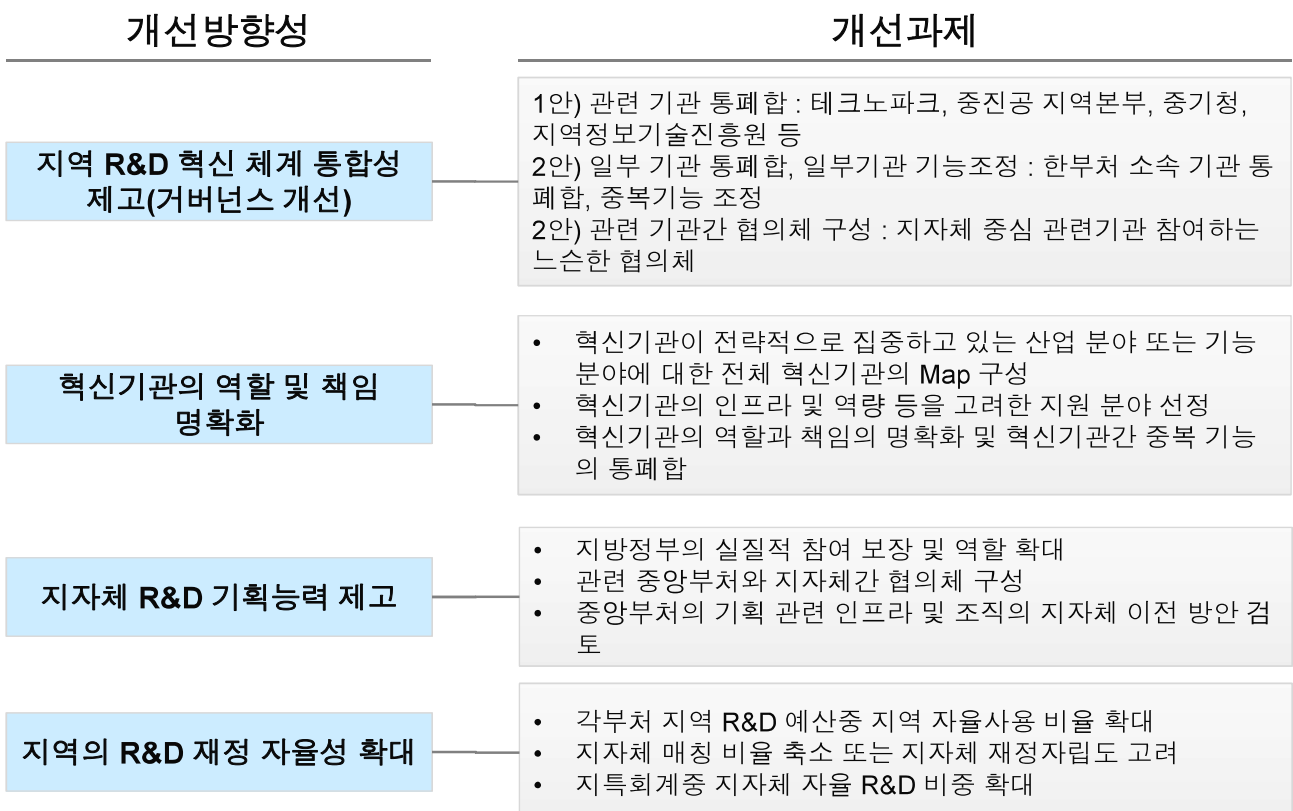
19

지역 R&D혁신체계의 문제점과 환경변화를 통해 개선방향성을 도출



20

개선방향성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21

개선방향성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개선방향성

기업 Needs를 반영한 R&D
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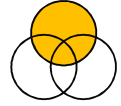
- 지원정책 개발 단계에서 지역별 중소기업 Needs 파악을 위한 프로세스 상설화
- 지원정책에 있어 기업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정책의 효과성 확대
- 지원정책이 종료 된 후 기업, 혁신기관 및 지자체 등을 통한 정책의 360도 평가 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역할
명확화

- 고용증대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의 축소
-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적 목적이 혼재된 단기 지원 정책 개발 지양
-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지자체별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명확화

End of Document

지역산업정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정책 목표	지역전략산업중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경제활성화	9개 지역 : 지역산업활성 화와 지역균형발전 대안 4개 지역 : RIS 구축, 산업클러스터 강화 국가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지역경쟁력 제고	주민체감형 지역 발전 주민체감 지역발전
프로그램	4개 지역 1단계 전략산업	9개 지역 1단계 4개 지역 2단계 전략산업 특화산업	광역선도사업 광역경제권(5+2) Post 4+9개 지역 선도산업 전략산업 연고산업	지역행복생활권(56) 시도특화발전 경제협력권(협업) 주력산업 협력산업 연고산업
정책 수단	인프라조성 기술개발 수도권 규제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전략산업기획단 공공기관 지방분산 수도권 규제	R&D 비R&D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R&D 비R&D 규제개선 규제개선
전략 산업	1시도 1개 원칙	시도별 2~3개 시도별 4개(균특법)	권역별 2개(1단계) 권역별 4개(2단계)	시도 주력산업 5개 시도 협력산업 2~3개